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71-090008-14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Policy
Research
Institute
Analysis of
Annual
Activitie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연구내용의 충실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정책연구 · 개발 활동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명지대 김형준 교수(교양학부)와 김도종 교수(정치외교학과)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Contents 목차

Part 1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 3

Part 2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57

Part 3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보고 ····· 125

Part 4
자유선진당 자유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보고 ····· 213

Part 5
친박연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251

Part 6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277

Part 7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325

Part 8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335

PART _ 1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Ⅰ. 평가 추진배경과 평가 근거 ····· 5
1. 평가 추진배경 / 5
2. 평가 근거 / 6

Ⅱ. 정책연구소 활동평가 ····· 8
1. 정책연구소의 수입 · 지출 내역 / 8
2.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분류 / 11
3. 연구 · 정책개발의 분야별 활동실적 / 16
4. 연구 · 정책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 21
5. 연구주체별 분석 / 25
6. 간행물 등 자료발간별 분류 / 27

Ⅲ.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언 ····· 30
1. 정책연구소의 현실과 문제점 / 30
(1)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한계
(2) 정책연구소의 의미와 역할
2. 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 / 39
(1) 한국형 정책연구소 모델 창출
(2) 운용의 자율성 확보
(3) 전문성 강화

Ⅳ. 결어 ····· 51

〈참고 문헌〉

Ⅰ. 평가 추진배경과 평가 근거

1. 평가 추진배경

계속되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각 정당에게 기존의 '조직중심'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위기감을 갖게 하였다. 중앙당, 지구당 체제를 고수하던 정치권은 고비용비효율정치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정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각종 부정적인 측면이 국민과 정치권 사이에 불신과 무관심이라는 관계를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불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각 정당은 17대 국회에서 정쟁보다는 합리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기존의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고비용비효율정치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자생적 노력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통해 기존 정당이 가지고 있던 구조, 즉 대통령 후보가 당 총재를 겸임함으로써 당을 장악하였던 관행의 변화도 정책연구소가 시작될 수 있었던 큰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2. 평가 근거

지난 2004년 3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정책연구소 설립과 활동의 안정적인 물적 토대가 제한적이나마 마련되었다. 개정된 정당법 제29조 3항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었다. 그 동안 각 정당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정책 개발보다는 당직자들에 대한 급여 등 당의 운영경비로 대부분 사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라는 비판에 직면하였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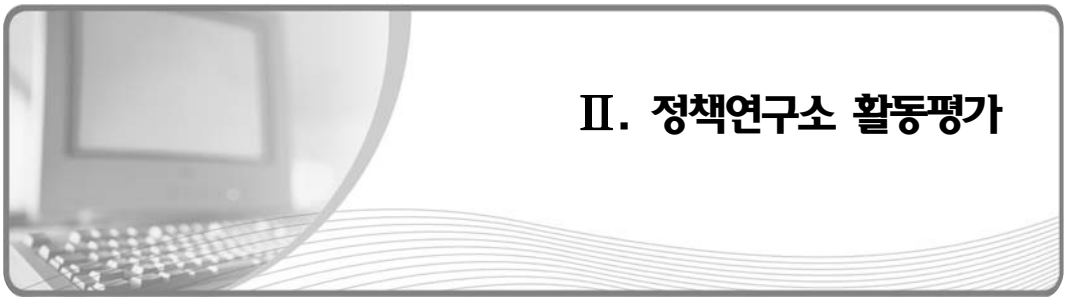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 ·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 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100분의 10이상은 시 · 도당에 배분 ·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외에 정당법 제35조에 의해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매년 연간 활동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규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책 연구소의 활성화와 정책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정책연구소 활동평가

1. 정책연구소의 수입 · 지출 내역

(1) 2008년

아래의 〈표 1〉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총 7개로서 이들은 지난 해 총 78억 5,7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62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약 20%의 잔액을 남겼다.

전체 수입총액 중 국고보조가 대부분인 정당지원금이 73억 5,300만원, 전년 이월금 및 그 밖의 수입이 5억 8,400만원으로 당해 수입의 94% 가량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법정 수입원인 당비 및 기타 수익사업에서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잔액비율 20%는 전 해인 2007년의 20%와 동일한 수준이나, 2008년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신설된 정책연구소들이 있어 지난 해 활동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다소 호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지출부분은 경상운영비인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와 정책개발비를 포함한 정치활동비, 그리고 지원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44억 7,000만원, 정치활동비에 18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에서 각각 71%와 29%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활동비 중 여성정치 발전 항목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전체 연구소에서 전혀 없으며, 일부 연구소는 정책개발비의 집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소들이 연간활동 실적보고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지출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먼저 지나치게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수입원의 다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부분에서는 기본경비는 10% 가량 축소하고 정치활동비는 10% 가량 증대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출부분에 있어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책연구소의 예산집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2008년 정책연구소의 수입 · 지출 내역 분석

(단위:백만원)

내역 / 연구소	연구원	직 원	수 입				지 출	잔 액	잔액 비율
			전년 이월	기타 수입	그 밖의 수입	합계			
여의도연구소 (한나라당)	53	3	416	4,042	0	4,458	3,819	640	1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	54	0	0	1,791	8	1,799	1,360	439	24%
자유정책연구원 (자유선진당)	14	11	0	591	11	602	498	103	17%
미래전략 개발연구소 (친박연대)	0	10	0	60	0	60	60	0	0%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동당)	11	0	68	560	1	629	367	263	42%
사람희망 정책연구소 (창조한국당)	3	1*	0	166	0	166	92	74	44%
미래상상연구소 (진보신당)	6	0	0	143	0	143	98	45	31%
합계	**141**	**25**	**484**	**7,353**	**20**	**7,857**	**6,294**	**1,564**	**20%**

* 사람희망정책연구소의 경우 인턴 1명을 비고에 기재하였음. (직원 0, 인턴 1)

* 백만원 미만 반올림; 이에 따라 합계에서 ±1의 오차발생

(2) 2005~2008년 추이

아래의 〈표 2〉는 지난 4년간 정책연구소들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수입은 기간 중 큰 변화가 없었으며 대부분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 잔액 비율이 정당연구소 출범 초기에 비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연구소들이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연구인력의 경우 2005년 106명에서 2008년 141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그 배경은 정책연구소들의 인력확충과 함께 신생 정당의 출현으로 연구소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2005~2008년 수입 ·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내 역 \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 구 원		106	107	143	141
수입	정당 지원금	8,778	8,960	9,101	7,353
	기 타 수 입	262	697	1,541	20
	전년도이월금	1,023	1,915	0	484
	합 계	10,063	11,572	10,642	7,857
지 출		7,502	9,446	8,546	6,294
잔 액		2,561	2,126	2,096	1,564
잔액비율		25%	18%	20%	20%

2.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분류

(1) 2008년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법제화한 가장 큰 이유는 정당정치를 정책대결로 유도함으로써 정당간 과도한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정당화를 통한 정치

선진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가장 큰 목표는 정책의 산출이라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6개 영역으로 분류된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 중 연구·정책개발 실적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책연구소 법제화의 취지에 부합되는 현상이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활동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정책개발에 이어 정책연구소들은 토론회 개최와 교육·연수활동이 각각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된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의 토론회 개최 또한 정책연구소 고유의 기능 중 하나로 이의 활성화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원이나 지지자, 그리고 관심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정치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정책연구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어서 정책홍보 15%, 간행물 등 자료발간 10%, 기타 활동 10%의 순으로 활동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활동형태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분포는 활동건수 위주의 산술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실제 내용에 있어 산출된 정책들이 정책화나 입법화로 연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정책연구소가 각 정당의 정강기조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정책개발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해 활동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별로도 실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활동실적을 기록한 연구소가 310건이었던 반면 가장 적은 실적은

11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연구소 규모의 차이에 어느 정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비슷한 연구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소를 비교해 볼 때 전자는 116건의 실적을 보고한 반면 후자는 310건의 실적을 기록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소의 수입이 민주정책연구소에 비해 거의 2.5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인력과 예산에 걸맞지 않게 활동이 저조했던 사례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연구소의 목적이 단순한 정책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활동내용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여론화를 시도하는 적극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들의 지난 해 정책홍보 건수는 모두 35건에 그쳐 크게 미흡하다고 하겠다.

〈표 3〉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분류 분석

활동형태 \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자유정책 연구원	미래전략 개발 연구소	진보정치 연구소	사람희망 정책 연구소	미래상상 연구소	계
연구 · 정책 개발실적	54 (47%)	68 (22%)	26 (40%)	17 (43%)	23 (45%)	1 (9%)	18 (24%)	207 (31%)
토론회 등 개최실적	29 (25%)	63 (20%)	8 (12%)	1 (3%)	8 (16%)	5 (46%)	1 (1%)	115 (17%)
교육 · 연수 활동	3 (3%)	67 (22%)	4 (6%)	2 (5%)	7 (14%)	2 (18%)	28 (37%)	113 (17%)
정책홍보	4 (3%)	59 (19%)	7 (11%)	4 (10%)	5 (10%)	1 (9%)	17 (23%)	97 (15%)
간행물 등 자료발간	7 (6%)	22 (7%)	11 (17%)	14 (36%)	8 (15%)	2 (18%)	1 (1%)	65 (10%)
기타 활동	19 (16%)	31 (10%)	9 (14%)	1 (3%)	– (0%)	– (0%)	10 (14%)	70 (10%)
계	**116 (100%)**	**310 (100%)**	**65 (100%)**	**39 (100%)**	**51 (100%)**	**11 (100%)**	**75 (100%)**	**667 (100%)**

정책연구소들의 실적보고와는 별도로 이들의 언론매체 노출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4〉에 나타나듯이 일간지를 중심으로 하는 노출빈도는 지난 2008년 총 255건이다. 그중 여의도연구소가 196건을 차지하여 전체의 7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 연구소가 전체 일간지 보도 건수의 3/4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연구소들의 대언론매체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정책연구소 중 2개 기관은 지난 한 해 언론매체에 단 한번도 기사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책연구소별 매체 노출 빈도 분석

연구소 / 보도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자유정책 연구원	미래전략 개발 연구소	진보정치 연구소	사람희망 정책 연구소	미래상상 연구소	계
기 사	369	90	–	–	37	1	10	507
사 설	13	1	–	–	1	–	–	15
계	**382**	**91**	**–**	**–**	**38**	**1**	**10**	**522**

검색 사이트 : http://www.kinds.or.kr/

매 체 : 서울지역 종합일간지(10개 지)

[수록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검 색 범 위 : 제목 + 본문

검 색 기 간 :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2) 2005~2008년 추이

〈표 5〉 기간 중 활동형태별 실적

활동형태 \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 · 정책 개발실적	223(32%)	315(37%)	176(37%)	207(31%)
토론회 등 개최실적	215(30%)	279(33%)	80(16%)	115(17%)
교육 · 연수 활동	70(10%)	57(7%)	65(14%)	113(17%)
정 책 홍 보	37(5%)	71(9%)	35(7%)	97(15%)
간행물 등 자료발간	111(16%)	79(9%)	60(13%)	65(10%)
기 타 활 동	53(7%)	41(5%)	63(13%)	70(10%)
계	**709(100%)**	**842(100%)**	**479(100%)**	**667(100%)**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나듯이 지난 2005년 709건, 2006년 842건, 2007년 479건, 2008년 667건으로 최근 2년간 활동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주목적인 연구·정책개발 실적은 연평균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본래기능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건수가 매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연구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채 정치상황과 일정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책연구소들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기간 중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5년과 2008년은 각각 보도횟수가 528건, 52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265건, 255건으로 2005년과 2008년의 반 이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또한 대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계획과 홍보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기간 중 매체노출빈도

연 도 / 보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보도횟수	528	265	255	522

3. 연구 · 정책개발의 분야별 활동실적

(1) 2008년

아래의 〈표 7〉은 연구·정책개발 분야의 활동실적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이다. 분야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와 기타 등 총 17개로 구분하였다. 정책연구소의 실적보고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분류와 다소 상이한 분야로 실적을 보고하였는데 연구팀은 상이분야를 재차 상임위원회와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의 임의성이 다소 개진되었음을 밝힌다.

〈표 7〉 연구·정책개발의 분야별 활동실적 분석

분야 \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자유정책 연구원	미래전략 개발 연구소	진보정치 연구소	사람희망 정책 연구소	미래상상 연구소	계
교육과학기술	1	5	2	1	–	–	4	13
국 방	–	–	–	–	1	–	–	1
국토해양	2	6	1	2	5	–	1	17
국회운영	–	–	–	–	–	–	–	0
기획재정	14	15	5	–	4	–	3	41
농림수산식품	4	–	3	2	1	–	1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5	1	3	–	–	–	–	9
법제사법	1	–	–	2	2	–	1	6
보건복지가족	–	2	2	2	–	–	4	10
여 성	–	–	–	–	–	–	–	0
외교통상통일	11	7	3	2	5	–	–	28
정 무	7	27		3	1	–	–	38
지식경제	4	1	2	1		–	–	8
행정안전	2	–	2	1	4	–	2	11
환경노동	3	4	2	1		1	2	13
정 보	–	–	1	–	–	–	–	1
기 타	1	–	–	–	–	–	–	1
합 계	**54**	**68**	**26**	**17**	**23**	**1**	**18**	**207**

먼저 총 17개 분야 중 상위 3개 분야에 실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분야는 기획재정으로 41건의 연구·정책개발이 보고되었다. 그 다음 순으로 정무 38건, 외교통상통일 28건이었다. 이들 세 분야의 실적 107건은 총실적인 207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국정 우선순위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분야이므로 실적이 집중되어있다 하여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총 17개 분야들 중에서 상위 3개 분야가 연구·정책개발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집중이라 하겠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정치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운영 분야와 여성분야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예산의 15% 이상이 배정되어있는 국방 분야에 대한 실적은 단 한 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같이 업적이 아예 없거나 한 건에 그친 분야는 17개 분야 중 국방, 국회운영, 여성, 정보, 기타 등 모두 5개 분야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 중 교육과학, 복지, 국방분야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 보고서의 분류에 따른 이들 분야의 연구·정책개발실적은 24건에 그쳐 그 비중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앞의 분석은 정책연구소들의 연구와 정책개발은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국가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는 관계없이 정쟁적 요소가 많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연구소들이 여야간의 정쟁이나 정당들의 정무적 관심 현안들보다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2005~2008년 추이

정책연구소의 실적보고 분야가 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 중 정확한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나, 2005~2007년까지의 실적을 2008년 기준분야로 재분류하여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해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2005~2008년까지 4년 동안의 전체적인 실적도 역시 상위 3개 분야에 실적이 집중되어 있었다.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그리고 정무 분야의 실적이 582건으로 전체 실적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년 동안 1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인 하위 4개 분야, 즉 국회운영, 법제사법, 여성, 정보 분야는 모두 20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국회운영 분야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 상하위 7개 분야를 제외한 중간분야들은 분야 당 4년 동안 32건의 실적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정책연구소들의 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8〉 분야별 활동실적

분야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교육과학기술	15	10	8	13	46
국 방	12	8	2	1	23
국토해양	7	7	3	17	34
국회운영	0	0	0	0	0
기획재정	41	59	30	41	171
농림수산식품	2	2	2	11	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8	4	2	9	23
법제사법	2	2	0	6	10
보건복지가족	20	15	18	10	63
여 성	5	2	2	0	9
외교통상통일	53	70	32	28	183
정 무	32	95	63	38	228
지식경제	5	6	4	8	23
행정안전	14	9	7	11	43
환경노동	7	11	4	13	35
정 보	0	0	0	1	1
기 타	0	15	0	1	16
합 계	**223**	**315**	**176**	**207**	**921**

4. 연구 · 정책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1) 2008년

연구기간과 관련하여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1개월 이하의 초단기 과제, 둘째, 2~3개월의 단기과제, 셋째, 4~6개월의 중기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과제이다.

〈표 9〉 연구 · 정책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연구소 / 연구기간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자유정책 연구원	미래전략 개발 연구소	진보정치 연구소	사람희망 정책 연구소	미래상상 연구소	계
1개월 이하	41 (76%)	53 (78%)	24 (92%)	2 (12%)	8 (35%)	– (0%)	17 (94%)	145 (70%)
2개월 이하	10 (18%)	6 (9%)	– (0%)	– (0%)	11 (48%)	– (0%)	1 (6%)	28 (13%)
3개월 이하	3 (6%)	7 (10%)	2 (8%)	15 (88%)	2 (9%)	– (0%)	– (0%)	29 (14%)
4개월 이하	– (0%)	2 (3%)	– (0%)	– (0%)	– (0%)	1 (100%)	– (0%)	3 (1%)
5개월 이하	– (0%)	– (0%)	– (0%)	– (0%)	1 (4%)	– (0%)	– (0%)	1 (1%)
6개월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12개월 이상	– (0%)	– (0%)	– (0%)	– (0%)	1 (%)	– (%)	– (0%)	1 (1%)
합계	**54 (100%)**	**68 (100%)**	**26 (100%)**	**17 (100%)**	**23 (100%)**	**1 (100%)**	**18 (100%)**	**207 (100%)**

정책연구소들의 실적보고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간별 정확한 분류는 불가능하지만 연구팀이 추적하여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위의 〈표 9〉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과제들이 1개월 이하의 초단기 과제들로 총 207건의 과제 중 145건, 약 70%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단기과제가 57건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단기과제 이하가 정책연구소들이 지난 해 생산한 총과제 중 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기과제는 4건으로 2%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장기과제는 한 건 밖에 없었다.

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와 정책개발이 학술분야의 연구논문과는 달리 시의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초단기 및 단기과제가 전체의 97%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정책연구소를 법정기구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산출하여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정책대결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최대 정치현안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법의 경우 지난 2007년 제정 당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다. 당시 법안을 합의 처리한 현재의 여당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이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가운데 소속 정책연구소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극심한 대치상황은 어느 정도 완화시켰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각 정책연구소들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들을 가지고 연구소간 합동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면 법률개정안을 위한 최소공배수는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 만명의 고용과 실직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정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 하겠다.

이같이 초단기 및 단기과제에 실적이 집중된 배경은 정책연구소들이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없이 정치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수요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여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정책연구소 법정화의 근본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후 실적보고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지급에 앞서 연간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2005년~2008년 추이

2005~2008년 기간 중 정책연구소의 전체 실적은 1개월 이내의 과제가 전체 실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3개월 이내의 연구기간 과제로 확대한 단기 과제로 구분할 경우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연구소 설립의 취지가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대결의 유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들은 지난 2005년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된 이후 초단기 및 단기과제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개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6개월 이상의 과제수행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과제의 비중은 3%에 머물고 있다.

〈표 10〉 추진기간별 추이

연 도 / 연구기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 분	실 적
1개월 이하	175 (78%)	220 (70%)	106 (60%)	145 (70%)	초단기	646 (71%)
2개월 이하	31 (14%)	35 (10%)	23 (13%)	28 (13%)	단 기	195 (21%)
3개월 이하	10 (4%)	18 (6%)	21 (12%)	29 (14%)		
4개월 이하	2 (1%)	16 (5%)	10 (6%)	3 (1%)	중 기	50 (5%)
5개월 이하	1 (1%)	3 (1%)	5 (3%)	1 (1%)		
6개월 이하	– (0%)	9 (3%)	– (0%)	– (0%)		
6개월~12개월	3 (1%)	9 (3%)	3 (2%)	– (0%)	장 기	24 (3%)
12개월 이상	– (0%)	– (0%)	8 (4%)	1 (1%)		
기타 (~현재)	1 (1%)	5 (2%)	– (0%)	– (0%)	**소 계**	**915**
합계	**223(100%)**	**315(100%)**	**176(100%)**	**207(100%)**		

이 같은 현상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개월 이하의 과제수행을 통해 얼마나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냐 하는 내용의 충실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연구소들이 수행한 초단기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들이 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 및 운영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정한 정책개발의 기관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연구주체별 분석

(1) 2008년

아래의 〈표 11〉은 연구주체별로 수행과제를 분류한 것이다. 대부분의 과제가 내부인력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행과제 중 약 4/5가량이 내부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정당정체성과 정책의 일치성을 높이고 정당 특성상 과제내용의 보안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내부인력 의존은 전문성의 취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11〉 연구 주체별 분석

연구주체 \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자유정책 연구원	미래전략 개발 연구소	진보정치 연구소	사람희망 정책 연구소	미래상상 연구소	계
자 체	42 (78%)	46 (68%)	26 (100%)	15 (88%)	17 (74%)	– (0%)	14 (78%)	160 (77%)
외부전문가	1 (2%)	17 (25%)	– (0%)	2 (12%)	6 (26%)	1 (100%)	2 (11%)	29 (14%)
공 동	11 (20%)	5 (7%)	– (0%)	– (0%)	– (0%)	– (0%)	2 (11%)	18 (9%)
계	**54 (100%)**	**68 (100%)**	**26 (100%)**	**17 (100%)**	**23 (100%)**	**1 (100%)**	**18 (100%)**	**207 (100%)**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모든 국정분야의 사안들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종합 연구소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예산 등의 이유로 이에 맞는 연구인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과제

수행의 경우, 수시 발생하는 현안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내부인력이 전적으로 이의 수행에 배치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좀 더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과제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연구소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하겠다.

(2) 2005년~2008년 추이

연구주체별 과제수행 결과를 보면 자체 내부인력에 의한 과제수행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부전문가와의 공동수행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순수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과제의 숫자는 기간 중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부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자체 내부인력에 의한 과도한 연구수행 비중은 외부의 시각을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체, 외부전문가, 공동 수행의 적절한 안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12〉 기간 중 연구주체별 추이

연구주체 \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 체	136 (61%)	238 (76%)	128 (73%)	160 (77%)
외부전문가	30 (13%)	35 (11%)	21 (12%)	29 (14%)
공 동	57 (26%)	42 (13%)	27 (15%)	18 (9%)
계	**223 (100%)**	**315 (100%)**	**176 (100%)**	**207 (100%)**

6. 간행물 등 자료발간별 분류

(1) 2008년

전체적으로 정책연구소들은 연구 및 정책개발의 결과에 대한 자료발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이 보여주듯이 7개 정책연구소의 한 해 동안 자료발간실적은 모두 65건에 그쳤다. 그중 토론회 자료, 심포지엄 자료, 기자간담회 자료, 교육연수 자료, 포럼 자료가 41건,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내부 활용자료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표 13〉 간행물 등 자료 발간실적 분석

분류 \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자유정책 연구원	미래전략 개발 연구소	진보정치 연구소	사람희망 정책 연구소	미래상상 연구소	계
연구논문	1	–	–	14	–	–	–	15
토론회자료	6	4	7	–	8	2	–	27
심포지엄자료	–	1	–	–	–	–	–	1
기자간담회자료	–	1	–	–	–	–	–	1
교육연수자료	–	1	–	–	–	–	–	1
포럼자료	–	11	–	–	–	–	–	11
자 료 집	–	4	–	–	–	–	–	4
백 서	–	–	1	–	–	–	1	2
간 행 물	–	–	3	–	–	–	–	3
계	7	22	11	14	8	2	1	65

간행물 발간의 저조는 정책연구소의 산출물이 외부에 홍보되지 않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외부에 자신 있게 알릴만한 내용의 산출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후자의 경우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연구결과 및 개발한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기관, 유관 정부부처, 연구소, 학계 등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연구소 활동이 검증받고 피드백이 발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보완이 일어나는 선순환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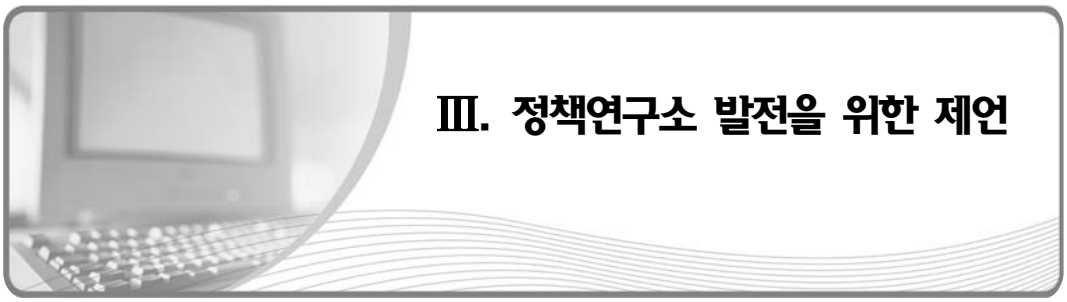
(2) 2005년~2008년 추이

정책연구소들의 자료발간 추이를 살펴보면 검토대상 전체기간 중 연구논문과 토론회자료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성격상 큰 문제라 할 수는 없다. 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연구결과를 정기적으로 내외부에 알리는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는 연구논총, 계간지, 연구소 기관지 등의 발행건수가 4년 동안 13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연구소 활동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 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자료 발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4년간 발행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05년 111건을 기록한 이후, 2006년 79건, 2007년 60건, 2008년 65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정체된 상태라고 하겠다. 연구결과는 외부로 전파되며 계속 축적되어야 지속적인 피드백과 좀 더 내실 있는 후속연구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들의 자료발간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기간 중 자료 발간실적 추이

분류 \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누계
연구논문	28	24	20	15	87
토론회자료	35	15	20	27	97
심포지엄자료	–	–	–	1	1
기자간담회자료	–	–	–	1	1
교육연수자료	–	–	–	1	1
포럼자료	–	–	–	11	11
자 료 집	13	6	–	4	23
백 서	2	5	3	2	12
간 행 물	–	2	1	3	6
정책자료	–	–	7	–	7
연구논총	–	1	3	–	4
계 간 지	4	1	2	–	7
자 료	–	1	2	–	3
연구보고서	–	1	1	–	2
간담회자료	–	2	1	–	3
정책자료집	–	1	–	–	1
연구소기관지	–	2	–	–	2
소 책 자	1	1	–	–	2
교육자료집	–	1	–	–	1
이슈브리프	6	1	–	–	7
토론회자료집	–	5	–	–	5
교육교재	4	10	–	–	14
행사자료	6	–	–	–	6
공청회자료	1	–	–	–	1
워크숍자료	2	–	–	–	2
단 행 본	9	–	–	–	9
계	**111**	**79**	**60**	**65**	**315**



Ⅲ.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언

1. 정책연구소의 현실과 문제점

(1)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한계

학문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에 전념하는 기관을 흔히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본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국방전략을 논의(think)하던 안전한 공간(tank)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정책수립이나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모든 기관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는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국가는 물론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역량이 출중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개발이나 대안제시와 관련된 싱크탱크만 약 2,0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약 300여개는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60~70년대 정부 주도로 설립된 연구소를 시작으로 1980년대 기업 연구소, 그 후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 부문의 연구소로 설립주체가 확대되면서 싱크탱크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2005년부터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지원이 제도화되어 2009년 7월 현재 7개의 정책연구소가 등록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는 역사의 일천성과 예산의 한계, 대외홍보 및 학술교류의 미흡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싱크탱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선정하여 발표한 "세계 30대 싱크탱크"에 국내 기관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세 기관이 지역별 선두권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다른 싱크탱크들과 비교한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도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008년 11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내의 영향력 있는 100대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가 정치사회분야의 10대 싱크탱크 중에서 6위를, 민주정책연구원이 같은 분야에서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점수를 얻은 37개 기관 중에서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인 100대 싱크탱크에 정책연구소가 포함된 것은 일단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심도있게 검토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당 최고책임자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 (김형준) "일부 NGO의 정책개발능력보다도 뒤떨어진다," (전용주) "설립 1년이 지나도록 독립된 홈페이지마저 구축 못했다," (이준한) "연구소라는 인식보다 정당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라미경)라는 등의 지적은 우리나라 정책연구소의 현실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책대결선거를 통한 정책정당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것은 이제 만 4년이 채 안됐다. 정책대결보다는 아직 정쟁이 정당간 대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서 국가비전을 제시할 능력을 갖춘 싱크탱크로서 정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당 스스로가 이들 연구소의 육성과 활용을 통해 정책정당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연구소들이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깊이 인식될만한 정책의 산출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방편으로 정책연구소의 설립은 이미 제도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연구소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선진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의회정치의 역사가 긴 일본이나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양당체제가 구축이 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대만도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는 없다.

정당정치의 본산인 유럽의 경우 독일이 정당정책연구기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일부 정당들이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정책연구소 또는 정당의 싱크탱크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미국의 경우가 많이 거론된다. 바로 공화당의 헤리티지재단과 민주당의 브루킹스연구소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기관들은 이념적 성향이 각각의 정당과 밀접할 뿐이지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당과는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정당들 또한 연구소들의 이념적 성향을 떠나 정책대안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채택하고 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백악관에 파견되어 정책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기구로서 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와 독일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례는 많은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정당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연구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정부는 이들 재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 정당의 연구재단들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익적 성격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기부금도 받고 있는 등 자체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각 정당연구재단의 연구활동도 특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노사관계, 자유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지방자치,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은 환경문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들의 정체성은 소속 정당에만 일치되어 있지 개별 연구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없다.

법정기구라는 성격과 국고보조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독일의 정당정책재단과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소와는 그 위치와 운영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당의 역사와 지속성에 있다. 독일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사민당은 1875년 창당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세운 것은 1925년이며, 기민당은 전후 1945년에 창당되었으나 그 뿌리는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가톨릭중앙당에 두고 있다. 기민당의 정책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1956년 설립되었다.

이같이 독일의 정당체제는 지난 6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반면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해방 이후 이합집산을 반복해왔던 관계로 정당구조의 안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회에 진출해 있는 7개 정당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정당은 지난 1992년 3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자당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으로 역사가 17년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정당은 지난 2000년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이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2008년 2월 17일 통합민주당으로 창당되어 그 해 7월 6일 당명을 민주당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이들 정당의 정책연구소도 역사가 일천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995년,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연구소(현 새세상연구소)가 지난 2004년 설립되었으며 나머지 정책연구소는 모두 지난 2008년 설립등기되어 이제 역사가 갖 1년을 넘었을 뿐이다. 이같은 우리나라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은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2) 정책연구소의 의미와 역할

역사가 짧고 정당의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선진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한 우리나라 정책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정책연구소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연구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정당의 이념 및 정강에 부합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를 정쟁이 아닌 건전한 정책대결로 이끌어 정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당법 제38조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설립하는 연구소는 정책연구소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러면 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정당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방침을 의미한다. 정책집행을 통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발전을 이룬다. 정책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행동노선을 결정지으며 사회 여러 집단들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안에서 집행까지의 과정은 매우 동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첫째, 규범적 처방기능이다. 정책은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여러 요소가 개입되어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오는 산물이다. 그러한 정책은 사회에 대한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목표체계로서, 또 행동체계로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정책은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의 기능을 갖는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성격의 사안들은 그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한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데 이 때 정책은 그들에 대한 행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오늘날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은 그 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

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넷째, 정책은 사회갈등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여러 이익을 조종하고 통합한다. 갈등조정에 실패하거나 사회를 통합하지 못하면 여러 혼란과 역기능이 초래된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 가급적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 그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은 사회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정책은 사회변동을 반영하거나 또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한 정책은 사회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결국 현대정치에서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기반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정당이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것이다. 그리고 정당은 이러한 정체성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권을 창출 및 유지하거나 확대 재생산한다. 따라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능이 강화될수록 그 정당의 경쟁력과 생명력은 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제도화한 것이다.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정당에 입법 아이디어와 함께 정책조언을 제공한다.

둘째, 당원과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정치교육 및 훈련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의 정체성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충원의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체제기반을 확고히

하는 공익차원의 의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는 앞의 네 가지 기능 중 처음 두 개의 기능에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나 셋째와 넷째 기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의 유형은 ▲독립형, ▲종속형, ▲연계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독립형은 재정, 운영, 연구의 세 부분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외에 독자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며 정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종속형은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연구와 운영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연구소 운영이 정당 특히 당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마지막으로 연계형은 정당의 감독을 받으나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다. 연구활동과 운영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정당과 연구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들의 운영을 살펴보면 연구소 스스로 자율성을 포기하는 경우와 연구소 책임자가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나 정당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야당의 한 신임 연구소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연구소가 “당을 돕는 것이 당대표를 돕는 것이고 당대표를 돕는 것이 당을 돕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연구소 스스로 자율성 확보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당의 다른 연구소장은 법안처리과정에 나타난 당정청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였다가 곧 당지도부에 의해 경질되었다. 이 사례는 연구소가 자율성을 추구하나 정당이 용인하지 않는 경우라 하겠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는 종속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과

연구소 모두 연구소의 자율성 확보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연구소의 위상 확립 및 활성화에 큰 장애물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정당과 연구소 관계에 내재된 문제 뿐 아니라 환경 및 정치문화적 요인도 정책연구소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책개발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소는 정책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당정치에서 정책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당들은 선거를 정책대결로 치르지 않고 폭로나 흑색선전 등 소위 바람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당들의 의정활동도 정책을 구체화하는 입법활동과 상호 대안제시를 통한 정책대결이 아니라 정부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무조건 막으려는 야당 사이의 정쟁과 이에 따른 파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행정부와 산하 연구소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능력에서 정책연구소가 그들을 능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연구소들이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활용하여 장기과제를 통해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990년대부터 특정분야의 NGO들이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연구능력의 제한과 여론화 기술의 미흡 등으로 정책연구소는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공급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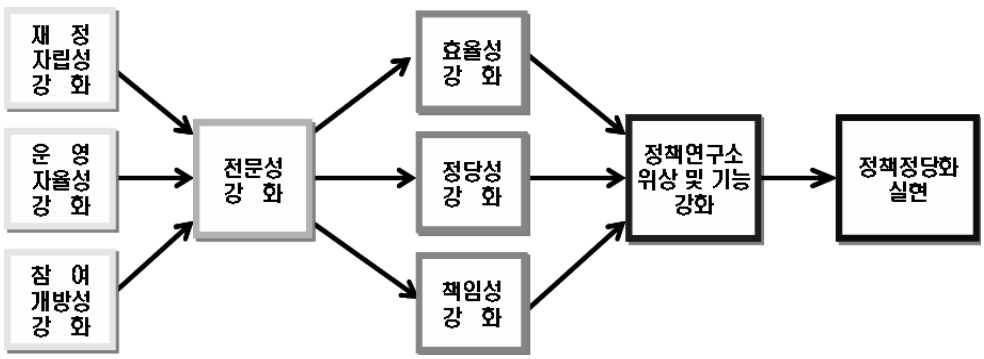
이렇듯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는 매우 의욕적인 취지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내외적인 여러 요인과 환경으로 인해 처음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

(1) 한국형 정책연구소 모델 창출

정책연구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한국형 정책연구소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1〉은 향후 한국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석 모형이다. 분석 모형의 핵심은 정책연구소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연구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 형성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들은 연구소의 재정적 자립성, 운영의 자율성, 참여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연구소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연구소의 효율성, 정당성, 책임성은 필연적으로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연구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어 정책정당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한국형 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을 제도적 차원(institutional dimension)에서 고찰한다. 제도적 차원이란 구속력을 갖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 한국 정책연구소 발전 분석모형



출처: 김형준·김도종(2008). 『2007년도 정당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31쪽

한국형 정책 연구소 모델은 정책 연구 위주의 미국식 모델과 민주주의 정치교육 중심의 독일식 모델의 기능을 균형있게 안배하고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표 15〉는 독일과 미국의 재단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 정책연구소의 정당성은 여론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연구소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은 공적 영향(public influence)과 사적 영향(private influence)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보고서, 학술지, 정책메모, 의회청문회 참석, 공공포럼 개최, 미디어마케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후자는 연구원들이 직접 행정부에 진출하거나 의회나 행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하여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김영태(2004, 116쪽)에 따르면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특정 정당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입각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 특히 정치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재단은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능력을 고양시키고, 정치적 활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교육활동을 활동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 모든 재단들이 공통적으로 장학연구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연구사업, 문화진흥사업, 정치활동을 위한 기초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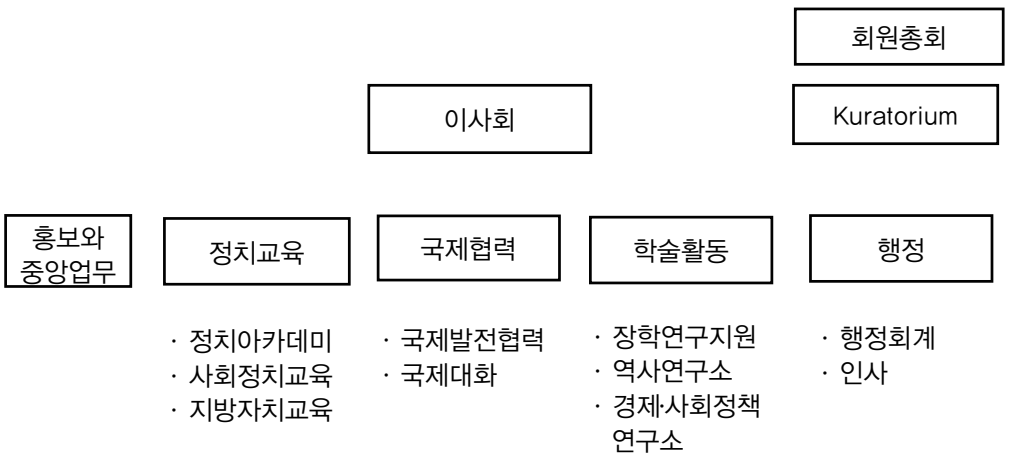
〈표 15〉 독일과 미국의 재단 현황 비교표

구 분	독일모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미국모델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정당	독 사민당 소속	미 민주당 성향
설립역사	• 바이마르공화국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으로 1925년 사민당이 설립	• 1916년 설립된 IGR(Institute for Government Research)과 1922년 설립된 Institute of Economics가 1927년 로버트 브루킹스로 합병
목 표	•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실시 – 민주주의, 다원주의 창달 • 장학사업 – 고등교육의 기회 부여, • 국제협력 – 전쟁 방지	• 독립된 비정당조직 표방 • 경제, 대외정책, 통치분야의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
조직구성	• 정치본부, 국제협력본부, 학술본부, 관리본부, 공보실 • 연구회(TF팀)	–
연구활동	• R&D 매니지먼트	• 직접 R&D
예 산 (2002기준)	• 1억 1천만 유로 (약 1,500억원)	• 수 입 : 4천만 달러 (약 480억원) • 지 출 : 3천6백만 달러 (약 430억원) • 순자산 : 2억 2천6백만달러 (약 2,700억원)
수입구조	•국고 보조 98%	• 증여 49%, 기부금 30%, 공공정책 교육 9%, 출판 8%,정부 2%
재정지원	• 정당재단에 대한 국고보조 관례화 교섭단체(의석5%이상)에 지원 관례상 에베르트재단(사민당) 1/3 아데나워재단(기민당) 1/3 나우만(자민당), 하인리히뵐(녹색당)등 1/3	• 국고보조 비율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계약연구(Contrant) 또는 기부금으로 재정 운영

출처: 박명광. 2004. "열린정책연구원의 운영방안 및 발전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정당 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세미나 발표논문, 9쪽.

〈그림 2〉에서 보듯이, 독일의 정당친화적 재단은 행정부서나 홍보부서를 제외하면 정치교육, 국제협력, 학술활동이라는 커다란 세 가지 유형의 활동에 따라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은 연방의회에서 독일의 정치적 흐름을 지속적이고 비중있게 반영하고 있는 정당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의 협의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1)]

〈그림 2〉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조직구성도



* 출처: 김영태. 2004.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 재단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논문, 117쪽.

1)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의 국고지원과 관련한 독자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방과 주예산 관련 규정, 행정지침, 재단관련 규정 등에 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방의회에 의석을 갖는 정당(연방의회에서 의석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방의회 선거까지)에게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정당으로부터 법적인 측면에서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에만 국고를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영태 2004, 119).

종합하면 한국형 정당정책 연구소 모델로 미국식의 정책연구 기능을 내포한 독일식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

한편, 이러한 한국형 정책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일반 국민들의 참여 개방성이 크게 강화 될 것이다. 연구소가 연중 일정기간 당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2) 운용의 자율성 확보

정당친화적 정책 재단으로 전환되더라도 정당이 재단 운영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은 무너지게 되고, 중앙당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역 국회의원이 정책연구소의 최고 책임자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중앙당 운영이 당 대표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개인화된 권력구조' 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최고 책임자를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임명할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연구소 책임자가 당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강하고 신임이 두터울 경우, 연구소는 당 대표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연구소 책임자가 국회의원일 경우 상근해서 연구소 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소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소 책임자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적인 가치 어젠다(positive values agenda) 및 정책이슈의 제시로

2) 신두철(2008)은 독일의 정치재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각 정당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접 정당의 당수, 사무총장, 회계는 정치재단 내에서 같은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음(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86년 판결문). 이러한 판결 근거로 인해 독일에서는 정당기관(Parteiinstitute) 혹은 정당재단(Parteistiftung)이라는 명칭 대신 '정당과 밀접한 정치재단(parteinahe politische Stiftung)'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건전한 정책 선거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정책연구원은 정치적 이슈와 사회가치를 연결하는 가치 아젠다와 정책이슈를 창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참여의 공통기반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연구소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 정책참여 및 의제 설정기능을 활성화해서 열린 광장을 지향해야 한다. 정책연구원은 사이버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당 내외 정책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지지자그룹,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과 정책의 효용에 대한 상호대화를 통해 비판과 개선방향을 수렴하여 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열린 정책 광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정 자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당 부설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소 재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되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에게 보조해주는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을 중앙당이 아니라 연구소에 직접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정차자금법 제 28조 제2항에는 국고 보조금의 100분의 30이상은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을 통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지급 구조는 연구소가 중앙당에 예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소장과 연구인력 충원, 심지어 연구 활동에서 중앙당과 당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 보조금을 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구소에 국고 보조금을 직접 보조할 경우에는 다양한 통로에서 재정의 투명성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연구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실사를

받는 것 이외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독일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정치 재단에 대한 회계 감독은 연방과 주회계청, 재무부, 기타 지원기관(내무부나 외무부 등)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태 2004, 116쪽)

한편, 소수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육성할 개선책도 필요하다. 기존의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소수 정당의 정책 개발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 정당 정책 개발 육성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는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국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 20인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50%를 정당별로 균등 분할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석수가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에는 5%씩 배분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 중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 대해서는 2%씩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지나치게 원내교섭단체의 대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개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더구나, 원내교섭 단체를 갖춘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에서의 혜택 이외에 국회법상 국회에 수십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간의 '정책연구 및 개발 양극화' 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연구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소수 정당의 정책 연구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예 : 30%)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당의 정책 연구소에 균등하게 직접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해 볼 만하다.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는 것 이외에 기본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배분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적은 소수당은 정책연구소 운영경비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정당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국회 의석 5석 이상 또는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 투표에서 3%이상을 획득한 정당으로 규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전문성 강화

정책연구소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국민 혈세를 쓰는 것에 걸맞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책연구소는 싱크탱크로서 규모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연구소 인력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할 때 정책개발의 아웃소싱이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싱크 넷(Think Net)의 기능에만 치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록 역사가 일천하기는 하지만 예산 규모에 비해 연구소로의 기능은 실망스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도래한 근본 이유는 중앙당이 잉여 인력을 연구소에 배당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 충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05. 8. 4에 개정된 정당법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1항에는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 는 규정이 있어 중앙당은 100명이

넘는 잉여 인원을 연구소에 배치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소에 배당되는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경비로 충당되어 전문 인력 충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연구소가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중앙당 인력 충원 쿼터제' 를 실시하여 연구소 인력에 중앙당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는 중앙당에 근무한 사람이 연구소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충원된 연구 인력이 생산적인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 경쟁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정책 실명제' 를 채택하여 연구소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나 출판물이 어느 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실명화 할 필요가 있다. 2005년 8월에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과 중앙선관위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 실적을 공개하도록 정당법(제35조)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이 실효성을 띠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 활동 공개 이외에 누가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명제는 지금과 같이 연구소가 주요 정책 과제별로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웃소싱을 주는 기형적인 연구 활동 형태를 바로잡는 기능도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연구가 특정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소는 수준 높은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연구 결과물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 를 설립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정책분석과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와 방법론이 뒷받침되고 수준 높은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엄격한 연구방법론과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정책연구소들의 연구활동 업적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 구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연구소 업적 비교·연구 평가는 연구소 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연구소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연구활동 비교·평가는 정책연구소간 합리적인 정책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중앙선관위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업적평가지수』(Performance Evaluation Index)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수에 의해 정책연구소를 평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연구소에는 국고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연구소는 매년 일년간의 활동 업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제출 서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형식적이어서 체계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연구소의 정기활동실적보고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정책연구재단과의 국제교류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독일·일본 등의 정당 연구재단 및 정당협력 연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교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표 16〉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소 현황이다. 정책연구소들이 이런 해외 연구소들과 정책 MOU를 체결하거나 연구위원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인력을 파견한다면 연구위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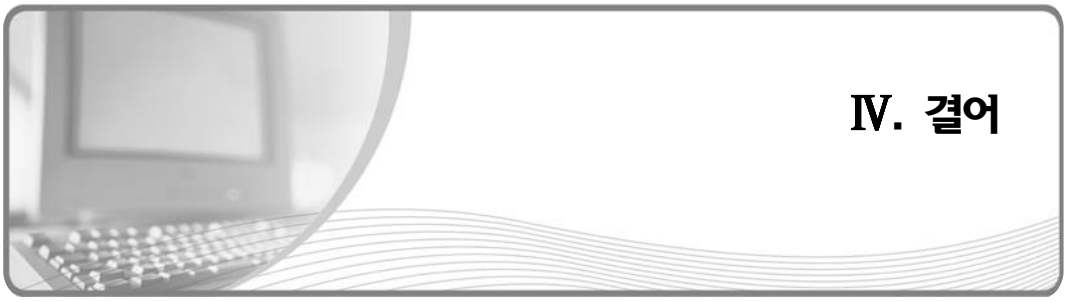
〈표 16〉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소 현황

미국의 주요 연구소	성향	설립 연도	인력			예산(1999) (단위: $, 백만)	위치
			F	P	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보수	1943년	100	–	65	10+	DC
Brookings Institution (Brookings)	중도 진보	1927년	79	–	161	20+	DC
Cato Institute (Cato)	보수	1977년	42	–	20	10–20	DC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	진보	1981년					DC
Center for Strategy & International Studies(CSIS)	보수	1962년	92	140		15+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EPI)	진보	1986년	18	–	20	2–5	DC
Economic Strategy Institute (ESI)	보수	1989년					DC
Heritage Foundation (Heritage)	보수	1973년	134	–	46	30+	DC
Hudson Institute (Hudson)	진보	1961년	54	10	13	10+	Indianapoli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IIE)	중도	1981년	24 +			7+	DC
Manhattan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보수	1977년	25 +				New York
Milken Institute (Milken)	보수	1991년	–	–	–		DC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진보	1998년	17	–	3	1–2	DC
Rand	보수	1946년	543	80	453	100+	Santa Monica
Reason Foundation	보수	1968년	18	–	6	3.3+	Los Angles DC
Urban Institute (Urban)	진보	1968년	212	33	134	10+	DC

주 : F=Full time researchers, P=Part time researchers, S= Support staff. 자료: Abelson(2002), Table I.1에서 부분발췌 및 관련 연구소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추가로 정리한 것임. DC= Washington D.C임. 공란은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비워 둔 것임.

출처: 정광호. 2004. "미국 정책연구소(Think Tank)의 역할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논문, 82쪽.

다섯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사회 각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R&D사업을 직접수행하면서도 아웃소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 국내외 정치재단 등과 함께 국가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Ⅳ. 결어

박세일(2005)은 한국의 정책연구소가 담당해야 할 3가지 핵심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물량중심' 에서 '가치중심' 의 경쟁전략으로 정당경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 정당은 인적, 물적자본을 대량 투입하여, 세를 과시하고 유권자를 공략하는 '물량중심' 의 경쟁방식으로 생존해왔다. 결국 정당자금의 상당부분이 지구당, 중앙당 운영 경비로 들어가고, '정책중심,' '가치중심' 의 정치가 아닌 '조직중심' 의 정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고비용 비효율 정치는 정경유착과 국가운영의 비효율이라는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책연구소' 설립은 각 정당이 '이익지향,' '정쟁대결' 에서 벗어나 새롭게 '이념과 가치' 를 규범화하고, 각자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경쟁' 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둘째, '지역정당,' '보스정당' 에서 '이념정당,' '정책정당' 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한국정당들은 소수 지도자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당적(私黨的) 성격이 강했다. 소수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생성, 소멸,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정당은 체계화된 당의 이념과 가치, 이를 공유하는 당원들과의 탄탄한 조직적 연대성이 부족했고, 그 결과로 '지역주의' 와 '연고

주의' 가 기승을 부렸다. '정책연구소' 가 정당의 가치적, 철학적 기반과 정치세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경쟁을 펼쳐나갈 때, '보스정당,' '지역정당' 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정당' 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셋째, '정치이슈' 중심에서 '정책이슈' 중심 경쟁으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주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정당은 선거에서 특별한 정책적 차별성 없이 주로 '지역감정,' '흑색선전' 등의 방법에 기대어 경쟁하여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정당간의 반목과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왔다. '정책연구소' 가 선거에서 다양한 '정책이슈' 들을 제기하면서, 정당간의 '정책이슈' 경쟁을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정책정당,' '선진정치' 를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 당이 '정책이슈' 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새롭게 구축해낼 수 있다.

박세일 교수의 지적대로 정당정치 발전의 큰 방향은 가치 중심의 정책 정당 및 이념 정당의 구축이다. 각 정당이 이익지향' '정쟁대결' 에서 벗어나 새롭게 '이념과 가치' 를 규범화하고, 각자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경쟁' 을 펼칠 때, 한국정치의 진정한 '가치경쟁, 정책경쟁' 이 실현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구소는 정당에 가치·철학적 기반과 정치세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그를 기초로 무한 정책 경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국회가 정당정치의 핵심이 되지 못하고, 원외 정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외 정당체제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외 정당체제는 원내 중심체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의원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 대표보다는 당원들이 선출한 원외대표가 중앙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원외중심 정당체제는 궁극적으로 한국 정당을 인물 중심의 정당과 지역주의 정당으로 고착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비록 2002년 대선이후 당권·대권이 분리되고, 제왕적 총재 체제가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정당은 여전히 당 대표 또는 소수 실력자들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개인화되고(personalized) 중앙집권적인 (centralized)' 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일반 의원들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형태를 띨 수 밖에 없고, 일반 의원들은 국회직보다는 당직을 선호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신보다는 중앙당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구조가 존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 대표가 특정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밀어붙이면 개정을 추진 중이던 법안이 별안간 중지된다. 또한, 당 대표가 갑자기 국가 정체성을 지적하면 모든 정당 구성원들이 이의 없이 이를 따르는 후진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향후 전문성, 재정적 자립성, 운영의 자율성, 참여의 개방성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면 기형적인 한국 정당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생산적이고 갈등 지향적인 정쟁 중심의 정치를 종식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 국민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 정부를 연계해 국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진 정당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원택 · 박경미 · 배영. 2006. 『200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 실적 평가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민전. 2005. “국회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

김영태. 2004.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 재단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 논문.

김윤태. 2003. 『소프트 파워 시대 : 정보시대의 정치와 문화』, 서울 : 새로운 사람들.

김충남. 2005. “싱크탱크, 나랏돈 쓰면서 대권주자 사기구화”, 문화일보 (7월 4일).

김형준. 2008.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논문.

김형준. 2005. “정치 갈등 결정 요인에 대한 고찰 : 제도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연구원 『제5차 코리아 포럼』 발표논문.

김형준·김도종. 2008. 『2007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 실적 평가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미경. 2008. “정책 연구소의 정책 기능 활성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논문.

박명광. 2008. “열린정책연구원의 운영방안 및 발전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 논문.

박세일. 2004. “ ‘정당 정책연구소’ 의 바람직한 역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 논문.

신두철. 2009. “독일 정치재단과 한국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

신승근. 2004. “너희가 ‘싱크탱크’를 믿느냐.” 『한겨레21』 제 512호 (6월 3일).

신창훈. 2005. “여당 싱크탱크 열린 정책연구원 재집권 프로젝트” 내일신문 (1월 6일)

이창훈. 2001.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vs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신동아』 (4월호).

정광호. 2004. “미국 정책연구소(Think Tank)의 역할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논문.

정진민. 2003. “정당개혁의 방향 :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학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

이현우. 2007. 『2006년도 정책연구소 평가 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의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5호)

황윤원 외. 2003. 『싱크탱크와 국가경쟁력』, 서울 : 나남 출판사.

Abelson, D.E., and C.M. Carberry. 1997. Policy Experts in Presidential Campaigns : A Model of Think Tank Recruitmen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7(4) : 679-697.

PART _ 2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 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3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53	3	

다.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013,706	558	7,014,264	6,374,282	639,982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07. 11. ~ 08. 1.	기획재정 정무 등	새정부 중점 개혁추진 방안	외부 공동	
08. 2.	사회문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08. 3.	재정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자체	
08. 3.	재정경제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대한 검토	자체	
08. 3.	기획재정	당 대표 관훈토론회 참고자료	자체	
08. 4.	외교통상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자체	
08. 4.	정 무	국정과제 보고회 참고자료	자체	
08. 4.	기획재정	추가경정예산 편성논란 대응	자체	
08. 4. ~ 5.	외교통상 농림해양수산	미국 쇠고기 개방 및 축산농가 대책/ 한미 쇠고기협상 후속대책	자체	
08. 5.	외교통상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외부공동	
08. 5.	외교통상 산업자원	FTA 현안 분석	외부공동	
08. 5.	농림수산	한미 FTA · 쇠고기 협상 대응방안	자체	
08. 5.	기획재정	경유 값 급등 현황 및 당 대응방안	자체	
08. 6.	통일외교통상	남북경협의 성과, 문제점 및 대책	자체	
08. 6.	통일외교안보	북한비핵화 2단계 완료: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전망	자체	
08. 6.	산업자원	국제유가전망과 고유가 대책	자체	
08. 6.	국토해양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자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08. 6.	기획재정	'공기업 선진화' 참고자료	자체	
08. 6.	기획재정	'하반기 성장전망치 하향' 조정 대응방안	자체	
08. 6.	노 동	정년연장 및 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안	자체	
08. 6.	기 타	정당연구소 혁신방안 연구	자체	
08. 6. ~ 7.	사회문화	재한 외국인 정책 종합 개선 방안	자체	
08. 7.	통일외교통상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해제의 의미와 효과	자체	
08. 7.	통일외교안보	이명박 정부출범과 對한반도정책	자체	
08. 7.	법 무	법질서 확립 방안	외부 공동	
08. 7.	산업자원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방안	자체	
08. 7.	산업자원 재정경제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전략	외부	
08. 7.	기획재정	재산세 관련 대응방안	자체	
08. 7.	농림수산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방안	자체	
08. 7.	사회문화	불법시위 관련 시민집단소송제 추진 시 고려사항	자체	
08. 7.	교 육	공교육 활성화 방안	자체	
08. 7.	사회 농업	美 쇠고기 수입재개 後, 문제점 및 개선과제	외부 공동	
08. 7. ~ 8.	환경 금융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외부 공동	
08. 7. ~ 8.	환경 경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자체	
08. 7. ~ 9.	통일외교안보	동북아지역의 안보동맹 및 협력체의 현황과 전망	외부 공동	
08. 7. ~ 9.	재정경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08. 8.	정 치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정당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체	
08. 8.	정 치	선진 국회의 모습과 선진 의회의 과제	외부 공동	
08. 8.	외교안보	미 대선 분석과 각 후보의 對한반도 정책 연구	자체	
08. 8.	통일외교통상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의 모색: IT협력을 중심으로	자체	
08. 8.	통일외교안보	북한비핵화 3단계: 현황과 전망	자체	
08. 8.	재정경제	금융 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대안	자체	
08. 8. ～ 9.	정 치	불법 폭력시위 근절대책	자체	
08. 9.	재정경제	리먼 브러더스 · 메릴린치 사태 관련 대책	자체	
08. 9. ～ 10.	통일외교안보	북한급변사태와 전략: 김정일 건강이상설	자체	
08. 10. ～ 12.	경제 사회	2009년 예산반영 긴급 서민 살리기 대책	자체	
08. 11.	행 정	공직부패 척결 방안	외부 공동	
08. 11.	재정경제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검토	자체	
08. 11.	국토해양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향	자체	
08. 11.	사회문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산층/서민 살리기 대책	자체	
08. 11. ～ 12.	정 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방안	자체	
08. 12.	정 치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	자체	
08. 12. ～ 09. 1.	정치 행정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외부 공동	
08. 12. ～ 09. 1.	사회문화	2008 경제위기와 국민 계층의식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	외부 공동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세미나	2.26.	국회의원회관 104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사례 발표회	정년연장 및 임금 피크제도 사례/대안	
토론회	3.10.	국회의원회관 104호	규제개혁방안	규제개혁의 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간담회	5.3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FTA 관련 현안	자동차산업의 수출 확대 방안 검토	
간담회	6.23.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정치선진화 방안	정치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세미나	6.25.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방안	동북아지역의 경제, 안보 등의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	
토론회	6.25.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남북경협: 진단과 대책	남북경협 방안	
토론회	6.26.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공공부문 선진화	
간담회	6.27.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국가선진화를 위한 21C 국정운영시스템	국가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6.3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법질서 확립 대책	美쇠고기수입의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됨에 따라 법질서 확립대책 제시	
간담회	6.3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고유가 대책	정부의 고유가 대비 비상대책 점검 보완	
세미나	7.14.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韓中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한중간의 관계 전망	
세미나	7.17.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공교육 활성화 문제점 및 현장 간담회	공교육 활성화 대책	
간담회	7.21.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전략	유류가격 인하방안 종합검토	
간담회	7.22.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과제와 대책	美쇠고기수입 재개이후, 현황 점검파악 및 일선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보완사항 제시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7.23.	의원회관 소회의실	선진 국회로 가는 길	18대 국회 출범에 즈음하여 선진 국회 확립방안과 과제 제시	
토론회	7.30.	의원회관 소회의실	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재한외국인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8.11.	국회 헌정 기념관	국가선진화를 위한 로드맵과 액션프로그램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회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론회	8.12.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방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간담회	8.18.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황과 과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점검사항 제시	
간담회	8.2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금융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국가금융위기관리 시스템의 발전방안	
세미나	9.8.	국회 본청 귀빈식당	법질서 확립 방안	법질서 확립 방안 제시, 외부전문가와 국회의원 참석 토론	
세미나	9.10.	국회본청 귀빈식당	감세: 민생 살리기인가, 부자편들인가	감세의 실증분석효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	9.1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검토	
간담회	10.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북한핵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전략	20여년을 끌어온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논의	
간담회	10.21.	경기신용보증재단 小회의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탐방	중소기업 현장탐방을 통한 정책추진 사항 점검	
간담회	10.23.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마련 및 결과 제시	
토론회	11.19.	국회본청 귀빈식당	한국경제 긴급진단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	
간담회	11.2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對北전단살포의 현황과 대응방안	대북전단살포의 현황과 대응방안 논의	
토론회	12.1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패러다임 쉬프트와 리더십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전국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연구소 집합교육)	7월 10일 정책발표대회 (1개월간 진행)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	대학생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 발간과 발표대회 개최	총 236명 신청, 25명 14개 팀 선발
전국 대학생 하계 정책캠프 (현지교육)	7월 18~19일 (1박2일)	용인파인리조트	3차례 특강 및 대학생 정책 토론	총 570명 신청, 246명 선발
전국 5대권역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 (서울: 연구소 집합교육 / 지방: 현지교육)	10월 31일~ 11월 27일 (1개월간 진행)	서울: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 / 지방: 4대권역 현지)	차세대 정책전문가 양성 및 청년 전국 네트워크 기반 조성	총 922명 신청, 672명 선발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8. 9. 5.		보도자료 배부	글로벌시대와 한국의 선택	
08. 9. 19.		보도자료 배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08. 11. 19.		보도자료 배부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	
08. 12. 19.		보도자료 배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8. 1.	연구논문	새 정부 중점 개혁과제(안)	자체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08. 3.	토론회자료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6.	토론회자료	고유가 대비 비상대책의 재검토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7.	토론회자료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전략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8.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체발간	정당, 국회, 정부, 국책 연구기관 배포	
08. 8.	토론회자료	국가금융정보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점검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9.	토론회자료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과제	자제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8년 (매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신 성장동력포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 논의	
연중 (수시)	연구소, 국회 등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200명 규모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연중 (주1회)	국회	당 정책조정업무	당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	
연중 (수시)		연구기관 네트워크 사업	분야별 연구기관 간 연구교류	
08. 1. ~ 2.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활동	
08. 3.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검토	
08. 6.		2008년 하반기 감사방향	감사원 정책자문	
08. 6.	울산 상공회의소 등	석유화학업체 감산·조업단축 대책소위 현장활동	고유가 대책	
08. 6.	인천시 연학초등학교 학교급식소, 경인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 보관창고	국민생활안전대책단 , 먹거리 안전대책 수립팀 현장시찰	먹거리 안전대책을 위한 현장 시찰방문	
08. 6.	포천시, 파주시 낙농 현장	낙농家 민생현장 방문	유가폭등으로 인한 낙농현장 방문하여 낙농가 현안대책 논의	
08. 7. ~ (매주)	국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실	한나라당 제3 정책조정회의	재정, 조세, 금융 관련 정책조정회의	
08. 9.	국회본청 245호	한나라당정책위 주최 토론회	최근의 부동산동향 점검과 향후 방향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8. 10.	국회 본청 회의실 245호	한나라당 정책위, 수요 정책토론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대책	
08. 10. ~ 12.	여의도연구소 외	국책연구기관 정책개발 네트워크 사업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들과의 정책연구 ·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08. 1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회의실	공정언론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토론 참석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참석 및 대안 모색	
08. 11.	렉싱톤호텔 세미나실	중앙선관위 주최, 정책정당화 실현 위한 토론회 참석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진단 및 발전과제 모색 토론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참석	
08. 11.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중앙선관위 주최, 정당정책연구소 실무자 워크숍 참석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결과 브리핑 및 자유토론, 교양강좌 및 체육활동	
08. 12.	대구 경북대 회의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세미나 참석, 주제발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방안 (한나라당 현황) 발표	
08. 12.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연구소 방문 · 접견	중국 국제 청년교류중심단 대표단 방문 및 교류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단 대표단(6인) 방문을 통한 韓中관계의 현실과 향후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방향 논의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7. 12 ~ 2008. 1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등

■ **주　　제 :** 새 정부 중점 개혁추진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새 정부 9개분야 중점개혁과제 연구

□ **연구목적**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

□ **연구내용**

- 2008 새 정부 혁신 방안
- 규제개혁 로드맵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 금융 선진화 추진 방안
- 한국 농식품 세계화 추진 계획
-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
-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
- 빈곤탈출 및 장애인 복지

□ **연구성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2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가적 재난발생時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현황분석 및 대안 제시

□ **연구목적**

– 효과적인 국가 재난 관리 및 방지 시스템 구축

□ **연구내용**

– △행정안전부에 '국가위기관리본부' 신설 △소방청 독립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재난관련 산업활성화 △재난관련 학과 육성 및 졸업자 전문직임용 △재난 관리기금 확충 △관련법안 개정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3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의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

□ **연구목적**

- 과감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마련

□ **연구내용**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규제개혁의 방향 제시
-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립 △정부주도 개발형 경제모델 시행 당시 도입된 규제 전면 재검토 △국내기업, 자본에 대한 차별적 규제 우선 철폐 △자유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규제 도입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책위 및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보고 및 반영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3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대한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인 '뉴 스타트 2008'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도출

□ **연구목적**

-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발표

□ **연구내용**

- 'New Start 2008'의 주요내용 분석
- 'New Start 2008'의 문제점 제기 및 보완과제 제시

□ **연구성과**

- 토론회 발표 및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3

■ **연구분야 :** 전체

■ **주　　제 :** 당 대표 관훈토론회 참고자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관훈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책 현안을 점검하여 제시

□ **연구목적**

– 당 대표 관훈토론회中 정책관련 내용을 측면 지원

□ **연구내용**

– 분야별(△정치행정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당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

□ **연구성과**

– 당 대표의 관훈토론회 참고자료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주　　제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논리 개발

□ **연구내용**

– 한미 FTA의 의의 점검

– △책임정치 구현 △경제운용 전망의 불확실성 제거 △국익의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론 추진의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국정과제 보고회 참고자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와 관련, 주요 경제 정책 및 과제를 점검

□ **연구목적**

– 주요 경제 정책 및 과제를 정리하여 국정과제 보고회의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연구 △한미FTA, 한일FTA 등 주요 외교통상 현안 점검 △규제개혁 현안 △기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개선책 등 제시

□ **연구성과**

–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추가경정예산 편성논란 대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부양책에 대한 거시적 지표 점검 및 정책 시행에 따른 변수를 점검

□ **연구목적**

– 경제성장률 전망과 정책목표, 이에 따른 필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경제성장률 전망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법리적 해석 △국가재정법 선진화 방안 △세계잉여금 문제 점검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정책방향 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5

■ **연구분야 :** 외교통상·농림해양수산

■ **주　　제 :** 미국 쇠고기 개방 및 축산농가 대책/
미국 쇠고기 협상의 후속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대책을 마련하고, 미 쇠고기협상의 후속 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한미 쇠고기협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 보완 등
- 한미 쇠고기협상 후속대책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강화
-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
- 한미 FTA 비준과의 연계성 차단 등의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홍보논리 개발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주　　제 :**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부의 FTA 추진계획 및 전략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 제시

□ **연구목적**

– 정부의 FTA 추진전략 재정립

□ **연구내용**

– 정부의 FTA 추진 계획 및 실적 점검
– 국가별 FTA 추진 현황 및 대응전략 모색
– 자동차 산업에서 본 호주와의 FTA 추진 필요성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FTA 추진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산업자원

■ **주　　제 :** FTA현안 분석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FTA 관련 현안 검토

□ **연구목적**

– 정부가 추진 중인 FTA의 전략적 보완책 마련

□ **연구내용**

– FTA에 있어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점검

– △한-인도 FTA는 실효성 있는 협상 추진 필요, △한-EU FTA는 국내 기업 역차별 완화 등의 정책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에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농림수산

■ **주　　제 :** '한미 FTA·쇠고기 협상'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

□ **연구목적**

– 한미FTA의 효용성과 향후 추진방향, 이와 별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GATT 관련조항 점검 △SRM 기준에 대한 고찰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의 주요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 **연구성과**

–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 추가대책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경유값 급등 현황 및 당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경유값 급등에 따른 개인 및 영세사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목적**

- 유가 급등 원인과 인하여력에 대한 현황파악, 세제·제도적 개선과 함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

□ **연구내용**

- △가격과 세금의 관련지수 마련 △과거 정권에서 실시한 휘발유와 경유값의 100:85 조정에 관한 고찰 △산업분야 10% 에너지 효율증진을 위한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유가안정을 위한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통일 · 외교 · 통상

■ **주　　제 :** 남북경협의 성과, 문제점 및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면서 그동안의 남북경협의 성과를 진단하고, 상생공영의 대북 경협모델 연구, 제시

□ **연구목적**

– 그동안의 '퍼주기' 식 경협방식을 벗어나, 우리의 역량에 맞고 남북한의 상생공영 및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협모델 구상

□ **연구내용**

– 남북경협의 문제점으로 △대북 투자여건의 미비 △분쟁해결수단 미비 △북한의 폐쇄적 사회체제로 인한 투자환경 예측의 어려움 △북측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 지적

–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경협사업에 대한 전략적 구상 △경제논리 중심의 경협질서 확립 △民 · 官 분업적 접근 등이 필요

□ **연구성과**

–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북한비핵화 2단계 완료: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완료에 따른 평가와 향후 전개될 비핵화 협상을 전망하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북한의 영변원자로 폭파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은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북한비핵화 2단계 완료는 북한비핵화 3단계의 출발점이지만, 비핵화 3단계 완료까지의 난제 분석

– 6자회담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산업자원

■ **주　　제 :** 국제유가전망과 고유가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가차원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고유가 대비 방안으로 활용

□ **연구내용**

– 고유가 대책으로 △물가안정,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도 등에 관한 국가 중장기 에너지 운용전략 마련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 △섬머타임제 도입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 '고유가 비상대책' 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공식 13만 가구, 비공식 25만가구로 추정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미분양 아파트 다량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세제·금융·규제완화 측면에서 대처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대책과 부작용을 점검

– △미분양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원의 범위에 대한 고찰 △지원 기준마련 △세제지원에 따른 지방세 감소 우려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공기업 선진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 '공공부문개혁' 방안을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

□ **연구목적**

– 공공부문의 성공적 개혁방안 모색

□ **연구내용**

– △국정과제 및 공공개혁에 대한 여론 동향 △수도·에너지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접근 △각종 민영화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과학적 검증 등

□ **연구성과**

– 당정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하반기 성장전망치 하향' 조정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국제금융·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거시지표 전망을 재점검

□ **연구목적**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국제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거시지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서 3/4분기 이후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각 연구소의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련된 향후 전개 시나리오 분석 △대응방안 모색 등

□ **연구성과**

-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노동

■ **주　　제 :** 정년연장 및 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정책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년연장 및 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제시

□ **연구목적**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연장과 연계된 효율적인 임금제도 도입을 연구 검토하여 당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 개선(상시제도 전환) △개인별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활성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확대 △변형 및 왜곡된 임금피크제 통제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기타

■ **주　　제 :** 정당연구소 혁신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당정책연구소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소 혁신 방안 제시

□ **연구목적**

- 정당정책연구소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운영 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분석·연구

□ **연구내용**

- 2004년 3월 개정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각 정당이 중앙당에 별도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총액의 30%를 의무적으로 배당
- 정당에 분배하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 틀 아래에서 한계와 가능성이 공존
- 이에 대한 분석과 혁신을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연구소 소장단 보고를 통해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과 시스템 혁신에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7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재한 외국인 정책 종합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법무부, 노동부 등 각 부처로 산재해 있는 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

□ **연구목적**

- 재한 외국인 정책 종합 대책 제시

□ **연구내용**

- △외국인력 도입 개선방안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실효성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 △다문화 갈등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등 재한 외국인 종합대책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재한 외국인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통일 · 외교 · 안보

■ **주　　제 :**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해제의 의미와 효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同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명분이 되는 동시에 압력이며 이를 순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연구목적**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앞두고 이 조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당과 정부의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중 · 장기적으로 북한의 외자유치 및 차관 도입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실제 외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문제 진전, 미북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 · 개방 등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임

– 남북경협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의 부분적 확대 효과 및 중 · 장기적으로는 외자유치의 활성화와 무역 증가, 북한의 개혁 · 개방 추진의 장애물 제거 및 북한산업의 재건에 기여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이명박 정부 출범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베이징 올림픽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2008년에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하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바,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의 연관성 조사

□ **연구내용**

- 중국 국내적으로 베이징올림픽 개최이후에는 중국인들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고취되어,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대한반도정책과 관련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6자회담 주관 등으로 중화민족 특유의 자신감으로 더욱 과감한 한반도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
-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국 외교전략의 집중도 제고 방안 필요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법무

■ **주　　제 :** 법질서 확립 방안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선 행정부처, 시민단체, 전문 법조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법시위 근절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구축

□ **연구내용**

- △선진국의 평화시위 문화 시스템과 노하우 도입 △법제적, 행정적 뒷받침을 위한 후속조치 필요
-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초질서의 확립 △학교교육을 통한 법질서 준수 △사회교육을 통한 법질서 확보 등을 제시
- 갈등 위해요소의 사전 제거 및 최소화를 통해 불법폭력시위 예방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산업자원

■ **주　　제 :**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21세기 에너지 전쟁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자원 개발의 새로운 추진 목표 및 전략 수립이 긴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연구내용**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원 치침 천명
–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및 인력·기술 등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 해외자원개발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등 제시

□ **연구성과**

–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산업자원·재정경제

■ **주　　제 :** 석유유통산업 발전전략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유류가격 인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

□ **연구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석유유통산업의 게선 및 발전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 유도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석유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표표시제 폐지와 수평거래제 허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석유유통 동종업체 간의 저장 및 판매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대형화 추진 등 필요
- 유류가 인하를 위해 △주유소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제외 기준 조정(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격주 휴무제(주유소협회) △원유와 석유제품간 적정 관세율설정(석유협회)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유가인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재산세 관련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시장왜곡을 초래한 세제 관련 원인과 해법을 제시

□ **연구목적**

– 세계적 경기 하향추세에 맞물린 재산세 급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세정의의 실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나아가 경기둔화 요인 차단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참여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문제점 파악 △향후 경기 전망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이 하락-재산세 급증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재산세 개혁과 관련된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농림수산

■ **주　　제 :**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면세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정부의 추가지원 여력을 점검하고, 지원범위와 방안에 대해 검토

□ **연구목적**

– 농축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 **연구내용**

– △면세유 공급방식과 가격변동 현황 파악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방안 및 가격인하 방안 모색 △한시적 가격차보전제 검토 △유통개선·현대화 등 원가 인상요인을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마련 검토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농축산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불법시위 관련 시민집단소송제' 추진시 고려사항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점검

□ **연구목적**

– 바람직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내용**

– 관련법안 제정시 △법체계상의 완결성 문제 △기존 법안과의 상충문제 해결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위한 보완점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교육

■ **주　　제 :**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 공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교원평가제 및 학교평가제 도입 △학교 책임교육제 도입 △과밀학급 해소 △교육 재정 6% 확충 △교사의 수업여건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사회·농업

■ **주　　제 :** 美쇠고기 수입재개 後,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간담회 개최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부측, 미국산 쇠고기 전문수입업체, 한국음식업중앙회, 소비자 단체 대표 등 美쇠고기 수입관련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美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

□ **연구내용**

- 검역~위생~도축~판매에 이르는 全과정에서의 행정조치 및 법·제도적 보완대책 제시
- △검역인원 및 원산지 표시 단속반 인원충원 △소·돼지 도축장별 도축검사 적정인력 확보 △음식업계 대상으로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교육실시 △원산지 표시와 관련 된 이원화 된 法조항의 일원화 △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보완대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8

■ **연구분야 :** 환경 · 금융

■ **주　　제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탄소배출권 관련 국제 현황파악 및 향후 변화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에 적합한 탄소배출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 **연구목적**

- 2013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대상국 적용에 대비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정부,기업,금융기관의 역할과 '한국형 탄소배출권 시장 모델 제시

□ **연구내용**

- 정부차원에서는 △(가칭)저탄소사회 구현법 △R&D지원법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장려법 △저탄소사회펀드 조성 등의 정책 필요
- 기업측면에서는 △(가칭)기후변동 크레디트 법인설립 △옥션에 의한 수익 활용 방법 △배출권 평가방법 △ 제재조치 도입방안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 ·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8

■ **연구분야 :** 환경 · 경제

■ **주　　제 :**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내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기초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바, 세계 주요국의 정책방향을 집중조명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 **연구목적**

-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패더라임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총괄적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세계 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비교 · 분석하여, 정책의 4가지 기본 방향과 함께 세부적인 정책추진 방향 제시
- △총괄적 로드-맵 △법 · 제도적 정비사항 △정부 차원의 통합추진 체제방안 △세제 및 투자기반 확대방안 △기술 및 상품의 보급 · 확산 방안 △홍보 강화를 통한 범국민적 참여촉진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9

■ **연구분야 :** 통일 · 외교 · 안보

■ **주　　제 :** 동북아지역의 안보동맹 및 협력체의 현황과 전망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동북아지역의 다자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목적**

– 실질적인 이론적 틀을 다자협력체제 분석에 접목시키려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지역에 맞는 다자협력체제 모형을 전망

□ **연구내용**

–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체제의 지연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가속화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보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고 있음

– 보다 안정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안보적 차원의 지역적 제도와 국제 레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 **연구성과**

–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9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서민들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

□ **연구내용**

- 은행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분담 유인 등
-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 유도
- 대안금융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에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 정당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당법/정치자금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치선진화를 위한 개정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정치 선진화

□ **연구내용**

– △정치선진화를 위해 정당법 제30조 개정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현실화 △정치자금법 제29조 개정 △정당연구소의 안정적 기금 및 독립적 연구비 지원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선진 국회의 모습과 선진 의회의 과제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선진 18대 국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제18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선진의회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 **연구내용**

- 국회의 유형을 합의형 국회, 정책지향형 국회, 분권화 국회, 자율적 국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설명하고 선진국회상 제시
- 선진 국회를 위한 과제로, △국회의장의 위상 강화, △여야 지도부간 협의 채널의 유지, △상임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귀속 강조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외교·안보

■ **주　　제 :** 미 대선 분석과 각 후보의 對한반도 정책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 대선 후보들의 성향과 대선 판세를 분석하고,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 각각의 한반도 및 동북아 관련 정책들을 비교·고찰

□ **연구목적**

– 미 대선 판세와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사전 점검하여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준비

□ **연구내용**

– 오바마 후보는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분야 등 실용적 외교·경제 노선이 만나는 영역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매케인 후보는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의 접근방법 전환을 제외하고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연구성과**

–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통일 · 외교 · 통상

■ **주　　제 :**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의 모색: IT협력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IT 협력거점을 통해 북한 인력의 교육 및 이들의 우리 IT산업에의 활용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남북한 IT협력을 통해 북한의 IT산업을 육성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연구내용**

- IT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인적교류의 활성화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담하는 거점이 필요
- IT 교류 · 협력업체들의 단순임가공 방식의 단기적 사업 특성에서 탈피, 장기적 관점에서 교류 · 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남북간 IT산업의 격차를 줄이고 남북 공용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개성공단에 IT협력거점을 만들어 활용 검토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북한비핵화 3단계: 현황과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부시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에 따른 북한의 반발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정부 대처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북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진입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구체적 방법론 연구

□ **연구내용**

- 미국은 샘플채취, IAEA 검증 보장 등 북한 비핵화 3단계 검증체제를 제시했으나, 북한이 거부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불가 통보
- 미국이 제시한 검증체제가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며, 이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
-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완전한 검증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금융 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대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글로벌 금융시대에 조응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

□ **연구목적**

- 글로벌 시대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연구내용**

- 새로운 정책금융시스템 설계 : 세계제일의 IT와 금융 접목
-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전환, 지방으로의 자금 환류 유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사태 관련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사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사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 동향 분석
– 국내 금융시장별 파급 영향 분석
–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대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 10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북한급변사태와 대응전략-김정일 건강이상설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및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중미 3국의 긴밀한 협력 및 대비태세 필요성 제기

□ **연구목적**

- 김정일 건강이상과 관련한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부 대응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주변국들 특히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미국과 중국의 입장 및 행보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
-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법과 제도, 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대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국정감사 이후 黨-政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0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보완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국정감사 이후 당정의 정책 추진 보완점 제시

□ **연구내용**

- △경제 대책 △국가권력기관의 근무기강 및 법질서 확립 대책 △쌀 직불금 대책 △중산층 및 서민대책 △지방대책 등 분야별 과제 및 해결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 **연구분야 :** 통일 · 외교 · 통상

■ **주　　제 :** 對北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미와 효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따른 북한정세와 북핵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수립 방향 제시

□ **연구목적**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이후 정부의 남북관계 대책 수립에 기여

□ **연구내용**

-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남한의 지원 및 '對北원조조정그룹'을 통한 2국간 개발원조 공여 추진 필요
- 북핵 3단계 돌입을 반영, 기존의 경공업·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을 넘어 중화학공업·첨단기술산업·금융협력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비핵·개방 · 3000'을 보강한 종합적 산업협력방안 필요
- 3단계 북핵 폐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마련 시급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 12

■ **연구분야 :** 경제 · 사회

■ **주　　제 :** 2009년 예산반영 긴급 서민 살리기 대책

■ **연구방법 :** 현장탐방 및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적 곤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2009년도 예산에 새롭게 반영되어야할 몇 가지 정책대안들과 추정 예산치를 요약 제시

□ **연구목적**

- 경제 침체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 · 저소득층들을 위한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영세상공인 대상 4대사회보험료 경감 △실직자 위주 직업교육 증설, 중산층 이하 중증 질환자 치료비 장기저리대출 방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식 변경 △최저생계비 현실화 방안 △빈곤여성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중산층이하 대학학자금 장기저리대출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행정

■ **주　　제 :** 공직부패 척결 방안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제시

□ **연구목적**

– 선진국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패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연구내용**

–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 현황을 점검, △부패방지제도의 한계 및 허점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성과**

–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경제난에 따른 신용카드 '돌려막기' 증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복수카드 소지자 및 신용등급 현황분석

–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행위, 무자격 카드모집인의 카드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제 강화 등

–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카드대란)대책 필요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규제완화' 및 문제점 점검

□ **연구목적**

-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완화' 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

□ **연구내용**

- △급격한 경기변동 시나리오에 있어 DTI, LTV 완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 △경기악화와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금융 안전장치 마련 △단기에 집중되어 있는 대출을 중장기로 분산하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부동산 금융규제완화와 관련한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산층/서민 살리기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중산층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중산층, 서민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

□ **연구내용**

– △영세상공인 대상 4대 사회보험료 경감대책 △실직자 직업교육 증설 △중산층이하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방식 개선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12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각종 선거(4대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착시킴으로써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선거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선거문화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선진 외국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사례 연구
- 각종 선거時,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회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예산심의의 효율성 증대 방안 제시

□ **연구목적**

– 국가예산 심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제시

□ **연구내용**

–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선진 외국의 국회 예산심의제도 연구
– 우리나라 국회예산심의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국회예산심의제도 개선 대책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 2009. 1

■ **연구분야 :** 정치행정

■ **주　　제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 개발내용

□ **연구개요**

- 외부 전문가들이 주관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제시

□ **연구목적**

- 정부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국정과제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 분석 데이터 제공
- 효율적인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2008년도에 旣 발표된 국정과제들 중 수정 및 보완 되어야 할 사항 제시
-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국정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 2009. 1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2008 경제위기와 국민 계층의식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 **연구방법 :** 공동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여론조사와 심층연구를 통해 주관적 빈곤층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주관적 빈곤층 증가의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주관적 빈곤계층 의식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을 진단하고, 제반 요인들을 요소1분석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언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PART _ 3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54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1,791,157	7,595	1,798,752	1,359,522	439,23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고
8월	정무	18대 국회 3개월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자체	
9월	정무	민주당의 현주소 진단 및 지지기반 연구	자체	
9월	정무	당 정책연구소 발전방향과 향후 사업과제 분석	자체	
9월	국토해양	경인운하 적실성 분석 연구	외부전문가	
9월	정무	지지율 정체분석 및 당면과제	자체	
9월	기획재정	감세정책분석 및 대응방안	자체	
9월	정무	민주당의 비전, 정체성, 정책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9월	정무	국정패러다임 분석 및 대응방안	자체	
9월	정무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RAW DATA 분석	자체	
9월	정무	MB 9.9 국민과의 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자체	
9월	정무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 선언 분석	자체	
9월	기획재정	미국발 금융위기와 금융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연구	자체	
9월	정무	민주당의 현상황 분석 및 나아갈 방향	외부전문가	
9월	정무	뉴민주당 선언의 작성과정 연구	자체	
9월	정무	주요 정당의 현대화 역사와 시사점 연구	자체	
9월 ~11월	외교통상통일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 및 대응전략	자체	
9월 ~11월	외교통상통일	북한의 파상적 대남·대미 강경조치의 배경과 대응방안	자체	
9월 ~11월	외교통상통일	2012 국가비전과 추진 전략 구상	자체	
9월 ~11월	외교통상통일	남북관계 현황진단과 정상화 방안	자체	
9월 ~12월	외교통상통일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자체	
9월 ~12월	외교통상통일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 현황과 증진 방안	자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고
10월	정무	민주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월	기획재정	민생경제 영역의 정책과제 연구	자체	
10월	정무	민주당의 노선과 비전에 대한 사전적 고찰	자체	
10월	기획재정	금융위기의 현상과 대응방안 고찰	자체	
10월	국토해양	뉴타운사업의 개선방안	외부전문가	
10월	기획재정	(민주당식) 재정지출 확대방안	외부전문가	
10월	정무	2008년 미국 민주당의 주요 대선공약 연구	자체	
10월	국토해양	현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자체	
10월	기획재정	현 금융위기에 따른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성	외부전문가	
10월 ~11월	교육과학기술	국제중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자체	
10월 ~11월	교육과학기술	대학 등록금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자체	
11월	정무	오바마신드롬을 통한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외부전문가	
11월	기획재정	현 경제상황과 대응방안	자체	
11월	정무	뉴민주당의 비전 연구	자체	
11월	정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비전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11월	정무	오바마의 승리와 민주당의 비전	자체	
11월	기획재정	97년 외환위기와 현 금융위기와의 비교분석	외부전문가	
11월	국토해양	뉴타운 전략적 검토	자체	
11월	기획재정	네오뉴딜 전략연구	자체	
11월	국토해양	수도권규제완화 전략적 검토	자체	
11월	기획재정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11월	정무	뉴민주당선언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자체	
11월	정무	뉴민주당선언 준거형식 연구	자체	
11월	정무	정당의 현대화 가치에 대한 연구	자체	
11월	환경노동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 녹색성장론' 분석 및 쟁점	자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고
11월	환경노동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외부전문가	
11월	외교통상통일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 대응방안	자체	
11월 ~12월	기획재정	EU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그 시사점	자체	
11월 ~12월	기획재정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과 그 평가	자체	
11월 ~12월	보건복지가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공동	
11월 ~12월	보건복지가족	의사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공동	
11월 ~1월	환경노동	민주당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	
11월 ~1월	교육과학기술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공동	
11월 ~1월	교육과학기술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정보공개:학교서열화에 대한 대안연구	외부전문가	
12월	정무	유권자 지형분석 및 계층별 득표전략 수립 위한 연구	공동	
12월	교육과학기술	한국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외부전문가	
12월	정무	뉴민주당선언 해설	자체	
12월	기획재정	종부세 쟁점분석 연구	자체	
12월	정무	유럽선거제도 분석	공동	
12월	기획재정	당 경제정책 액션플랜 구축 방안	자체	
12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웹2.0세대 분석	외부전문가	
12월	정무	선거승리를 위한 당의 R.N.C 현대화 전략	자체	
12월	국토해양	4대강 하천정비 사업관련 예산 분석	자체	
12월	지식경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와 정당의 과제	외부전문가	
12월	환경노동	긴급구제플랜-일자리대책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12월	기획재정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연구	자체	
12월	정무	뉴민주당선언 관련 정당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자체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구분	일시 (기간)	장소 (대상)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심포지엄	8.27	국회	한국정치와 민주당의 역할	-1부:창립기념식 및 기조강연 -2부:심포지엄(통일외교안보,경제통상, 사회정책)	
포럼	9.17	국회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 -민주당의 선자리, 갈길	-민주당의 현주소와 진로모색	
포럼	9.24	국회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 -민주당, 무엇이 문제인가?	- 진보논객의 시선으로 본 민주당의 현주소와 미래	
포럼	10.1	국회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	-보수논객의 시선으로 본 민주당의 현주소와 미래	
포럼	10.28	국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문제점 진단과 해법마련	
포럼	11.6	국회	오바마 효과와 뉴민주당 플랜 -오바마 신드롬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미대선결과에 따른 국내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포럼	11.13	국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	-경제의 위기의식 고취 및 실물경제 대책방안 도출	
포럼	11.20	국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뉴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외교, 환경등 파급영향 대비	
포럼	11.27	국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저탄소·녹색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에너지기본계획등 문제점 검토	
포럼	12.4	국회	뉴민주당 교육정책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현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교육정책 비판과 교육선진화방안 모색	
포럼	12.11	국회	온라인을 장악하라 -웹2.0 세대가 본 민주당	-정치 대중화를 이끈 온라인 문화와 정치(선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	
포럼	12.18	국회	뉴민주당 긴급구제플랜 -일자리 대책	-대규모 실업사태를 탈피할 분야별 일자리 창출방안, 비정규직 문제 개선	

구분	일시 (기간)	장소 (대상)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9.29	국회	경제분야: 월가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진로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 및 평가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 모색 등	
토론회	10.1	국회	통일·남북관계분야: 10·4정상선언 1주년, 평가와 이행전략	-10.4 정상선언의 의미의 국민적 공감확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토론회	10.9	연구원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진단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의 토대 위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토론회	10.23	연구원	경제위기가 선거지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위기 상황이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대응전략 논의	
토론회	10.30	국회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	-미국 금융위기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비판과 대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대책	
토론회	11.9	국회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 정책전망 ;전망과 대책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망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미동맹과 북핵정책 전망과 대응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FTA 비준 전망	
간담회	9.8	렉싱턴 호텔	추석민심 여론조사 기획 간담회	-추석 민심 등 여론조사 기획을 위한 당내외 전문가 간담회	
간담회	9.21	당사	김효석원장 기자간담회	-월가의 몰락: 뭘 배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분	일시 (기간)	장소 (대상)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9.24	연구원	민주당의 진로와 발전방향	-여론조사 기획을 위한 당내외 전문가 간담회	
간담회	11.12	당사	오바마현상과 뉴민주당 플랜	-2008 미국대선결과 분석 및 오바마현상의 당내 벤치마킹	
간담회	11.13	연구원	뉴민주당의 '녹색전략,'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뉴민주당의 녹색전략 및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	
간담회	11.24	연구원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정보공개:학교서열화에 대한 대안 연구	-학업성취도 평가의 바람직한 모델과 평가결과의 적절한 활용방안	
간담회	11.26	연구원	새로운 정책 교육 분야 1차 간담회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및 정책 대안 개발	
간담회	11.27	당사	새로운 정책 통일 및 외교안보 정책간담회	-민주당의 기존 통일·외교·안보정책 정리 및 새로운 담론 형성	
간담회	12.2	연구원	뉴민주당선언 새로운 정책 전문가 간담회	-뉴민주당선언 '새로운정책' 분야	
간담회	12.11	당사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정보공개 :학교서열화에 대한 대한연구II	-지역, 계층간 교육격차에 따른 현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간담회	12.12	연구원	보건복지분야 특별과제 전문가 간담회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결방안 연구	
간담회	12.16	참여연대	새로운 정책 보건복지분야 정책간담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간담회	12.17	시민건강 증진 연구소	새로운 정책 보건복지분야 정책간담회	-보건의료정책 공공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간담회	12.18	연구원	보건복지분야 특별과제 전문가 간담회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구분	일시 (기간)	장소 (대상)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12.29	연구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민영화방안 정책간담회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통해 본 개혁방안	
여론조사	9.3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세제개편효과 및 수혜자 –민주당 감세안	
여론조사	9.10 ~9.11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 '국민과의 대화' 평가 및 추경안	
여론조사	9.10 ~9.11	연구원	당 발전을 위한 중앙당 당직자 FGI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현주소와 당의 전통적 지지층 복원과 민주당의 진로에 대하여 논의	
여론조사	9.18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정부부동산정책 및 경제정책 평가	
여론조사	9.24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종부세 및 대체복무제 관련	
여론조사	9.30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종부세 및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10.1 ~10.2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종부세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	10.8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사이버모욕죄, 종부세 및 경제관련	
여론조사	10.15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쌀직불금, 금산분리, 종부세 등 –경제부총리제신설 등	
여론조사	10.16	연구원	지역 현안조사	–보궐선거지역 정책현안(충남)	
여론조사	10.16	연구원	지역 현안조사	–보궐선거지역 정책현안(인천)	
여론조사	10.15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쌀직불금, 10.21 부동산대책, 은행지급보증, 종부세 등	
여론조사	10.20 ~10.23	연구원	당 진로 및 발전방향 관련 연구	–FGI조사를 통해 당의 현 상황 진단과 당의 진로 및 발전방향 관련 전략수립 위해 국민여론 수렴	

구분	일시 (기간)	장소 (대상)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여론 조사	10.23	연구원	지역 현안조사	-보궐선거지역 정책현안(충남)	
여론 조사	10.24	연구원	지역 현안조사	-보궐선거지역 정책현안(인천)	
여론 조사	10.24	연구원	지역 현안조사	-보궐선거지역 정책현안(충남)	
여론 조사	10.30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금산분리완화, 신문-방송겸영 -한미FTA, 종부세 등	
여론 조사	11.4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수도권규제완화 및 부동산대책 평가	
여론 조사	11.5	연구원	당 진로 및 발전방향 관련 연구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당의 현상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여론 수렴	
여론 조사	11.14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종부세개정방향, 한미FTA, 남북 문제	
여론 조사	11.20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수도권규제완화, 종부세감면대상 -장기보유기간, 감세방향 관련	
여론 조사	11.22	연구원	현안조사	-교육정책 관련	
여론 조사	11.26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남북문제 및 경제문제 관련	
여론 조사	11.29 ~12.1	연구원	정기 전화면접 조사	-유권자 지형분석 및 계층별 득표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여론 조사	12.1	연구원	여론조사	-뉴민주당선언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여론 조사	12.3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4대강정비사업과대운하관련	
여론 조사	12.10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교육정책 관련(교육세문제등)	
여론 조사	12.17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한미FTA 관련	
여론 조사	12.21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경제관련(금산분리완화,출총제 폐지등)	
여론 조사	12.28	연구원	ARS 정기 여론조사	-방송법 관련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18	충남 천안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1	대구동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1	대구 수성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2	대구 중남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2	대구 달성군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3	경북 김천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8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8	충북 충주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0.29	광주 광산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4	서울 강남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4	서울 강남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5	서울 서초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5	서울 서초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5	경북 포항북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6	경남 통영고성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중앙당 양성평등교육	11.6	중앙당 대회의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2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연1회 의무교육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6	경남 함안합천의령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1	부산 동래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1	부산 진구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2	경북 영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2	경북 경산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3	서울 광진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3	서울 영등포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4	경기 하남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4	경기 기흥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4	서울 양천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8	서울 시흥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8	충북 보은옥천영동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8	경기 성남분당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8	충북 청주상당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9	서울 은평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19	강원 원주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0	전북 김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0	전북 완주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0	대전 동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1	광주 동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1	광주 남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최고위원 대학생 간담회	11.24	고려대 국제회의실	노사모와 오바마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5	경기 용인처인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5	경기 수원장안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5	경북 경주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6	경기 이천여주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6	강원 춘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6	대구 수성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6	대구 동구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7	서울 용산구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1.27	경남 김해시갑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4	경남 남해하동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최고위원 대학순회강연	12.4	경북대 공대	글로벌경제위기 속 일자리 창출방안	
대학생 정책제안 스피치대회	12.6	민주당 대회의실	사회 주요이슈, 민생경제,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정책제안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9	전남 나주화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0	전남 순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1	전북 전주완산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1	전북 정읍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1	강원 홍천횡성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5	광주시당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7	인천 남동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7	인천 남동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7	경남 창원을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8	서울 관악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8	경기 구리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9	광주 서구갑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19	울산 울주군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2008년 여대생 리더십 캠프	12.22 ~24	경기 가평 용두암수련원	사회 주요이슈, 대학사회와 직결된 주제 선정하여 강연, 토론, 발표회, 체험학습 등	
제5차 대학생정책자문단 오리엔테이션	12.27 ~28	경기 가평 풍림리조트	상견례 및 전체강의	
1만핵심당원리더십강좌	12.29	경기 화성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나아갈 길	
제5차 대학생정책자문단 발족식	12.30	국회	발족식 기념행사 및 특강	

라. 정책홍보

일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8.26	각 언론사	보도자료	연구원 조직체계 및 운영시스템	
8.27	각 언론사	보도자료	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9.5	각 언론사	보도자료	정부세제 개편안 관련	
9.11	각 언론사	보도자료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9.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민주정책포럼 취지 및 일시 장소	
9.17	인터넷	사이트 게재/언론배포	제1차 민주정책포럼	
9.24	인터넷	사이트 게재/언론배포	제2차 민주정책포럼	
9.25	각 언론사	보도자료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9.26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인사말, 설립취지, 최근 주요행사, 주요일정	창간호
10.1	인터넷	사이트 게재/언론배포	제3차 민주정책포럼	
10.7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뉴민주당비전자료집II, 제1·2차민주정책토론회, 주요행사 일정 안내	제2호
10.8	각 언론사	보도자료	사이버 모욕죄 신설 관련	
10.15	각 언론사	보도자료	쌀직불금 국정조사 관련	
10.20	각 언론사	보도자료	종부세 존속 관련	
10.22	각 언론사	보도자료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공개 관련	
10.24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제4차 민주정책포럼, 경제위기극복 대토론회, 1만핵심당원 교육연수, 주요행사 일정	제3호
10.28	인터넷	사이트 게재/언론배포	제4차 민주정책포럼	
10.29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 1만핵심당원 교육연수, 주요일정	제4호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 자료집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1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김효석 원장 〈기자간담회〉자료집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2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일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뉴민주당 비전 자료집-1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2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3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1차 민주정책토론회 자료집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3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1차 민주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2차 민주정책토론회 자료집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2차 민주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0.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뉴민주당 비전 자료집-2	
1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4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1.5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홈페이지 홍보, 제5차 민주정책포럼, 경제위기극복 국민대토론회 결과, 주요일정	제5호
1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5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1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5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5차 민주정책포럼	
11.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6차 민주정책포럼	
11.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공개간담회- 오바마현상과 뉴민주당 플랜	
11.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7차 민주정책포럼	
11.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6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11.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경제위기극복국민대토론회 자료집	
11.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경제위기극복국민대토론회-녹취록	
11.18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제7차 민주정책포럼, 제3차 민주정책토론회, 대학생정책자문단, 주요일정	제6호
11.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3차 민주정책토론회 자료집	
11.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7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일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1.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8차 민주정책포럼	
11.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7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1.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8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1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9차 민주정책포럼	
1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8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2.3	인터넷	e-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제8·9차 민주정책포럼, 1만핵심당원 교육연수, 주요일정	제7호
12.3	각 언론사	보도자료	SOC 예산 관련	
1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9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1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10차 민주정책포럼	
1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9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12.10	각 언론사	보도자료	예산안 처리시한 관련	
12.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언론배포	제11차 민주정책포럼	
12.30	각 언론사	보도자료	"MB 악법 " 저지투쟁 관련	
12.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제10차 민주정책포럼 결과보고서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8.27	심포지엄 자료	창립기념식 및 기념심포지엄 -한국정치와 민주당의 역할	자체발간	1,000부/행사장 배포	
9.17	포럼자료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 -민주당의 선자리, 갈길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9.21	기자간담회 자료	연구원장 기자간담회 - 월가의몰락, 뭘배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체발간	500부/국회의원, 언론	
9.24	포럼자료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 -민주당,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발간	150부/국회의원, 언론	
9.25	자료집	뉴민주당 비전 자료집 I	자체발간	500부/시 · 도당, 국회의원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9.29	토론회자료	월가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진로	자체발간	250부/국회의원	
10.01	포럼자료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	자체발간	150부/국회의원, 언론	
10.1	토론회자료	10.4정상선언 1주년, 평가와 이행전략	자체발간	250부/국회의원	
10.3	자료집	뉴민주당 비전 자료집 II –2008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발간	1000부/시 · 도당, 국회의원	
10.13	자료집	뉴민주당 비전 자료집 I 추가제작	자체발간	200부/시 · 도당, 국회의원	
10.18	교육연수 자료	핵심간부 리더십강좌	자체발간	10,000부/교육자 배포	
10.28	포럼자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자체발간	150부/국회의원, 언론	
10.30	토론회 자료	경제위기극복 국민대토론회	자체발간	500부 /국회의원, 당내배표	
11.06	포럼자료	오바마 효과와 뉴민주당 플랜 –오바마 신드롬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자체발간	150부/국회의원, 언론	
11.13	포럼자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11.19	토론회 자료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정책전망 –전망과 대책	자체발간	350부 /국회의원, 당내배표	
11.20	포럼자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뉴민주당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11.27	포럼자료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저탄소·녹색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12.04	포럼자료	뉴민주당 교육정책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12.11	포럼자료	온라인을 장악하라 –웹2.0 세대가 본 민주당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12.17	자료집	미국의 변화를 위한 청사진 –오바마와 바이든의 계획 및 연설문	자체발간	100부/연구원내	
12.18	포럼자료	뉴민주당 긴급구제플랜 –일자리 대책	자체발간	200부/국회의원, 언론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시 (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8.27	국회	연구원 창립이사회	민주정책연구원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운영규정 심의의결, 이사선임, 사업계획서 채택	
9.5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상견례 및 활동계획 논의	
9.11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2차 회의	4/4분기 연구과제 선정	
9.19	연구원	연구원 전체 워크숍	연구사업에 대한 전망과 비전모색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 논의	
9.25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3차 회의	비전위원회 구성관련 논의	
9.25	청풍리조트 (제천)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충북, 강원)	민주시민교육	
9.28	연구원	연구원장단&연구기획위원회위원 워크숍	정책연구소 활동계획 및 연구과제 확정	
9.30	연구원	제2차 이사회	2008년 4/4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1	한화리조트 (해운대)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부산, 울산, 경남)	민주시민교육	
10.1	한화콘도 (제주)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제주)	민주시민교육	
10.6	예술회관 (대구)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대구, 경북)	민주시민교육	
10.7	지식경제연구원 (천안)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대전, 충남)	민주시민교육	
10.8	중흥골드스파 리조트(나주)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광주, 전남)	민주시민교육	
10.9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5차 회의	뉴민주당 플랜 논의	
10.10	문화의전당컨벤션센터(수원)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경기)	민주시민교육	
10.16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6차 회의	뉴민주당 '노선' 분과 논의	

일시 (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10.18	연구원	1만 핵심당원연수 관련 교육연수담당자 전체회의	교육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논의	
10.20	지역위사무실 (강서구)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서울, 인천)	민주시민교육	
10.21	전통문화센터 (전주)	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전북)	민주시민교육	
10.24	민주당사	이화여대생과의 간담회	대학생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모습 현대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모습	
10.28	국회 의원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협의회	각당 연구소 정책협의회 _ 정책정당화 실현을 위한 토론회 관련 논의	
10.30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7차 회의	정책연구실 특별과제 심의	
11.6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8차 회의	미국대통령선거 결과 및 오바마 현상 논의	
11.11	렉싱턴호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정책정당화 실현을 위한 토론회	
11.13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9차 회의	'노선' 분과 시안 토론	
11.20 ~21	충북제천 청풍리조트	중앙선관위 주최 각당 연구소 워크숍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관련 토론회 정책연구소 현황 및 운영 관련 간담회	
11.26 ~27	일본	당대표 일본방문 해외연구지원	당 대표 수행 통역 및 인터뷰 안내	
12.4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10차 회의	뉴민주당 플랜 '새정치, 새정당' 시안 토론	
12.5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한국정당학회 주최 특별학술회의	한국정당 당원의 정치의식과 정당정치	
12.11	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의 11차 회의	2010년 지방선거 대비 용역제안서 심의	
12.15	국회 의원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협의회	각당 연구소 정책협의회 _ 2008년 연구사업 관련 정리 및 제안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8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18대 국회 3개월 평가와 향후 대책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회로 출범한 18대 국회 3개월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취해야 할 전략정책적 스탠스를 점검하고, 향후 당의 중장기적 진로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함

2. 연구방법

- 전문가의 의견 수렴
- 대국민 여론 수렴
- 당 및 연구원 전략가, 정책가 브레인스토밍

3. 연구내용

- 이명박 정권 6개월에 대한 평가
- 촛불 민심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민주당 쇄신의 방향에 대한 연구
- 민주당의 중점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및 새로운 리더십 창출 연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민주당의 현주소 진단 및 지지기반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양대선거 패배이후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과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

2. 연구방법

- 당 자체 ARS 여론조사를 기초로 민주당 지지도에 대한 추이 분석
- 촛불 정국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분석기사 등 수집 분석
- 지역별 지지도 분석을 통한 민주당의 지지기반 분석

3. 연구내용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이미지 비교 분석
- 전체 유권자 규모의 분포 및 지형 분석
- 각 정당 지지층의 분포 및 지지계층의 특성 분석
- 정책적 대안 마련 및 다면적 전략 실행(안) 제언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당 정책연구소 발전방향과 향후 사업과제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정책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리포트

2. 연구내용

- 정책적 관점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 올릴 컨텐츠 정리
- 외화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 정책현안 개요정리
  - 현안적 관점의 방향성
  - 전략과제적 관점의 방향성
- 민주당의 현주소와 정책연구원의 활동방향 제안
  - 우선적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적 분석 제시

3. 기대효과

- 지지층 복원을 위한 정책정당의 토양으로서의 역할
- 선거승리를 위한 공약개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경인운하의 적실성 분석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경인운하의 적실성 분석하여 당의 정책과제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 검토

2. 연구내용

- 경인운하 개요 파악
- 경인운하의 추진과정 분석
-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 개발론과 환경론 입장 비교 정리
  - 개발론적 관점의 핵심 포인트 분석
- 당의 정책적 스탠스를 정립하기 위한 고려사항 분석

3. 기대효과

- 환경과 개발관련 정책과제의 분석틀 마련
-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향후 당의 대응방안 마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지지율 정체분석 및 당면과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당의 지지율 정체현상을 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 제시

2. 연구내용

- 지지율 정체여부 정리
-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춘 당관련 상황 예측
- 향후 정치일정과 대응방안
-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스몰프로젝트론(스몰딜 포함)과 올인론의 검토
  - 전략적 대응방안 / • (총론) 현안중심 대응방안
  - 원론적 대응방안 / • 현안목록
  - (각론) 우리가 할 일은? (추석민심을 잡기위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3. 기대효과

- 당의 지지세력 결집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 스탠스, 정책 대안,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감세정책분석 및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MB 정부의 감세정책의 실제와 효과 분석, 당의 대안 제시

2. 연구내용

- MB 정부의 감세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
- 감세정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주요국의 감세정책 사례 분석
- 당의 대응방향 및 구체적 대안
  - MB 정부의 감세정책 = 양극화 심화 '차별감세정책'
  - 당의 부가가치세 일괄 감세안 재검토 : 진보적 감세정책 '역누진 균형감세'
  -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누진형 차등감세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집중 완화
  - 1가구 1주택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대출이자 상한제 방안
  - 대학등록금, 최저생활의 보장 등 직접적인 수혜층이 드러나는 직접 지원정책 필요
-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예상 및 대응 필요

3. 기대효과

- 당의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스탠스 제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민주당의 비전, 정체성, 정책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비전, 정체성, 정책 등의 복합적 원인 분석을 통해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2. 연구내용

- 비전, 정체성, 정책, 리더십 등 민주당의 문제점 복합분석
- 중도적 진보주의를 통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
-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서 민주당식 생활정치 모색

3. 기대효과

- 다양한 원인분석을 통해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국정패러다임 분석 및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1. 연구목적

- MB 정부의 국정패러다임을 분석 및 대응방안

2. 연구내용

- MB 정부의 국정패러다임 분석
- MB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스타일 예측 및 대응방안 제시
  - 9.1 MB 정부 감세정책분석
  - 기획재정부의 오류 분석
    2005. 11. 1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 감세정책분석
  - 9.1 세제개악 중 부동산세제 개편 분석
    양도소득세 개편개요 / 종부세 개편개요
  - 민주당의 대응방안
    정무적 대응 / 정책적 대응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정책적 스탠스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RAW DATA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RAW DATA 분석을 통한 당의 전략적 정책활동 스탠스 연구

2. 연구내용

-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RAW DATA 활용
- 여론조지형상 MB 정부 감세정책의 득실 분석
- 우파세력분석
- 민주당 관련 사항
  - 지지구조 분석
  - 빈약한 지지 원인추론
  - 대안의 기본방향 제시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정책활동 스탠스 제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MB 9.9 국민과의 대화 분석 및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MB가 9.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녹색성장론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2. 연구내용

- 녹색성장론의 연원을 분석
- 녹색성장론의 한계
  - 원전 확대와 같은 반환경적 정책의 우선 포기 필요
  - 투자재원, 중단기적 정책목표 등에 있어서의 현실성 부족
  - 위기를 맞을 경제분야에 대한 대비 부재
  - 단기적 경기부양 욕구 우선적 폐기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깊은 대처 필요
- 당의 대응방안
  - 참여정부시절 녹생성장을 제창한 사실과 이후 녹색성장을 당이 확대발전 시키지 못한 상황을 정리

3. 기대효과

- 환경과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당의 전략적 정책활동 스탠스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 선언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 선언 분석을 통한 당의 새로운 진로 모색

2. 연구내용

- 뉴민주당 위원회의 활동목표와 방향
- 1992년 미국 민주당 선거강령
- 1996년 새로운 진보 선언
- 2000년 하이드파크선언
- 2001년 뉴민주당 선언
- 2001년 뉴민주당 신조
- 2006년 아메리칸드림 이니셔티브
- 1998년 영국 노동당 선거강령

3. 기대효과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는 그릇된 진보노선을 청산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재집권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성공모델임.
  그 주요 현대화선언은 이를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뉴민주당 선언의 이해와 벤치마킹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임

【별 첨】

연구 ·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미국발 금융위기와 금융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법 · 제도 정비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리 금융정책 점검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안 제시

2. 연구내용

- 현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의 문제점 연구
- 금융시장의 건정성과 투명성 강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강화방안 연구
- 실물경제 파급 최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자통법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 연구

3. 기대효과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안 제시
- 현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 제시
-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 위상 확립에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민주당의 현상황 분석 및 나아갈 방향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역사로부터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민주당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함

2. 연구내용

- 민주당이 처해있는 현재의 문제점
- 민주당의 변화의 계기 및 지향점
- 민주당의 회생 방안

3. 기대효과

- 민주당의 문제점과 지향점,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천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 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뉴민주당 선언의 작성과정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 선언의 작성 과정에 대한 벤치마킹

2. 연구내용

- 미국 민주당 대선강령 작성과정 정리
  - 강령위원회(Platform Committee)와 강령기초위원회(Platform Draft Committee) 구성
  - 강령을 기초하기 전에 2주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령 모임(Platform Meeting)'을 개최
  - 동시에 강령기초위원회의 '전국 공청회' 개최
  - 강령기초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완료
  - 강령위원회는 초안을 검토, 최종안을 결정, 전당대회에 제안

3. 기대효과

- 뉴민주당 선언의 작성과정의 이해 심화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주요 정당의 현대화 역사와 시사점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의 역사와 배경 이해

2. 연구내용

- 1970년대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국정실패, 1980년대 신우파의 득세, 1990년대 현대화를 통한 집권과정 비교
- '현대화' 의 핵심 내용 정리
  - '현대화' 는 구좌파의 온정 vs 냉혹 구도와 신우파의 유능 vs 무능 구도를 넘어서 '온정적이면서 동시에 유능' 하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임
  - 현대화는 좌우와 다를 뿐 아니라 수준 높은 대안을 발전시켜 정치 구도를 삼각화(triangulation)하는 것임
  - 현대화는 중산층과 서민의 지극히 평범한 잘살려는 '열망' 을 '욕망으로 경멸하는 관념적 진보노선에 근거한' 질투의 정치(politics of envy)를 종식시키는 것임

3. 기대효과

- 민주당 현대화의 이해 심화
- 뉴민주당선언의 기본내용과 향후 로드맵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1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 및 대응전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2. 연구내용

- 오바마 차기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오바마 차기정부의 대한반도정책 현안과 전망
  - 오바마 차기정부와 한미관계
  - 오바마 차기정부와 북미관계
- 한국의 대응전략
  - 역대 한국정부와 한미관계
  - 이명박정부의 한미관계
- 전략적 고려사항
  - 한국 정치권의 역할

3. 기대효과

-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을 통한 호혜적 한미관계 형성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1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북한의 파상적 대남·대미 강경조치 배경과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북한의 파상적 대남·대미 강경조치 배경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2. 연구내용

- 북한의 파상적 강경조치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대남·대미 파상공세 배경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및 오바마 당선자의 대응
- 전략적 대응 및 고려사항

3. 기대효과

- 북한의 파상적 강경조치 배경 파악 및 효과적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1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2012년 국가비전과 추진 전략 구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민주당 뉴비전선언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 제시

2. 연구내용

- 2012 국가미래의 청사진
- 통일 및 외교안보의 국가비전과 목표
- 통일 및 외교안보 정책 기조
- 통일 및 외교안보 주요정책 과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약속(안)

3. 기대효과

- 민주당의 통일 및 외교안보의 비전, 새로운 통일·외교정책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1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남북관계 현황진단과 정상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남북관계 현황 진단과 정상화 방안 마련

2. 연구내용

- 남북당국에 대한 요청
  -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과 준수
  -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 필요
  - 한반도평화 안정적 관리
- 국민에 대한 당부
  -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 재개지지
  - '사생공영의 길' 참여
- 야3당의 역할

3. 기대효과

- 남북관계 경색 해소 및 정상화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2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민주당의 통일 및 외교안보 분야 새로운 정책 수립

2. 연구내용

– 남북 상생평화와 한반도 시대 구현 전략
  •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 고품격 국가 추구
  • 작지만 강한 군대로 평화강군 지향

3. 기대효과

– 민주당의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 담론 형성

– 민주당의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 청사진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2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 현황과 증진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분석과 증진 방안 모색

2. 연구내용

- 남북교류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현황
  -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현황
  - 기업 차원의 교류협력 현황
  -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협력 현황
- 남북교류협력의 축소 원인과 증진 방안

3. 기대효과

- 남북교류협력 분석을 통한 증진 확대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민주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제분야)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연구내용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재분석
-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3. 기대효과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정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몸소 실천하는 민주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민생경제 영역의 정책과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선언의 새로운 정책마련을 위한 민생경제영역의 정책과제 정리

2. 연구내용

- 경제분야의 정책 현대화에 대한 총론적 검토
  - 경제담론에 대한 고찰
  -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의 경제담론 고찰
  - 민주당식 경제담론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식 성장패러다임과 민주당식 성장패러다임 검토
- 뉴민주당선언의 새로운 정책마련을 위해 현 한국사회의 민생경제과제 관련 정책상황 정리
  - 부동산정책의 추이 및 내용
  - 자영업의 한계상황
  -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등등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정책대응 방안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민주당의 노선과 비전에 대한 사전적 고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 선언을 위한 당의 노선과 비전논란에 대한 역사와 내용 고찰

2. 연구내용

- 당의 노선과 비전에 대한 열린우리당 이후 논의과정과 내용
- 당의 지지도 변화 추이와 지지율 이반 원인
- 전략적 타겟팅 대상
- 전략적 정책대안
- 전략적 정책활동의 기본틀

3. 기대효과

- 민주당 정강정책상의 각 분야별 기본방향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금융위기의 현상과 대응방안 고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금융위기의 현상과 대응방안 고찰

2. 연구내용

- 금융위기의 각종 현상, 정부대응방안, 향후 과제 분석
- 10.19 금융대책과 은행유동성 문제
  - 4대 은행들의 가계대출 상황
  - 은행채 문제
    - ➡ 제2금융권 자금고갈
- 국가 외화부도에 대한 우려 증가
  - 신흥국 중 최대의 금융혼란
  - 외평채 CDS 프리미엄 4.88% (8월보다 4배로 급증)
- 서민경제
  - 주택담보대출
  - 비은행권 가계채무 상황
- 실물경제 위기 ➡ 중소기업 위기 가중

3. 기대효과

- 금융위기와 관련된 당의 대응방향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뉴타운사업의 개선방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타운사업의 현황 및 과제 분석

2. 연구내용

- 뉴타운사업의 현황
-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 뉴타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분석
- 뉴타운정책 개선방안 제안
  - 재정착률 확대
  - 조합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 공공의 역할 확대 등

3. 기대효과

- 주거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실행 프로그램 마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민주당식) 재정지출 확대방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 마련

2. 연구내용

- 2009년 예산안 기본구조 분석
- MB정부 재정지출 확대안 분석
- 민주당다운 재정지출 확대방안 제안
  - 토목사업중심의 구시대형 뉴딜이 아니라 국민을 직접 도우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대안이 필요함.
  - 경제위기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그룹에 대한 사회보호 대폭 확대
  - 국가경쟁력의 중심인 중산층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 확대
  - 특별대책안 : 긴급생계구호제도 확대

3. 기대효과

- 위기상황 예측에 기초한 특별대책안 마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2008년 미국 민주당의 주요 대선공약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오바마의 주요 대선 공약 정리

2. 연구내용

- 경제공약
  - 경제회생, 중산층감세, 공정한 무역,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 등
- 세금공약
  - 긴급구제와 투자를 위한 감세, 세법 간소화
- 환경공약
  - 10년내 에너지독립, 500만개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감축
- 교육공약
  - 조기교육 확대,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대학교 학자금 지원 확대

3. 기대효과

- 오바마 대선 공약의 벤치마킹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현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함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 모색을 통한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과밀, 지방공동화, 국토 균형발전 저해 등 문제점 연구
- 지역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연구
-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적 대안 제시

3. 기대효과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정치적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위상정립 제고에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현 금융위기에 따른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미국발 금융위기 원인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제로의 전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제시
- 민주당의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실물경제 안정화 방안 연구

2. 연구내용

-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점 연구
- 실물경제로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민주당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3.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경제위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실물경제 침체를 최소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11월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국제중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 및 대안 모색

2. 연구내용

- 국제중 문제 현황, 교육 체계상 문제점 분석, 민주당 입장 및 대안

3. 기대효과

- 국제중 문제를 중심으로 MB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서민·중산층의 교육 부담이 될 수 있는 국제중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대안 정당 이미지 제고
- 국제중 의제를 국회로 끌어들여 교육 의제를 선점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기반 마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11월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대학 등록금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서민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 및 대안 모색

2. 연구내용

- MB정부 등록금 대책 허구성 비판, 대학 등록금 현황과 문제점 진단, 민주당의 대안 제시

3. 기대효과

- 대학 등록금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여 서민·중산층의 가계 부담 해소
-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제 선점 및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이미지 제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오바마신드롬을 통한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신 진보주의 시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미 대선에서의 오바마 승리의 여러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어, 한국정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 확립에 기여함

2. 연구내용

- 미국의 시장중심의 보수주의 시대에서 신 진보주의 시대로의 변화의 의미
- 오바마의 도전자브랜드의 교훈점으로 본 민주당의 미래
- 오바마의 인터텟선거에서의 승리에서 본 한국의 미디어 정치 현황
- 미 대선에서의 캠페인의 지속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
- 오바마의 정책경쟁의 선순환의 결과 및 한국의 정당의 정책경쟁

3. 기대효과

- 미 대선에서의 오바마신드롬을 통해 한국정치 발전 및 제일 야당으로서의 미래 비전의 발판을 마련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현 경제상황과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연구내용

- 외부 전문가 초청 내부 토론회 개최
- 경제위기 극복의 해외사례 연구
- 1997년 당시의 외환위기와의 비교 연구
- 경제위기가 한국의 서민과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경제위기상황을 정치적 신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

3. 기대효과

-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정립 및 실현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뉴민주당의 비전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의 비전제시를 위한 기본안 마련

2. 연구내용

– 민주당의 현재
– 지난 5년 정치·정책상황 정리
– 민주당의 가치
– 해외 사례의 검토 : 집권을 위한 외국정당의 변화
  • 오바마의 승리와 민주당
  • 정책적 시사점
– 한국 민주당의 준비 : '뉴민주당 플랜' 과 '뉴민주당 비전위원회'
  • 뉴민주당 플랜
  • 뉴민주당 비전위원회

3. 기대효과

– 당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형성하기 위한 홍보스탠스 정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비전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마감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는 새로운 정치비전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새로운 비전과 가치
- 새로운 정책과 전략
- 변화를 위한 도전

3. 기대효과

-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오바마의 승리와 민주당의 비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오바마의 승리의 배경 및 공약 분석

2. 연구내용

- 도전자 브랜드의 구축
- 진보정당의 운동성 회복
- 풀뿌리 네트워크 활성화
- 공감정치 구현

3. 기대효과

- 민주당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구체화 방안 마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97년 외환위기와 현 금융위기와의 비교분석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1997년 외환위기와 현 금융위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민주당의 경제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1997년 외환위기와 현 금융위기 비교분석
-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도덕적해이 등 문제점 연구
- 적정 외환보유고 및 외화조달 방안 연구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3. 기대효과

-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뉴타운 전략적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지방선거를 대비한 뉴타운 관련 전략적 고려사항 분석

2. 연구내용

- 뉴타운사업 문제점 현황
- 문제발생의 원인
- 국토해양부 정책 분석
- 전략적 개선안 제시
  - 뉴타운을 대체할 뉴-웰타운 제시
  - 무지개프로젝트 및 일본 마츠쯔구리 사례
  - 창조도시전략을 포함한 도시재창조 방안

3. 기대효과

- 당의 뉴타운 실행방안 개선안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네오뉴딜 전략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MB 정부의 올드뉴딜 분석 및 민주당식 네오뉴딜대안 연구

2. 연구내용

- 올드뉴딜의 문제점 분석
  - 시대상황변화, 산업구조변화
  - 한국적 SOC 구조와 미국 SOC 구조 비교
- 네오뉴딜의 방향성 및 정책대안 연구
  - 새로운 산업구조에 입각한 새로운 뉴딜의 방향성 제안
  - 일자리창출 및 산업부대연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방안 제안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정책스탠스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수도권규제완화 전략적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도권표심을 고려한 수도권 집중방지정책에 대한 당의 스탠스 정립을 위한 연구

2. 연구내용

- 수도권규제 현황
- MB정부의 수도권 집중 방지정책 폐기시도에 대한 평가
- 수도권 집중 방지대책 폐기에 대한 찬반론 분석
  -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거주자 및 원적자 여론동향과 전국적 여론지형 비교 분석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규제관련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
  - 서울과 지방의 비간섭형 상호발전전략의 가능성 제시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정책스탠스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의 경제정책 분석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민주당의 경제정책 수립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미 대선후보(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비교분석
- 당선자에 대한 경제정책(FTA 등) 연구
- 당선자의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R&D 투자방안 연구
- 민주당 경제정책 수립의 방향성 연구

3.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일맥상통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뉴민주당선언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선언을 위한 여론조사의 핵심사안에 대한 정리

2. 연구내용

-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여론분석
- 민주당의 주요정책의 방향성
- 당의 비전과 가치의 방향성에 대한 여론조사
  - 기회, 정의, 연대의 가치성 분석
  - 중도개혁주의과 중도적 진보주의 또는 진보적 중도에 대한 여론
- 최우선 민생과제 도출
- 기타 정무적 상황에 대한 여론지형 분석

3. 기대효과

- 뉴민주당선언을 위한 여론조사 중 당의 노선, 비전, 가치 및 핵심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 및 뉴민주당선언의 방향성에 대한 리포트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뉴민주당선언 준거형식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선언의 준거형식을 삼을 수 있는 외국 사례 연구

2. 연구내용

- 뉴민주당선언의 기본틀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 사례
  - 미국 하이드파트선언과 신진보선언
  - 유럽의 제3의 길 선언
- 뉴민주당선언의 형식과 내용의 기본형식 제안

3. 기대효과

- 뉴민주당선언에 대한 이해확대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정당의 현대화 가치에 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 선언의 '새로운 가치' 에 대한 연구

2. 연구내용

– '가치' 는 소소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끊임없는 이전투구로 정치혐오를 유발하거나 정치적 방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 현대화의 가치인 기회·책임·공동체의 의미

- 기회(opportunity for all): 신우파의 '특권' 과 구좌파의 '균등한 결과' 가 아닌 '균등한 기회' 를 강조함으로써 신우파 · 구좌파와 다른 '정의' 의 가치임
- 책임(responsibility from all): 신우파의 일방적, 전통적 의무(duty)와 구좌파의 일 방적 권리가 아닌 '호혜적 책임' 을 강조함으로써 신우파 · 구좌파와 다른 '시민권' 의 가치임
- 공동체(community of all): 신우파의 시장중시와 구좌파의 국가중시가 아닌 국가 · 시민사회 · 시장의 균형 잡힌 사회를 추구하는 '유토피아' 의 가치임

3. 기대효과

– 뉴민주당 선언의 '새로운 가치' 의 이해 심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론' 분석 및 쟁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60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는 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과 원자력 확대 등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민주당의 녹색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이명박 녹색성장론 내용과 추진현황 분석
- 이명박 녹색성장론의 주요 쟁점사항 분석
- 민주당의 전략 방안

3. 기대효과

- 현 정부 추진중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 협약 등 각종 환경·에너지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론과의 상호충돌 지점 등 분석을 통해 한계와 문제점 도출
- 녹색성장론에 맞서는 민주당의 향후 전략적 방향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에너지 정책 추진, '기후변화 리더국가', SOC 건설 토건 경제를 지양하는 '그린경제, 그린뉴딜 전략' 의 3대 방향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신성장 패러다임의 허구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환경정책 마련

2. 연구내용

-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문제점 및 대안
- 저탄소 녹색사회와 농업의 관계 및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

3. 기대효과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민주당의 환경정책 실현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한·미 FTA 비준처리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함
- 한·미 FTA 비준처리안에 대한 민주당 대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 그리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을 고려한 처리 논의 정리
- 농업 등 FTA 체결로 인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연구

3. 기대효과

-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협상의 재검토 논의 등 다양한 처리방안 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2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EU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그 시사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2000년 EU 차원에서 채택한 사회통합과 환경을 존중하면서도 높은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발전모델인 리스본 전략을 분석,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가발전전략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연구내용

- 과학기술지식창출 및 확산, EU 단일시장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성장 등 주요 핵심전략과 관련한 EU국가의 경쟁력을 분석,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

3. 기대효과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기조에서 나온 미국발 금융위기에 더하여 고령화와 양극화의 추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리스본전략은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2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과 그 평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부동산 버블 붕괴후 시행된 일본정부의 정책대응을 분석,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연구내용

-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조세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기본 기조와 이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 감세와 토목건설 위주의 공공정책은 재정적자의 심화를 초래하고, 고령화·정보화 등 새롭게 등장한 사회경제적 추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 관료와 금융자본, 건설족으로 대표되는 3자간의 유착관계는 시장과 재정의 규율과 책임의 부재 속에서 금융구조개혁을 지체
- 시장의 규율과 책임성을 확립하고 불평등의 심화추이에 적극 대처하며, 토목건설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한 사회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정책기조의 방향전환이 요구

3. 기대효과

- 유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향후 바람직한 재정정책이나 공공투자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2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 기능을 지닌 사회복지 영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고조됨
- 이에 따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
- MB정부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사회복지 예산 축소와 민간위탁운영으로 종사자 처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이에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추이 분석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급여실태 분석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3. 기대효과

-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처우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으로 연결되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
-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회복지 직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2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의사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로 수년 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 의료기관의 심각한 의료공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의료영리화 추구 성향 강화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의료인이 몰리는 반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진료과별 불균형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의사인력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의료인력 양성 현황 분석
- 의료기관 현황 분석
- 해외 의료인력 양성 현황 분석
-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3. 기대효과

- 의사인력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공급불균형의 문제해결 방안 제시
- 공적 의사인력 수급방안 제시를 통해 의료 공공성 확대에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민주당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 경제위기 여파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주당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악과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 등 문제점 연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저지등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를 위한 민주당 대안 제시

3. 기대효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위상 확립에 기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월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해 교육 투자를 확대를 통한 교육 질 제고로 일자리 문제 해소에 일조

2. 연구내용

- MB정부 일자리 대책 비판,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기조, 민주당의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MB 일자리 대책의 허구성 폭로, 경제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 획득을 통해 일자리 현실화로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성 확보
- 민주당 일자리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신뢰성 획득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월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정보 공개 ;
학교서열화에 대한 대안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일제고사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 결과를 공개하여 학교 서열화를 추구하려는 MB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학업성취도 평가의 바람직한 모델과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개념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민주당 정책 신뢰도 제고

2. 연구내용

-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념과 현장 적합성 분석
- 평가 결과 환류에 대한 정부 정책 분석 및 예측
-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평가 방식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 연구 (교육정보공개의 합리적 범위 설정)

3. 기대효과

- MB 교육정책의 허구성 폭로 및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 확보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유권자 지형분석 및 계층별 득표전략 수립 위한 연구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당의 진로와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권자의 지형을 분석하고 당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주 공략대상을 설정하기 위함

2. 연구방법

- FGI(Focus Group Interview)
- 전화면접조사
- 당 지지도 추이 및 대정부 민심 동향 등 심층분석

3. 연구내용

- 각 정당에 대한 지지층 및 부동층, 무당파 층에 대한 분류
- 각 유형별 유권자 분포현황 및 민주당 지지층 규모 및 분포현황 분석
- 유권자 지지변동 가능성 및 변화 동력 분석
- 민주당의 향후 과제에 대한 전략 및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한국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마련

2. 연구내용

-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대한 재점검
- 현대교육이 추구하는 잠재능력 개발의 활성화 방안
- 일등주의, 차별주의, 학벌주의 등의 교육의 방해요소의 해결방안

3. 기대효과

-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민주당의 실질적 교육정책의 실현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뉴민주당선언 해설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뉴민주당선언 초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해설서 마련

2. 연구내용

- 당의 지지율 추이분석
- 민주당의 현재 상황 정리
- 민주당의 시대적 가치 분석
- 뉴민주당선언의 배경
- 당의 노선, 비전, 가치에 대한 여론조사 요약
- 쟁점사항 분석 및 방향성 제안

3. 기대효과

- 뉴민주당선언에 대한 이해확대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종부세 쟁점분석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략적 스탠스 확립을 위한 연구

2. 연구내용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및 현황

– 쟁점에 대한 분석 및 정리

- 높은 주택가격이나 소득을 감안하면 보유세가 이미 선진국보다 높다?
- 담세능력을 고려않고 보유세가 너무 올랐다. 특히 은퇴노인이 문제다?
-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국세로 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 높은 세율과 세대합산은 위헌이다?
- 보유세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치적으로 무리한 정책이다?

– 종부세의 필요성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정책 스탠스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유럽선거제도 분석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유럽제국의 정치·정당·선거제도 연구를 통한 한국정당의 발전방향

2. 연구내용

-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정치, 정당, 선거제도에 대한 연수를 통한 한국정당의 당원조직, 연구조직, 선거활동 연구
- 오스트리아 사표방지제도 정리
- 헝가리 다원적 정당구조 정리
- 루마니라 불비례적 선거제도 정리

3. 기대효과

- 정당개혁의 기본자료 확보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당 경제정책 액션플랜 구축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현 시점에의 당의 전략적 스탠스에 대한 분석 및 대안

2. 연구내용

- 현 상황분석
- 외국의 긴급경제대책 조감
  -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호주, 이탈리아
  -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태국
- 국민에 대한 직접지원의 예
  - 호주, 대만, 독일
- 긴급구제를 위한 액션플랜
  - 경제위기에 따른 상황 예측
  - 민주당의 대응원칙 : 민주당의 Neo New Deal
  - 긴급구제대상
  - 뉴민주당선언 Action Plan 기본틀

3. 기대효과

- 현 시점에서의 당의 지지율 상황분석 및 전략적 정책활동 방안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주　　제** :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웹2.0세대 분석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미국 오바마 대선승리에서의 큰 힘이 된 인터넷선거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웹2.0 세대에 발맞추어 향후 민주당 발전을 위한 온라인 활성화 방안 마련

2. 연구내용

- 웹2.0 세대에서의 민주당의 현 위치
-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전략
- 모바일 2.0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과제

3. 기대효과

- 미국 오바마의 인터넷행보에서와 같이 민주당의 온라인 기본과제 수립를 통한 온라인선거에서의 승리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선거승리를 위한 당의 R·N·C 현대화 전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선거승리를 위한 당의 인재발굴, 후보공천, 선거운동 현대화전략

2. 연구내용

- 민주당의 정치적 위기상황 분석
- 위기상황에 따른 포괄적 대응방안
  - 전략적 정당활동 강화
  - 기술혁신적 정당활동 강화
  - 선거전략의 고도화
  - 리더십 강화 등
- 선거전략의 고도화를 위한 인재발굴, 후보공천, 선거운동현대화 방안
  - 특히, 상시적 인재개발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방안 제안

3. 기대효과

- 당의 전략적 스탠스 제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4대강 하천정비 사업관련 예산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4대강 정비 예산의 현황 및 해당 사업예산 분석을 통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의 관련성 및 문제점 분석
- 이러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응 방안 마련

2. 연구내용

- 4대강 정비 예산의 현황 분석
-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한 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 민주당의 대응 방안

3. 기대효과

- 4대강 정비사업 중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이 대운하 예산과 87% 중복’, ‘경인운하 사례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에서 대운하로 확대 되는 사업의 성격 분석’ ‘홍수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지방하천 정비의 투자’ 결론 도출
- 경인운하, 영산강 운하에 대한 대안, 민주당의 녹색뉴딜 정책개발, SOC투자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민주당의 전략과제 도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와 정당의 과제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가 정당에 제기하는 과제를 연구하여 본래 정당의 기능에 맞추어 변화를 매개하고 변화를 이끄는 정보사회의 정치적 매개자로서 거듭나기 위함

2. 연구내용

-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
  - 구성적 네트워크 • 수평적 네트워크 • 연계적 네트워크
- 정당의 적응과 변화
  - 서구 정당이 변화 과정 • 한국 정당의 변화 과정
- 네트워크사회에서의 정당의 역할
  - 참여와 대의의 통합기제로서의 네트워크
  -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당 기능의 변화
  - 네트워크 소통과 정당 모델의 재창조

3. 기대효과

- 정당의 역할인 정책정당의 강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부응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긴급구제플랜-일자리대책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실질적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 실현의 계기 마련

2. 연구내용

-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현 비정규직 현황 및 개선 대책
- 교육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 복지분야에서의 일자리 정책 방안
- 환경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례 및 향후 발전방향
- 단기적 실업대책 및 중장기적 고용체계의 구축 방안

3. 기대효과

- 단순한 일자리 확충이 아닌 분야별, 계층별 등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심각한 실업난 감소에 이바지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과 당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새로운 경영평가 도입 등 공기업 혁신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공기업 민영화 방향에 대한 문제점 연구
-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관련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연구
- SOC관련 공기업 혁신 방안 연구

3. 기대효과

- 정부의 원칙 없는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공기업 혁신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공익성 확대를 통한 기업혁신과 경영평가 방식 도입 등 질적 구조조정 유도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뉴민주당선언 관련 정당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연구목적

-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당 조직·운영의 혁신방안 모색

2. 연구내용

-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위기 상황 분석
- 민주당의 전략적 정당 기능 확대 방안
- 민주당의 리더십 강화 방안
- 기술집약적 모바일 2.0 전략

3. 기대효과

- 뉴민주당 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정당 액션 프로그램 개발로 당 이미지 쇄신
- 21세기형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발전을 위한 모멘텀 생산

PART _ 4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자유선진당 자유정책연구원

자유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4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14	11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591,000	10,677	601,677	498,293	103,384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고
2008.5.8~5.16	환경노동	비정규직법 개정의 쟁점과 정책방향	자 체	
2008.5.23~5.30	보건복지가족	고령화 현황 및 정책방향	자 체	
2008.6.1~6.30	농림수산식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자 체	
2009.6.9~6.13	농림수산식품	푸드뱅크 운영활성화 방안모색	자 체	
2008.6.23~6.26	지식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현황과 강화방안	자 체	
2008.7.3~7.11	교육과학기술	대학등록금의 원인과 해법	자 체	
2008.7.14~7.18	외교통상통일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자 체	
2008.7.16~8.6	외교통상통일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 체	
2008.8.10~10.24	행정안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평가와 정책방향	자 체	
2008.8.16~8.20	지식경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 현황 및 방안모색	자 체	
2008.8.27~10.31	행정안전	강소국 연방제의 구상 및 검토과제	자 체	
2008.9.1~9.10	기획재정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전망	자 체	
2008.9.8~9.12	기획재정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기대효과	자 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고
2008.9.16~9.18	기획재정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자 체	
2008.9.22~9.29	교육과학기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과 정책방향 모색	자 체	
2008.9.29~10.7	기획재정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쟁점과제 모색	자 체	
2008.10.7~10.21	국토해양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자 체	
2008.10.15~11.3	농림수산식품	쌀소득직불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자 체	
2008.10.31~11.5	문화관광 방송통신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자 체	
2008.11.2~11.4	문화관광 방송통신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제시	자 체	
2008.11.6~11.11	외교통상통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북핵문제의 향후진로와 전망	자 체	
2008.11.12~11.14	기획재정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과 평가	자 체	
2008.11.18~11.21	환경노동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태 및 정책방향	자 체	
2008.11.25~12.2	정보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자 체	
2008.12.5~12.23	문화관광 방송통신	신문 · 방송 겸영의 쟁점과 국제비교	자 체	
2008.12.10~12.16	보건복지가족	존엄사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자 체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 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 요 내 용	비고
정책 토론회	08.5.6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쇠고기개방으로 검역주권확보와 축산업 피해대책	•검역조건 논의 •광우별 발생시 국회논의 •수입에 따른 축산업 피해구제	
정책 토론회	08.7.10	국회 귀빈식당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대학등록금 현황 및 문제점 •인상논쟁의 쟁점 •대학등록금 해결방안 모색	
공청회	08.7.28	국회 귀빈식당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를 위한 공청회	•원내교섭단체의 최저의석수의 적절성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개혁방향 •대의제 하에서 3당 의미 · 역할	
정책 토론회	08.8.22	국회 도서관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방향 모색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 •현행 기본권의 개편방향 •기타 쟁점 관련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	08.9.24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 협력방안모색	•대 ·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성공사례 분석	
정책 토론회	08.10.27	국회 헌정기념관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강소국 연방제의 이념 및 특징 •강소국 연방제의 검토과제	
정책 토론회	08.11.10	국회 귀빈식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의 위한 토론회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원인 •쌀직불금 부당신청 실태 •쌀직불제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	08.12.3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부의 부동산 감세 문제점 •보유세 개편방향 및 과제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기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정책 워크숍	08.7.3~7.4	경기 양지리조트	•정기국회 관련 과제점검 •정책개발방안 모색 •정책정당으로써 역할탐색	집합교육
여성당원 연석회의	08.7.23~7.24	대전 계룡스파텔	•여성당원의 역할 · 활동방향 •여성당원간 결속력 강화 •여성정책 개발 · 지원	집합교육
핵심당원 연수	08.8.28~8.29	대전 스파피아호텔	•바람직한 정당활동 •정당체제의 국제비교 •정당법 · 선거법 해설	집합교육
지역당원 연수	08.10.9~10.10	충북 수안보	•자유선진당의 역할 및 진로 •시도당의 과제 •지역정책 개발 · 지원	집합교육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08.6.20	책자	책자배포	•미국산쇠고기 수입 및 검역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08.6.27	방송	정책토론회 참가	•미국산쇠고기 국정조사 방안 •18대 개원 관련 자유선진당의 역할 등	
08.10.23	방송	정책토론회 참가	•쌀직불금의 문제점과 실태 •쌀직불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08년도 국정감사 평가	
08.10.30	책자	책자배포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발간 –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있는 결단과 과감한 실천입니다	
08.11.28	방송	정책토론회 참가	•청년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 •경제활성화 대책	
08.12.12	방송	초청토론회 참가	•전주KBS 초청 지역현안 토론 – 새만금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08.12.17	책자	책자배포	•제279회 임시국회 쟁점법률안 검토 – 한나라당 발의법안 중심 •주요당직자에게 배포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08.2.19	토론회자료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자체발간	200부	
08.6.20	백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백서	자체발간	300부	
08.7.10	토론회자료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자체발간	500부	
08.7.28	토론회자료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에 관한 공청회	자체발간	150부	
08.9.22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방향	자체발간	250부	
08.10.6	간행물	2009년도 예산반영 현황	자체발간	200부	
08.10.15	간행물	2009년도 충청권 예산반영현황	자체발간	200부	
08.10.27	토론회자료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자체발간	1,000부	
08.11.10	토론회자료	쌀직불금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의 위한 토론회	자체발간	300부	
08.12.3	토론회자료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체발간	200부	
08.12.17	간행물	제279회 임시국회 쟁점법률안	자체발간	100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기간)	장 소	활 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08.5.15	홍성지역 축산업체	민생정책투어	•홍성지역 축산실태 점검 •현장건의사항 수렴	
08.9.5	전국개인택시회관	민생정책투어	•택시업계 현황파악 •건의사항 청취	
08.9.6	중부시장	민생정책투어	•재래시장의 경기체험 •재래시장 지원대책 논의	
08.9.7	하나원	민생정책투어	•탈북자 적응교육 실태점검 •탈북자 복지대책 마련	
08.9.25	서울디지털단지	민생정책투어	•IT업계 현황 및 전망 •국회 차원의 지원 논의	
08.12.3	천안 아라리오광장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캠페인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 •지방지원 대책 전무 홍보	
08.12.5	영등포역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캠페인	•대수도권 시민에게 문제점 설명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청취	
08.12.23	서울노인복지센터	민생정책투어	•노인 빈곤층의 현황파악 •급식봉사활동	
08.12.26	25사단	민생정책투어	•전방 시찰 및 보고 청취 •국군장병위문방문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8 ~ 5. 16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비정규직법 개정의 쟁점과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비정규직 보호법' 의 내용**

– '07년 7월 법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금지규정 도입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규정 : 2년이상 계약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수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차별금지

□ **문제점**

– (사회현상)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전, 법적용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 및 외주화로 법 취지 무력화 시도

- 예) 기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계산원 업무의 외주화로 '이랜드 사태' 촉발, 인력관리 자회사 고용을 통한 'KTX 여승무원 문제' 등 사회문제 발생

– 기업 및 대기업 노조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대응

- 기업 : 정규직 전환비용 상승이유로 용역직, 파견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형태로 대응, 대기업 노조 : 비정규직에 대한 이익배분 반대로 기득권 유지

연구· 개발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불이익 우려로 차별시정 요구 등 적극적 대응 미숙

□ **정책방향**

– 공동책임이 있는 노 · 사 · 정에게 차별시정을 위한 문제해결 촉구

• 사용자는 '비정규직 보호법' 의 준수 – 편법 대신 비용절감노력을 문제해결

• 대기업 노조는 자신의 이익극대화 자제 – 과도한 임금인상 및 일자리 나눔 실천촉구

• 정부는 복지후생적 측면의 비정규직 보호법 보완필요 – 규제 · 처벌 신설로 편법행위 근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23 ~ 5. 30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한국의 고령화 추세 및 향후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추세

-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지속으로 '초저출산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이 1960년도 6.0명에서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으로 하락
  -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출산율 2.1명)이하로 하락
  -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3명이하)에 진입
- 초고속의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 급증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지속적으로 급증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 5.1%에서 2005년 현재 9.3%로 급증

□ 인구 고령화의 영향 및 대책

- 인구 고령화의 영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와 세대간 갈등 야기
  -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하락 우려
- 고령화시대의 대책 및 정책방향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연금제도 내실화 등)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 기반 구축 등)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1 ~ 6. 30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광우병의 개념과 통제

- 안정된 변형프리온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발병
- 광우병 통제 : 동물사료에 육골분 사용금지 및 감염력의 99%가 있다고 말해지는 특정위험물질의 철저한 관리 필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점

- 미국 수입조건 : 30개월 미만 소에서의 특정위험물질 수입
  - 뇌, 척수 머리뼈 및 창자, 장간막 부위
- 30개월 소의 정확한 연령 파악 불가능
- 미 도축장계에서의 무증상 소의 도축방지 체제의 부재

□ 정책방향

- 국내 한우의 이력추적제 및 사료정책의 엄격한 실시
- 20개월 이상 소의 전수검사 실행
- 광우병 전문연구소 내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치 필요성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9 ~ 6. 13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푸드뱅크 운영활성화 방안모색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푸드뱅크의 개념

- 식품을 기부자가 무료로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운영자가 기부된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분해 주는 식품매개 사회복지시스템
  - 1967년 미국에서 잉여농산물 배분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시작

□ 푸드뱅크 운영현황

- 2008년 현재 전국 302개 푸드뱅크 운영 및 기부식품 이용시설의 전체 37.1%로 나타남
  - 기부액 : '05년 395억 7천만원 → ' 08년 422억 6천만원으로 증가
  - 기부품 : 주식류(41.5%), 부식류(16.1%), 간식류(20.7%), 식료품(16.9%) 등 구성
  - 기부자 : 식품제조업(13.4%), 즉석판매업(17.0%), 식품 도·소매업(25.2%) 등

□ 푸드뱅크의 발전적 정책방향

- 기부량 확대 필요
  - 정부차원의 기부업체 세제지원 폭 확대, 홍보강화 방안 필요
- 기부대상 품목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식품기부 활성화 법률 개정으로 품목를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 필요
-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
  - 관련자들에 대한 식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23 ~ 6. 26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현황과 강화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재래시장의 현황

- 전국의 재래시장은 2006년 현재 총 1,610개(등록시장 61.6%)
  - 점포 수는 2006년 현재 22만 5천개(임차점포가 56.8%, 자기소유 점포는 28.7%에 불과)
  - 재래시장 상인 수는 35만 2천명(노점상인 14.5%, 임차상인 37.2%)

□ 재래시장의 문제점

- 불합리한 업업환경의 급속한 전개, 시설노후화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 경영·관리능력 취약, 공동구매·물류체계 미비, 재래시장의 효율적 운영 곤란, 정부대응 불충분

□ 경쟁력 강화방안

-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시장 운영관리의 현대화, 재래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3 ~ 7. 11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대학등록금의 원인과 해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

- 첫째, 물가상승률의 2~4배에 달하는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
  - 현실적으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저항 초래
- 둘째, 다른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및 전년도 인상률 기준으로 일방적·폐쇄적 등록금 책정 반복
- 셋째, 대학재원 중 등록금 비중이 높음.
  -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학교법인의 전입금 기대

□ **등록금 문제의 해법**

- 대학 장학제도 및 학자금 융자제도 확충방안 : 예) 무이자대출 대상 확대, 재학기간 중 상환유예·금리인하
  - 소득연동형 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 : 상환시점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한정
- 책정과정의 합리화 방안 : 예)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안)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효과
- 국고지원 확대로 인상요인 흡수 방안 : 예) 대학에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모색 필요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립대학회계의 도입 검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14 ~ 7. 18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2008년 남북관계의 평가

-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후 2008년 남북관계는 '최악' 평가
  - 당국자간 전면적 대화중단,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북측인원 철수 및 연락기능 정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육로 통해 제한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문제

- 남북관계는 '실용의 잣대' 로 정책판단
  - 그러나 세부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의 문제
  - '진정성' 판단여부는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원칙의 철저에 배치
  -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에 임하지 않는 문제발생

□ 정책방향

- 정책의 구체화 노력 필요
  - 비핵·개방으로 유도할 실질적 방안 모색
- 북한을 '대결상대' 가 아닌 '관리대상' 으로 인식
- '퍼주기' 는 '안주기' 로 대응보다 '잘주기' 로 대응
  - 북한도 남북관계 정상화 희망, 먼저 남북관계 복원 필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16 ~ 8. 6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현행 정당 및 정치제도 정비의 필요성

- 거대정당 간 독과점 구조 해체를 통한 정치발전 도모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정당운영, 정치자금, 국회운영의 정치구조 지향
- 정당운영은 물론 공직선거에 이르기 까지 교섭단체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공정선거에 역행

□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문제점 및 대책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위헌소지 내포(소수정당의 기회균등, 복수정당제 채택 등)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국회운영도 기회균등 원칙 보장

□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

□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폐지
-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을 우대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로 개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10 ~ 10. 24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평가와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현황**

- 행정부의 효율성 및 편의성 등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논의 전개
  - 전국 60~70개 자치단체로 재편하고,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폐지

□ **문제점**

- 광역행정기능의 수요확대 및 시대적 필요성 도외, 단견적 행정편의적 발상 오류
  - 지방분권이 전제없는 개편은 신중앙집권화 가능성
- 광역기능의 국가 귀속방식으로 추진 정당성 확보 어려움
  - 행정 효율성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편논의 진행
- 주민의 동의(민주성)가 배제된 정치권 논의
  - 재원소모 및 국론분열, 갈등방향으로 나아갈 우려

□ **정책방향**

- 분권화 프로그램 등 장기과제로 추진 및 지방분권적 헌법개정 논의와 병행
  - 국가역할의 재설정, 지방역할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보방안의 마련 등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 필요
  - 완벽한 지방자치 및 분권제 국가체제의 전환에 있어 헌법개헌을 통한 제도보장으로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 여러 정치단체간의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 대두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16 ~ 8. 20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현황 및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패러다임
  - 녹색성장 핵심동력 :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 기기 등

□ **국내 에너지 현황**

-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그린에너지 기술확보, 성장동력화 시급
  - 에너지 수입의존도 : 96.6%(2007), 1인당에너지 소비 : 4.8TOE(2006), CO2 배출 : 449백만톤(2006)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 국내 산업규모 : 생산 18억불(세계 점유율 : 1.4%), 고용 9천명
  - 수입의존도 : 태양광(75%), 풍력(99.6%)

□ **녹색성장의 성장동력화 방안**

-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추진
  - 태양광, 수소전지 등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목표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촉진 :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로 투자 활성화
-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적 추진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27 ~ 10. 31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강소국연방제의 구상 및 검토과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강소국연방제 구상

- 우리나라를 강소국 규모(인구 500만~1,000만명 정도)로 6~7개의 지방행정체계를 분리하여 연방국가로 구성
  - 강소국 :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같은 국가경쟁력 상위 국가
- 강소국 연방제는 완전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 역량강화, 주민참여성 확보로 선진일류국가 창출

□ 강소국연방제의 검토과제

- (지방역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자치권한을 갖고 업무수행
- (규모) 1안 : 경제권 중심으로 6개 지역개편(중부·서부·남부·동부 및 서울·제주는 현행 유지), 2안 : 생활권 중심 7개 지역개편(서울·경기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강원도·제주도)
- (재정) 지방정부에 세금 종목 및 세율 등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부여(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신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1 ~ 9. 10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가계부채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가계부채의 현황

- '08년 2/4분기 가계신용 동향 중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의 급증양상
  - 부채규모의 급증(3.1%) 및 부채구조의 질적 악화

□ 가계부채의 급등 원인

- 재개발 아파트 증가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 2006년 이전 시작된 주택대출 중 중도금·잔금대출의 증대 및 재개발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급증
- 고용부진과 물가상승 및 은행들의 대출마케팅 강화
  - 일자리 증가의 '08년 7월까지 5개월 연속 20만명 미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년대비 5%초과의 물가상승률로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대출수요 급증

□ 향후 전망

-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등의 규제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화 가능성 낮음

연구· 개발내용

• (금리측면) 환율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우려

– 부동산 가격의 하락 경우 주택담보부채가 가계부채의 약40%에 육박하여 상당한 위험노출

• 가구당 부채가 4천만원으로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는 금융기관 건전성 위협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8 ~ 9. 12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기대효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통화스와프의 개념

- 통화스와프는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를 상대방 통화와 교환,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초 계약시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통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책간섭이 없이 IMF 구제금융과는 차이

□ 통화스와프 의 기대효과(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시)

- 한국 경우
  - 스와프 교환액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가는 효과
  - 미국의 통화스와프 대상국가군에 들어감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불안해진 우리나라의 외환·주식시장에 호재
- 미국 경우
  -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견제
  - 신흥시장의 연쇄적 붕괴를 방치할 경우, 미국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14 ~ 9. 18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가격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발생
  - 주택담보를 기초한 파생상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팽창
- 리스크의 확대 : 통제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개발로 세계적 과잉 유동성의 공급으로 버블이 생성되어 붕괴
  - 3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자기자본비율에서 서브프라임 등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적 채권에 투자하여 부실 자초

□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주식시장 :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과 널뛰기 장세
  - 자본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버블 형성으로 미국발 버블붕괴 초래
- 외환시장 : 급격한 외환 유출로 환율상승 경험
  - 상승요인 : 외국인의 자금회수, 경상수지 적자전환
- 실물시장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거시경제의 불안정화 및 불평등 확대
  -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유동화 동결로 실물경기의 자금부족현상 심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22 ~ 9. 29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과 정책방향 모색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황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및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는 추진방안 확정
    ※ 대통령 공약사항 : KAIST 방문시 충청권 과학벨트 구축 약속 및 인수위 과학벨트T/F구성

□ 추진 문제점

-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당분간 정부의 추진의사 전무('09년 예산 50억원 삭감)
  - 이 사업은 영남권에서도 추진 시도 중으로 충청권 핵심공약이 백지화 우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정부의 유치지역 언급 전무

□ 정책방향

- 과학벨트사업의 조속한 추진필요
  - 수행지역을 명확히 명시 필요
  - 과학벨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유치 가능성 우려
  - 5+2 광역경제권 구성은 충·남북 내륙지방의 실질적 발전 배제결과 초래
  - 충북 :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충남 :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확정 요구
  - 과학벨트 구축은 7~8년의 장기사업으로 추진주체, 실행계획 및 우선순위가 조속히 확정 필요

【별 첨】

연구 ·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29 ~ 10. 7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쟁점 · 과제 모색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후 보완계획
  - 에너지 관련 기업은 완전 민영화 추진
  - SOC(사회간접자본)관련 기업은 경영을 민간위임 형식
  - 일부 기관은 통폐합, 사업부문 매각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 50~60개 민영화 및 통폐합 예정

□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 공기업 통폐합과 기능조정, 민영화의 문제점 제기
  - R&D관리 전담기관 통합 경우 R&D 활동의 위축 가능성
  - 내용측면에서 생색, 구색 맞추기용 민영화 → 7개 공기업의 기능조정 포함
  - 우수 공기업의 매각으로 특혜의혹 제기(예-인천공항공사)

□ 정책과제

- 공기업 개혁 관련 내부혁신 및 경영 효율화 강조
  - 인적쇄신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고물가 · 고유가 시대의 서민생활과 직결된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할 필요
- 수도 · 전기 · 가스 등 4대 필수공공재 부분의 공기업 민영화는 우선 제외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7 ~ 10. 21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

-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에서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증설 허용
  - 성장관리권 내 96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규제는 오염총량제·배출규제로 전환

□ 문제점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비수도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함
  - 지방의 첨단 25개 업종의 성장률이 현재의 50%선에 그치고, 생산액 피해 88조원 예상
- 수도권 집중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초래
  - 지방의 과소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심화

□ 파급효과

- 지방의 업종별 클러스터 사업의 무력화 요인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방 산업기반 약화우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15 ~ 11. 3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쌀소득직불금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쌀직불제 도입 배경

- DDA협상 결과 국내총보조가 줄어들면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물량 확보에 어려움
  - 기준년도와 당년도 쌀가격 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전하여 쌀농가의 소득하락 충격 완화

□ 쌀직불제의 문제점

- 농가수취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작황 수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
  - 단수가 줄어들어 수확기 가격은 상승, 직불금도 줄어 소득이 감소
- 목표가격은 전국 평균 쌀가격을 적용,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보전율이 낮음
- 직불금 지급대상을 대상면적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제한,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 발생

□ 쌀직불제 제도개선 방안

- 신규 진입자 제한 : 매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직불금 지급대상을 기존 직불금 수령한 농업인 한정
- 직불금 신청을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관외경작자에게 경작사실 입증서류 요구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31 ~ 11. 5

■ **연구분야 :** 문화관광방송통신

■ **주　　제 :**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내용

-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음
-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문제점

- 위치정보를 허용할 경우,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 주변 5미터까지 추적이 가능하여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
- 통신제한 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등의 의무화는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입법이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일정기간 자료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역행

□ 정책방향

-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불가피하게 감청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마련 필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2 ~ 11. 4

■ **연구분야 :** 문화관광방송통신

■ **주　　제 :**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제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 처벌 및 제재규정
  - 인터넷을 통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형
  - 소추요건 - '반의사 불벌죄'로 완화
    ※ 반의사 불벌죄 :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예)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등

□ **문제점**

- 사이버모욕죄의 신설로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 개발로 부작용 야기 우려
- 현재 사이버 공간상 괴담·루머는 댓글보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로 재생산 과정에서 확산 형태를 띠고 있어 악성 댓글의 제재만으로 근원적 해결이 아님

□ **정책방향**

- 욕설에 대해 인터넷 기업에서 필터링 서비스로 해결방안 모색
- 이용자의 표현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 균형도모를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 제도정립
  - 타인권리 침해정보의 처리절차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6 ~ 11. 11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북핵문제의 향후진로와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오바마정부의 외교정책 성향**

- 민주당의 '자유주의' 강조 및 인권과 가치적 외교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국익 추구 중점
  -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을 통한 자유주의 확산정책 가시화

□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미국의 대한반도 국익인식
  - 북한의 도발위협 억지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 동북아지역 내 패권국가의 억제 및 한·미 동맹관계 유지
- 북한은 '스탈린체제식 공산주의 국가' 로 계속 있는 한, 북한압박
  - 자력갱생에 의한 회생이 불가능하여 개방과 개혁을 통한 체제전환 노력 지속

□ **한국의 대응**

- 오바마정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안보다 전반적인 인식을 강조하여 접근에 신중성 필요
-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의 청사진 제시
  - 한국의 국익을 먼저 고려한 탄력적 준비 필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12 ~ 11. 14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고령화 현황 및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추세

-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지속으로 '초저출산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이 1960년도 6.0명에서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으로 하락
  -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3명이하)에 진입
- 초고속의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 급증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 5.1%에서 2005년 현재 9.3%로 급증
  - 2000년도에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비율 7% 이상), 2018년에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 예상

□ 인구 고령화의 영향 및 대책

- 인구 고령화의 영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와 세대간 갈등 야기
  -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하락 우려
- 고령화시대의 대책 및 정책방향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연금제도 내실화 등)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 기반 구축 등)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18 ~ 11. 21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태 및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6년 10월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①납품단가 인하(71.2%), ②불규칙발주(44.3%), ③납기단축/촉박(37.4%), ④지나친 품질수준 요구(34.0%) 순
  -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중소제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경쟁력 기반 저하

□ 상생협력 정책 현황

- 세제지원 : 기술지도비 세액공제, 직업훈련시설 지원, 연구시설 설치 세액공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중소기업이 수요기관 필요물품의 기술개발 성공시 수요기관이 개발제품을 일정기간 구매해주는 제도
-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

□ 상생협력 정책방향

- R&D 지원 : 기획단계부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강화, 핵심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 금융지원 : 모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연계지원 강화
  - 대기업 신용으로 협력기업에 기술개발 자금 공급하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 인력지원 : 대·중소기업 전문인력의 공동작업을 통한 현장기술 해결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25 ~ 12. 2

■ **연구분야 :** 정보

■ **주　　제 :**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발의된 '국정원법'의 내용**

- 국정원의 정보활동범위 :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까지 확대
  - 명분 : '국제적 냉전징서 붕괴 이후 본질적 변화된 국가안보환경의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체' 설명

□ **'국정원법'의 문제점**

- 정보활동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
  -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정책 관련 정보로 확대해석 가능성

□ **'국정원법'의 입법방향**

- 국정원은 대북관계·영토적 위협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만 허용
  - 무역통상·환경 등 정책정보는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필요
- 국가정보원은 21세기 정보기관의 중장기 계획마련 필요
  - 정책 정보기관 신설, 수사권 이양 등 문제 검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5 ~ 12. 23

■ **연구분야 :** 문화관광방송통신

■ **주　　제 :** 신문·방송 겸영의 정책기조와 쟁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정부의 정책기조**

-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 허용 등 미디어간 교차소유 확대 추진
  - 활성화 방안 : 신문사의 케이블TV보도전문·종합편선채널,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입 제한완화 등
  - 적용대상 : 1차 '케이블TV' 등 뉴미디어부터 시작, 2차 지상파 TV까지 대상 검토
-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및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완비할 계획

□ **쟁점**

- '미디어산업구조 개편 필요' 의견과 '재벌참여로 인한 공영방송의 공정성확보 우려' 의견에 대한 쟁점화
  - (찬성의견) 방송통신산의 각종 규제철폐로 경쟁력 갖춘 세계적 미디어 출현여건 및 성장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 (반대의견) 일부 재벌 및 신문사의 이익독점 및 공영방송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 어려움 등 자본·권력으로부터 종속 우려

□ **국제비교**

-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신문·방송겸영 허용하나, 특정자본의 여론매체의 일반적으로 과도한 영향력 행사 차단
  - 영국 등 주요나라들은 교차소유 제한규정 마련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미디어 독점 방지 및 겸영허용 전 사회적 합의도출과정을 거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10 ~ 12. 16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존엄사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

- 존엄사 :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공격적 치료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는 행위
- 안락사 : 노령이나 신체적인 장애 혹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행위

□ 연명치료중단의 요건

- 회복불가능성 및 치료의 의학적 무용성
  -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 감안, 제3의 의료기관의 감정필요
- 환자동의 : 환자의 명시적으로 표시된 치료중단 의사 및 사전설명에 기초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방향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건조성될 때 법제화 추진 필요
  - 의료적·법률적 문제 외 고도의 생명윤리적 문제 내포
- 완화치료(호스피스)의 제도화 추진
  - 완화치료 대상자, 의료기관 입소절차, 기관지정 등 세부내용 정립

PART _ 5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친박연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0명	1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60,200	4	60,204	60,204	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9.5~12.4	정무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연구	외부전문가	
9.5~12.4	정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한국정치 상생과 발전 방안 연구	자체	
9.5~12.4	외교통상통일	경기도의 동북아 중심축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보건복지가족	GMO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체	
9.5~12.4	법제사법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행정안전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교육과학기술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법제사법	국내법조문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환경노동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외교통상통일	에너지 · 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자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9.5~12.4	농림수산식품	첨단 · 웰빙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무농약 시설재배 농업 '야마네시스템' 의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자체	
9.5~12.4	국토해양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12.4	보건복지가족	다문화 가족 실태 분석	자체	
9.5~12.4	지식경제	벤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	
9.5~12.4	농림수산식품	쌀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미곡복합단지 건설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2008. 9. 23	국토해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	연구소 법안작성, 양정례 의원 대표발의
2008. 12. 30	정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자체	연구소 법안작성, 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당선자 및 주요당직자 워크숍	2008.5.30~ 2008.5.31	용평리조트	친박연대 정책방향 토론	제1주제 : 18대 국회의 역할과 개원 정국 전망(엄호성) 제2주제 : 쇠고기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이영순 교수)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08.11.11	렉싱턴 호텔	정책연구소 제도시행이후 운영성 진단과 발전방안	
2007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분석	2008.11.20	청풍리조트	2007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분석과 평가지표 설명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08.6.27	KBS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주제 : 한미 쇠고기협상 문제 제2주제 :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	
2008.11.28	KBS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주제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제2주제 :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	
2008.12.25	뉴시스	인터뷰	친박연대의 정책방향과 대운하 재시도에 관한 입장	
2008.12.30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친박연대의 국회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운하 재시도에 관한 입장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08.12	연구논문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한국정치 상생과 발전 방안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경기도의 동북아 중심축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GMO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국내법조문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에너지 · 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첨단 · 웰빙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무농약 시설재배 농업 '야마네시스템' 의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다문화 가족 실태 분석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벤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발간	50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08.11.27	중앙당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창립총회	정관 및 설립취지문 채택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 개발내용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발전을 위하여,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은 '정치와 정치자금' 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본 연구는 현행 정치자금법 운영의 문제점을 18대 총선 이후 야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관련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논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고 한국의 정당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을 도출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한국정치 상생과 발전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한국정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 대하여 논하고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해보고, 대통령제가 왜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화적 조건,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의 네 가지의 기준으로 접근하여 다루어, 균형잡인 대통령제 확립에 관하여 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경기도 동북아 중심축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물류량 증가로 인하여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도도 중국과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추세를 잘 활용하여 동북아의 중심축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이 연구서는 중국의 고속 성장 및 구조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한 개성공단과의 연계 발전 방안을 찾아, 경기도가 동북아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보다 발전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GMO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GMO(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와 해외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현황과 관리체계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정성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고 GMO 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주　　제 :**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국민 여론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개헌 과정을 일별하고 권력구조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모든 개헌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입수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여론 동향을 분석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위기관리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권과 핵심요소 및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봄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이나 방향을 재점검 함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공교육의 현 실태 및 위기의 원인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살피고, 초·중등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초·중등 교육 내실화,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구현, 교육 기회의 다양화 및 수월성 제고, 사교육비 경감정책,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 건강 증진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주　　제 :** 국내법조문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국내법조문 중 공직선거법을 위주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모호성, 탈법행위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모호성, 후보자 등의 비방행위 금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제251조의 모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방식의 모호성, 사법부의 판결례상의 상호 충돌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입법 제안을 논하였음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클린에너지 산업육성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검토가 미비하였던 클린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 문제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동향에 대해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발전, 연료 전지, 석탄가스화(IGCC), 해양·폐기물·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로 나눠 알아보고 클린에너지 산업 국제 협력방안에 대해 대상기관과 방안을 모색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에너지·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큰 의의와 중요성을 지닌 국회의원외교를 실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어온 기존의 의원교류외교에 추가하여 활동분야를 글로벌 이슈인 에너지·자원 문제로 구체화한 에너지·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회의원 외교 활동 일반에 대한 내용, 국회의원 외교 단체, 의회관계 국제회의, 에너지·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첨단·웰빙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무농약 시설재배 농업 '야마네시스템'의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야마네 무농약 양액재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빠른 시간에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농법을 창시한 야마네 가사요시를 직접 만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배양액의 조성, 양수분의 흡수, pH 및 EC의 변화, 원수의 종류 및 수질개선 방법, 용수의 수질 기준, 중탄산의 중화요령, 작물별 최적조성의 선택 및 유지, pH 관리, 농도 관리, 양액온도 조절, 용존산소 조절, 폐양액 관리, 병충해 발생양상, 병해 진단과 방제, 해충의 진단과 방제등에 대해 분석·설명하고 야마네 무농약 양액재배 시스템의 도입 소개와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음주운전 방지라는 대리운전의 긍정적인 목적과 10만 대리운전 종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정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모색하고자, 현재 대리운전의 현황과 제출법안, 국내 여러 사례와 해외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고 대리운전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다문화 가족 실태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초중고교에 진급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 들의 급증 현실과 맞물려 더욱 경제적 현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과 이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안정적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의 차단과 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벤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신산업벤처는 모험적 기업가와 새로운 시장 및 국가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사업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일관성이 있는 국가정책에 의한 인력의 육성, 벤처자금의 지원, 빠른 시장규모의 형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효과도 기존의 벤처기업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경제위기에 이런 신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벤처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논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후, 신벤처산업의 효과와 육성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쌀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미곡복합단지 건설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UR 농업협상 이후 우리나라 쌀 농업의 현안, 쌀 도소매 유통현황과 국내 RPC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쌀 산업 고도화를 위한 미곡복합단지 건설미곡복합단지의 조성효과에 대하여 특화단지 조성, 소득증대 효과, 미곡복합단지의 정책효과로 나누어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23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매월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세입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분쟁과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30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일반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하여야만 국가유공자 지정이 가능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해함으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PART _ 6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정치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관악구 은천동 937-1 은천빌딩 2,3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11명	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849,615	53,333	902,948	640,180	262,768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5-6월	통일외교통상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활로 찾기	자체연구	
07년1월-08년5월	농림해양수산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전망과 발전방향	외부전문가	
5월-6월	재정경제	이명박 정부 100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체연구	
6월	정치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체연구	
6월-7월	사법윤리	진보적 개헌론	자체연구	
6월-8월	재정경제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외부전문가	
8월 21일	건설교통	8.21부동산대책에 대한 분서과 비판	자체연구	
8-9월	통일외교통상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선 6자회담	자체연구	
9.19일	건설교통	9.19부동산대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자체연구	
9월-10월	건설교통	'용적율 완화에 따른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이익 분석	자체연구	
9-10월	재정경제	미국금융위기 분석과 한국경제대안모색	자체연구	
9월-10월	재정경제	외환 보유고의 덫	외부전문가	
10월	행정자치	창원지역 지방의제성공 사례연구	자체연구	
10-11월	통일외교통상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	자체연구	
10-11월	통일외교통상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세	자체연구	
11월	사법윤리	종부세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대안	자체연구	
11-12월	통일외교통상	09년 통일정세와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자체연구	
8월-12월	행정자치	지방자치연구회 지방자치사례연구	자체연구	
11월-12월	행정자치	민주노동당 지방자치 총론	외부전문가	
12월	건설교통	주거기본권 측면에서 본 임대아파트 정책	외부전문가	
12월	건설교통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버불의 위기	외부전문가	
12월	행정차지	기초 지방의회 선거제도 발전방안 모색	자체연구	
10월-12월	국방	진보적안보개념연구	자체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6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취임100일 민생고를 듣는다.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각층의 민생 현황을 진단하고 경제대안을 모색함.	
토론회	6월 4일	국회도서관소 회의실	한반도 정세분석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분석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개방 3000)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의 대응방향을 토론함	
토론회	6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촛불시위의 인과관계, 향후 방향등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모색함.	
토론회	8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와 연동하여 한국경제의 모습을 파악함.	
토론회	10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자회담, 극적타결인가 파국인가	6자회담에 대한 각기 다양한 견해와 분석을 청취하고 전망함	
토론회	11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	개성공단 차단 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극복 해법을 마련함	
토론회	12월 16일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기초 지방의회 선거제도 발전방안 모색	① 정당공천제, 폐지인가? 유지인가? ② 중선거구제 보완인가, 소선거구제 회귀인가?	
토론회	12월 18일	국회귀빈식당	부동산거품위기와 경기부양책 비판	부동산 거품의 위기와 경기부양책의 문제점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충남도당 학생위원회 정치캠프[당원교육]	7월 11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당 집권의 방법과 과제에 대한 강연 및 토론	
대학생 진보정치캠프 [현지교육]	7월 19일~22일	한양대 안산 캠퍼스	청년학생들의 진보적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프로그램	
진보시민강좌 [현지교육]	11월3일~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당원과 일반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교양 프로그램	주1회씩 8주 프로그램.
청년학생 인턴쉽프로그램. [현지교육]	11월 1일~ 09년 2월 5일	중앙대학 캠퍼스 등	청년학생들의 정치참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치강좌와 체험 프로젝트의 결합형
녹색 환경의 제포럼 [당원정예교육]	12월 6일~7일	생태마을 초록향기	당원들에 대한 환경생태의식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김수행 교수 특별 초청강연[현지교육]	10월 13일	국회도서관대 강당	금융위기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당원교육사업	
전창완 교수 경제정세강연 [현지교육]	10월 15일	서울시의회 별관	당원과 시민들에 대한 금융위기 분석 해설강좌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9월 5일	인터넷언론사 통일뉴스	기고	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함	
10월 21일	당기관지 이론과 실천	기고	미국 대선에서 북한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11월 5일	당기관지 진보정치	기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함	
11월 26일	당기관지 진보정치	기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함	
12월 17일	당기관지 진보정치	기고	부시 임기 내 6자회담 재개가능성을 진단함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6월3일	토론회 자료집	이명박정부 취임 100일, 민생고를 듣는다.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6월4일	토론회 자료집	급변하는 남북관계, 활로찾기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6월 27일	토론회 자료집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8월 26일	토론회 자료집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0월 1일	토론회 자료집	6자회담 극적 타결인가, 파국인가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1월 25일	토론회 자료집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2월 16일	토론회 자료집	기초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2월 18일	토론회 자료집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거품의 위기	자체발간	50부 / 토론회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5월 ~ 6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이명박 정부 100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 개발내용

□ **서민경제 현황**

- 물가
  - 경유값의 경우 올 초에 비해 436원 폭등(1456원에서 1892원으로)
  - 보건의료, 교육, 가사서비스 59.2%, 42.1%, 126.2% 급증(2003년 1/4분기~ 2008년 1/4분기, 소득 하위 20%의 경우)
  - 밀가루의 경우 64.1% 상승(2008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원자재값 58.5%(2008년 4월 전년동월대비)
- 고용
  - 2008년 4월 신규취업 증가율 19만 1천명
  - 유휴인력 261만 6천(실업자+취업준비자+ '그냥 쉬었음', 실제로는 300만에 육박)
  - 20대 청년층과 내수침체에 따른 중고령 저학력층에서 심각
- 양극화 및 내수 침체 등
  - 경제성장과 체감경기의 차이,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 GDP 성장률 5.7%, GNI 0%(2008년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 8.41배(2008년 1/4분기)

연구· 개발내용

• 이른바 '작은 정부' 아래 기초복지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지방경제의 불만 가중

– 현 상황은 물가인상과 내수침체, 사회적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서민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

□ 대안

– 생활고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긴급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세계적인 자원위기에 대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 식량위기: 농지규제 완화, 한미FTA
•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의 지하자원
– 수출대기업. 기득권 중심의 정책을 고용. 내수. 중소기업과 서민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함
• 보육, 노인부양 등 기초 서비스 유지
• 대학등록금. 병원비 등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 고용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 원하청 관계의 개선
• 감세와 '작은 정부' 대신 중서민 대중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 고물가인상, 버블, 미국경제와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재고
• 공기업 민영화 • 대운하 • 부동산세제 개편 • 한미 FTA 등

□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총평

– 감세. 규제완화. 성장만능주의 정책 기조의 파산
– 수출대기업과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생계의 총체적 위기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7년 5월 ~ 2008년 5월

■ **연구분야** : 농림해양수산

■ **주　　제** :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전망과 발전방향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1. 연구내용

서장
제1장 제1장 한국사회의 장기변화 전망 및 비전
제2장 세계화, 농업국제화의 전망
제3장 한국농업·농촌의 장기변화 전망 및 비전
제4장 한국농업의 지속적 발전
제5장 한국농촌의 지속적 발전
제6장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7장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제8장 농협개혁
제9장 제9장 남북농업협력과 통일농업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5월 ~ 6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통상

■ **주　　제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활로찾기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보고서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보고서임.

북미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룩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정치적 대북적대정책의 실질적 포기이며, 북미관계정상화 1단계 조치로 된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정부가 뒤처지지 않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근간으로 하는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견지함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 발전에 주동적인 대응능력을 상실하면서 그 결과 남북관계만이 더욱더 악화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대북정책 기본구상인 〈비핵개방 3000〉과 당선이후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는 '북한문제의 국제적 접근' '한미공조에 앞세운 남북대화 추진' ' 선 핵폐기 노선 구현' ' 엄격한 상호주의 관철(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전면화, 인권문제의 대북협상 지렛대 화)', '북한 체제 변화(개방)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추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연구· 개발내용

이러한 정책기조는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대북정책의 기본 정신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상충 대립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이며 국제정세흐름과도 맞지 않는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화해협력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급선무로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의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바라보고 민족적 관점과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다뤄야 한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여기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선 핵 폐기 노선을 폐기하고 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노선을 견지해야 하며, 선개방 후경협 노선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기초위에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민족화해협력노선을 견지해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6월 ~ 7월

■ **연구분야 :** 사법윤리

■ **주　　제 :** 진보적 개헌론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12년까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본 보고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의 원포인트 개헌을 뛰어넘는 진보적 시각에서 개헌론을 제기한다. 본 보고서는 개헌의 시기, 방식 등 개헌 로드맵에 대한 부분과 진보적 시각에서 개헌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먼저, 진보적 시각에서의 개헌내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와 상관없이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자신의 집권전략과 집권상을 압축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헌법안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시기에 관해서는 정국이 안정되는 2010년 이후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인 개헌의 주된 내용은 정치구조의 변화, 민생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헌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대권에 뜻이 있는 후보들은 1차 선거에서 당선가능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선투표에서는 정당과 정치세력간의 정책연대와 후보단일화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연구· 개발내용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대응하고,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회적 기본권, 노동기본권을 현행 이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 주택의 기본권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정전협정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급진전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토조항과 통일정책 조항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6월 ~ 8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세계자본주의를 연구하게 될 경제사학자들은 2007년의 8월 9일을 자본주의적 금융체제가 무너진 날로, 2008년 3월 14일은 이른바 자유시장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꿈이 사라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동안 신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전한 Financial Times의 부편집장 Martin Wolf도 2008년 3월 14일자 사설에서 "2008년 3월 14일은 글로벌 자유시장을 향한 우리들의 꿈을 접게 된" 날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도(The Prospect, 148, July, 2008 및 FT의 여러 곳) "효율적시장가설이 처음부터 근본적 결함을 가진" 것이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서도 그것만이 경영을 합리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서구의 슈퍼클래스(평균 연봉이 3억 달러에 이르는 초자본가계급)들도 글로벌마켓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적기구에 의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정말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인류의 장래를 염려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자기들의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꾼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연구· 개발내용

자본주의금융은 오랜 시장에서의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했다. 금융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돈의 노예로 된다. 현재의 중앙은행은 공적 기구가 아니라 사적 기구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금은행에 대해서만 '최후의 대부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투자은행과 해지펀드에 대해서까지 그 역할을 넓혔다. 선의의 예금자나 투자자만 보호해 왔던 오랜 관례가 무너져 버리고 이젠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선의의 예금자를 희생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손실을 만회시켜주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를 펑펑 쏟아 부으면서 Minnesota주의 교량은 예산 때문에 수리 보수를 못해 붕괴할 때까지 방치해 두었다. 주민들의 의료, 보건, 위생, 인프라건설, 기초교육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금융권의 손실은 최우선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을 사적인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사회가 금융을 관할해야 한다.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8월 ~ 9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이명박정부의 주책정책분석과 대안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 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특히 '8.21 부동산대책' 과 '9.19 부동산대책' 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21 부동산대책' 은 후분양제를 폐지했는데, 후분양제는 분양원가가 확정되고 이후 분양이 된다는 점에서 건설회사의 폭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존치시켜야 했다. 또한 분양원가를 적정선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분양원가를 규제하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당연히 건설회사의 손실로 귀속돼야 할 시장실패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써 떠안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다주택소유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세입자와 소규모 가옥주들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뉴타운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본 보고서는 주택정책의 대안으로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책과 조절책으로 활용하는 기존의 관행을 포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 상태에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시중에 이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연구· 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주택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권을 신도시로 확장하는 정책은 투기 기득권세력을 양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은 가옥주 뿐 아니라 임차인, 상인을 포함한 지역주거생활공간의 재건이라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끝으로 국토정책, 도시정책, 택지정책, 공동주택정책 등 통일적인 주거정책을 강조하면서, 토개공과 주공을 포함한 주택청의 신설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8월 ~ 9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통상

■ **주　　제** :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6자회담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북미핵대결이 격화되고 6자회담이 기로에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모색을 위한 보고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북미간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이행 합의서(10.3합의)가 채택된 지 일 년이 다 돼가는 지금 합의사항 이행완료는 커녕 핵불능화 조치 중단 및 복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북미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핵검증' 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은 10.3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합의이행을 거부하고 6자회담을 파탄상태로 몰아가는 이유는 미국 대선관의 관련이 첫째이유이고,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미국내 강경대결세력들의 득세로 인해 대북 강경 압박 노선이 부상한 것이 둘째 이유이다. 부시 행정부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핵심적 이유인 것이다.

연구· 개발내용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대결노선으로 회귀한 조건에서 북한역시 대결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 불이행으로 재연되고 있는 북미핵대결의 전개과정은 두가지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첫째는 가까운 시일내에 극적 타결을 통해 10.3합의 이행이 완료되고 3단계 핵폐기단계로 나가는 경로이며 둘째는 북미협상이 깨지고 전면적 대결국면이 재현되는 경로이다. 만약 북미핵대결이 전면적으로 재현될 경우 6자회담의 기본 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미 핵대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화의 끈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결의 재현으로 갈 것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양상은 대화가능성 보다 전면적 대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북미대결전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결전보다 총체적 전면적인 대결전으로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좌우하는 마지막 대결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신뢰를 깨는 공격적 적대적 군사행동을 철회해야 하며,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이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0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용적률 등 재건축규제완화에 따른 강남아파트 수익변화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용적률 완화, 소형아파트 비율 완화, 임대아파트 비율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수익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미래의 주거이익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가옥주와 건설회사의 폭리를 밝히고, 적절한 이익을 유도함으로써 공익과 장래의 주거이익을 보전하고,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다.

본 보고서는 특히 재건축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강남개포동주공아파트' 와 같은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가옥주의 이익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포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 용적률을 177%에서 190%로 완화시켜 줄 경우, 증가하는 아파트연면적은 2301.3평에 달한다. 2007년 말 현재 3단지의 평당 평균가격을 6387만원으로 가정한다면 1469억 8천4백3만원의 전체 수익이 증가한다. 3단지의 가구수가 1160세대이므로 1세대당 1억2천6백7십1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는 평가 평균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대형평형일수록, 주변 시세가 높아질수록 수익은 증가한다.

연구· 개발내용

만약, 최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계획대로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각 아파트 세대당 재건축 이익은 2-3억대로 증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전반적인 집값상승으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은 용적률 규제를 통해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이익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초과이윤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확대 방식으로 공익을 위해 환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0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전망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과 관한 연구보고서임.

미국발 금융공황은 전 세계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히 금융공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공황상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미국발 금융공황은 일차적으로 금융메카니즘상의 문제점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미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축적 폭발된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성장론의 모순과 한계가 증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는 바로 군산 복합체 경제체제에 있다. 군산복합체 경제체제는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를 누적시킨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미국경제를 활성화시켜내는데 실패하고, 쌍둥이 적자의 재현,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사회적 복지의 축소로 인해 대중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성장하는 생산력에 비해 대중소비의 축소가 확대되면서 과잉상품이 누적되게 되고, 이것이 금융메카니즘을 통해 폭발한 것이 현재의 경제공황이다.

연구· 개발내용

미국의 금융공황은 한국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 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위기가 현재화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현실이다.

미국의 금융공황이 야기한 세계적 공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은 경제공황에서 벗어난다하더라도 자체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정치경제적 군사적 패권이 몰락해 나가는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경제공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성장이 아닌 새로운 진보적 대안사회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의 종속적 관계를 타파하고 자주적 경제구조를 모색해 나가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외환보유고의 덫

■ **연구방법** : 외부천문가

연구·개발내용

올해 2월에 94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5월에는 1,000원을 넘어섰고, 9월에는 1,100원을 넘어선데 이어, 10월 들어서는 어느새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상승률로 따지면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환율 상승률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세계 최고라고 한다(이데일리, 2008.10.9).

왜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변동성도 커진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 탓이다.

어떤 정책의 잘못이 있었는가? 멀리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무제한적인 개방정책,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금융주도 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다. 가까이는 외환보유고 관리 정책의 잘못이 있었다. 이것이 최근의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외환의 수익률이 국내 자산의 수익률보다 높지 않으면 수익률 차이에 의한 손실(이차 손실)이 발생한다.

연구· 개발내용

지난 몇 년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 손실은 미래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은 외환보유고가 대외자산과 대외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외평기금, 대외자산, 대외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외 민감도, 환율의 변동성, 대외 투자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비해서 외평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외환보유고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11월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세 분석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오바마 당선의 정치적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미국인들은 비로소 인종의 장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 인종문제의 프리즘을 벗어나 모든 계급 계층들이 이제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대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바마의 당선은 흑인대통령시대를 열었다는 것 말고도 더욱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당선은 '탈신자유주의 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 포성이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사이의 투쟁에서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승리이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정치적 파산선고이다.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정리하면,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대중적 분노의 폭발, ○ 미국의 보수적 정치지형의 퇴조와 대중들의 정치적 적극적 고양 ○ 광범한 대중들의 적극적 선거참여와 오바마 지지라고 말할 수 있다.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시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대중적 심판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 개발내용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외교노선과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완화해,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협력주의 노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분적 폐기와 수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대북정책, 한미군사동맹정책, 대한통상무역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중에서 한미군사동맹정책과 대한 통상무역에서는 큰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의 폭과 방향 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확산 방지에 최우선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북 적대정책을 대북 관여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11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통상

■ **주　　제** :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한테러지원국 해제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전개방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임.

미국은 10월 12일 0시(한국시간) 대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발표 하였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대선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결정이다. 미국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압박이 주효했다는 것이 미국내 언론의 분석이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부시행정부가 부랴부랴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보수강경론자였던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방침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북한의 반격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의 정치경제적 의의는 매우 크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대북경제제재의 근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북한이 서방세계와 경제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의미와 함께 주목할 것이 정치적 의미이다.

연구· 개발내용

이 조치로 인해 북미관계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핵심장애물이 제거됨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의 주춧돌이 놓이게 됐다. 사실 대북적성국 교역금지법과 테러지원국에 대한 경제재재 조차도 대북경제제재 수단으로서 유효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두 개의 핵심적 경제제재 수단이 없어진다면 북미양국은 관계정상화를 향해 빠르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10.3합의(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이행이 완료되고 다음단계(핵폐기 단계)로 나가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대북적대정책 문제(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주의제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안전보장이 확고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핵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안전보장문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북한을 겨냥한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재편 또는 해체하는 문제 등 각종 군사적 현안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북미관계가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화거부정책 탓이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북미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결국면은 해소될 수 없게 되고,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의 상황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계기로 삼아 남북화해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이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사법윤리

■ **주　　제 :**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결정에 대한 분석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종부세에 관한 2008년 11월 1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과세부분이 분리돼 이중과세가 아니며, 중과세특례도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측면이 있고, 그로인해 원본의 일부가 잠식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본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을 수긍하면서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 36조의 혼인의 자유·가족의 보호 조항과 35조의 주거기본권·국가의 조정의무에 대해 균형적인 해석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대가 향유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입법례에서 보듯이, 세대별 합산이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 개발내용

헌법재판소는 1가구 장기보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1가구 장기보유라도 명백하게 고가의 고급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와 투기억제라는 조세목적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종부세는 일부 개선조치를 전제로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서 유지돼야 한다. 부부별산제를 고려한 개인별과세를 한다면 종부세 기준을 좀 더 낮추고, 장기보유의 경우 누진폭과 누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세청이 직권경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일부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전체 종부세 납부자에게 확대하여 환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지방교부금으로 조성될 종부세의 세수를 고갈시키는 행위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2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국방

■ **주　　제 :** 09년 통일정세와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09년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

2009년도 한반도 정세(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변화양상에 의해 크게 규정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북미관계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이지만 북미양국의 기본목표와 전략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대결 또한 결합될 것이다.

북한의 대미전략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단계적 접근,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포괄적 협상전략, 선군에 기초한 대화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북미군사회담을 목표로 해 움직일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방어적 평화공존전략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유지에 기초한 북미관계정상화전략에 따라 대북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관여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미양자는 상호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하려는 입장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양자의 전략적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대화와 협상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미대화와 협상을 훼방하는 조건에서 북미대화와 협상은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 개발내용

09년 한반도 정세분석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너무 큰 기대와 환상을 갖는 것이 위험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09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은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더욱 더 대결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6.15, 10.4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화해협력 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아래로부터 대중적 강제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주거기본권 측면에서 본 임대아파트 정책

■ **연구방법** : 외부 보고서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주거기본권 실현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기본권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적 접근을 제기하면서, 주거기본권보장법과 같은 총론적 접근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과 같은 각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법의 일부 일반조항을 제외하면 집단별 주거복지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보고서는 건설회사의 이윤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주택분양제 또는 주택투기와 같은 가수요를 조장하여 주택격의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택분양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극빈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실제 가구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형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

연구· 개발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없이 30년간 임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택 소요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전제한 계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분양자격이 있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방식이외에도 주거비 지원의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수혜대상자의 소득수준,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주거비 지원 이외에도 계약갱신을 통한 주거기간의 안정화, 분양전환의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분양전환가격 등도 검토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단지배분이 필요하며, 특히 최저소득 수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수준의 가정들이 주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버블의 위기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보고서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주거기본권의 시각에서 진보적 주택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작업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최근 부각된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을 전제로 우리부동산버블의 위기를 진단한다. 그러면서 부동산버블의 원인으로서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으로서 주택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주기기본권을 전제로 한 진보적인 주택정책을 제시한다.

부동산버블은 경기를 부양하려는 공급중심의 주택정책과 이를 해소하려는 절반에 육박하는 전세제도, 소득연동대출제한제도 등으로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으나 부동산거품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형 기획부동산 개발투자사업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경우 수익성악화와 과도한 금융부담으로 인한 위기가 주택분야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 개발내용

부동산거품은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전국적인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 실현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거품은 일정부분 꺼져야 하며, 경제안정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택정책으로서 1가구 1주택의 강화, 개발이익의 환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행정자치

■ **주　　제** : 기초 지방의회 선거제도 발전방안 모색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지방자치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주권을 지방의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 즉,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또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말한다면 지방자치란 국가적 차원의 큰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 수준에서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이를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우리 지방자치의 세 가지 큰 문제점은 첫째,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선거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지나치게 낮다. 지방선거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선거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지방자치는 피선거권의 관점에서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기득권연합의 과점현상이다. 셋째, 지방자치의 유형과 관련,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의 정신을 배제한 채 단체자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결론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 자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개발내용

실제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기득권 세력이 지방권력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방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토호들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합법적 지배세력으로 재탄생하여 지방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루소가 통찰한 바 있는, 대중을 선거때만 주인으로 만들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노예로 전락시키는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라면, 민주주의란 단지 법, 제도의 구비, 운용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관계, 권력관계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법, 제도의 존재 의미는 실제 이러한 관계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에 좌우된다. 즉 주권자인 대중의 자기지배 실현이 진전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준거인 것이다. 이것이 진전될 때 법, 제도는 더 의미있고 생기있는 것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려 한다면, 주민의 대리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스스로 주체로 세우는데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혹은 국민, 혹은 민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의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해석 해 내는 것이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12월

■ **연구분야 :** 지방정치

■ **주　　제 :**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총론

■ **연구방법 :** 외부보고서

연구·개발내용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운동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와 민중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보적 민중들의 정치적 결사체인 우리 당은 주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서 나가는 과정을 선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집권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 당의 집권이 다양한 정치세력 중 하나의 집권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권력의 창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권력을 갖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의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지역과 중앙에서 안정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진보정당은 모두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통해 집권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집권을 통해 구현해야 할 대안적 진보 정치체제의 창출은 없는 주민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주민운동을 대안정치 실현 운동으로 상승시켜 지역에서의 진보적 민중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운동은 운동 주체도, 운동형식과 방법도, 출발의 동기도 제각각이지만, '정치권력의 주민권력화' 라는 측면에서 크게 의제형성, 주민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개발내용

운동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라도, 그 시작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 의제의 형성에서 시작된다. 먼저, 외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이것이 조직화된 집합행동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민을 조직해 나간 경우다. 또한 주민운동은 대체로 반대하던 정책을 철회하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한다. 공동체운동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주민운동이 발전하여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게 되는 단계다. 공동체운동과 주민운동의 질적 차이는 주민운동의 경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한 반면, 공동체 운동은 구성원의 사람의 양식,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운동은 단순한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로 개입하는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재조직을 의미한다. 결국 공동체운동을 비롯해 진보적 지역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자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주민자치는 공동체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된 다양한 사회적 힘들 간의 결합과 진보적 민중역량이 결집된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2010년 지방선거의 전략적 방향은 먼저, 다양하게 발굴된 지역의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민운동이 거대한 흐름으로 결집되는 그 지점에서 확인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주민자치운동을 정치운동으로 상승시켜 내야 한다. 셋째, 주민운동이 전무하거나 주체 또한 부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개별 사업의 문제나, 혹은 국가차원의 문제에 치중했던 기본 진보적 조직 역량의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행정자치

■ **주　　제 :** 창원지역 지방의제 성공사례연구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본 보고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의원 및 당직자 면담을 통해 선거전략 전술 및 중장기 집권전략을 연구하고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손석형 도의원은 전술의 폭으로서 실력과 사상의 양 측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한 가운데 지역별 등급선정 등과 같은 사전준비를 통한 과학적 선거를 강조했고, 당선 후에는 대중적인 정책 마인드를 권유하며 조직적 힘을 키우고 상대를 안고가야 함을 피력.

이종엽 시의원은 예비후보자 때부터 평상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형상화, 각인화 시키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역량, 헌신성을 인정받는 전략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이라는 회의, 의구심을 담배자판기 운동, 학교급식, 맞벌이 아이들 문제를 통해 오히려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재선전략으로서는 밑으로부터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통장이 후보를 면담해서 중립적 자세를 표명토록 하면서 평상시 항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고, 진정한 주민을 감동시키는 주민접촉을 지향함.

연구· 개발내용

중장기 집권전략으로서 손석형 도의원은 발로 뛰는 부지런한 생활정치를 통한 원내 의정활동과 정세파악에 따른 컨셉으로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에서 제 역할을 하는 '허리론' 을 피력함. 이종엽 시의원은 의정협의체 구성해서 당과 조율을 하며 시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당과 결합해야 함을 피력함.

평가 및 향후과제로서는 중앙당, 도당, 시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과학적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지역적 유형별 사례연구의 필요성과 선대본 사무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 밖에 지역 당직자들은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는 전략을 택했으며, 현장의 선거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는 것, 지속적 활용으로서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야 함을 언급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12월

■ **연구분야 :** 국방

■ **주　　제 :** 진보적안보개념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현실주의 안보개념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진보적 안보담론은 설자리가 없었음을 반증.

보수세력으로 진보적 정권이라고 평가받았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의 안보정책 역시 현실주의에 기초한 안보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진보적 안보담론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한 안보정책은 첫째, 국제질서의 무정부성을 전제로 생존을 본질로 하는 국가의 행태를 규정하려다보니 모든 행위가 "힘의 논리"로 귀결된다는 점, 둘째, 국가이익은 충돌하기 마련인데, 현실주의 정치이론은 충돌을 회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현실주의 이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국가간 무한군비증강은 국가의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연구· 개발내용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정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관과 한국 자체의 안보관이 중첩됨으로써 더욱 파괴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해왔음. 그 결과 첫째, 안보딜레마에서 헤어날 수 없었으며, 둘째 남북간에 충돌회피 노력이 부재했으며, 불필요한 군비지출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안보정책은 3대 절대화 신화와 3대 모순으로 압축할 수 있음. 3대절대화는 안보절대화, 동맹절대화, 군비증강 절대화이며, 3대 모순은 동맹모순, 군비증강 모순, 주변국과의 협력 부조화임.

이같은 평가속에서 진보적 안보개념은 국가위상의 재구성, 안보요소(국력)의 재구성, 국가이익의 재구성, 안보전략의 재구성을 요구함. 국가위상은 힘있는 중립국을 지향해야 하며, 군사력 위주의 안보요소는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을 우선에 두고 군사력을 배치해야 함. 또한 국가이익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이익과 더불어 국력 개념의 국가이익, 민족이익이라는 특수한 국가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안보전략은 군사안보일변도에서 인간안보로의 확대, 위협일변도에서 위협과 위험의 구분, 동맹편승전략에서 비동맹다자주의전략, 군비증강노선에서 평화군축 노선으로 전환되어야 함.

PART _ 7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72 성진텔빌딩 6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3 名	-	인턴 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166,000	0	166,000	92,140	73,868	-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2008. 9. 1 ~2008. 12.31	사회·고용정책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외 주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종교차별 금지을 위한 토론회	2008.9.1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종교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책임있는 고위공무원들의 종교 편향적 발언과 행동이 촉발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종교차별 금지' 와 관련한 법안을 신설 혹은 보완해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종교 자유와 종교간 평화와 상생에 대해 좌담회를 갖고, '종교차별법안 발의' 의 필요성을 검토 조명함	
첫눈에 반한 중소기업 포럼	2008.9.26	충남대 모의법정	중소기업강국의 문화적 기반: 다양성의 인정과 장인정신의 중요성	지역대학의 우수인력이 지역중소기업의 취업에 호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요인임. 첫째, 지역문화임. 작은 것을 중히 여기는 문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지역문화가 필요. 둘째, 기업문화임. 인격존중하고, 학습발전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CEO의 인간중심 경영, 창조경영이 중요함. 영화감독과 중소기업 CEO가 만나 구체적 경험중심으로 문화의 중요성, 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 봄	공동 주최

개최명	일시(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 연구소 개소기념 토론회	2008.10.30	중소기업 중앙회관	창조한국당의 지향점	'사람이 희망이다' 는 무슨 뜻인가? '적극적인 의지' 와 '다양한 주장 '을 내포하고 있음. 신 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방법론 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창조당 만이 이러한 시대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음. 창조당이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자기 철학을 적용하고 있고, 당의 지향점은 경제민주화임.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2008.11.17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오바마 집권이후의 국제질서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러 관계의 협력 분야를 살펴봄. 첫째,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부분이 많을 것임. 둘째, TSR-TKR 철도 연결사업,러시아와 북한의 전력망 연계사업,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주목을 받고 있는 캄차카(Kamchatka) 해상광구 탐사사업 등을분석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참여할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12년 APEC 정상회담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등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행사에 한국이 인프라 및 주변 시설 건설에 적극 진출해야 함.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 전략 부재의 한국에게 중요한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연구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음	

개최명	일시(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첫눈에 반한 중소기업 포럼	2008.11.21	충남대 경상대 대형강의실	(중소기업 강국의 전략 I) 중소기업강국 독일의 경쟁력의 원천: 사회통합의 구조	지역대학의 인재가 지역중소기업에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없이 쉽게 진입하는 중소기업강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 봄.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의 혁신이 연동되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사회적 구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독일산업현장에 밝은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공동 주최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기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당원연수를 위한) 사랑방좌담회	2008.12.9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0-502	'사람이 희망이다' 는 무슨 뜻인가?	
(당원연수를 위한) 사랑방좌담회	2008.12.22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0-502	'사람이 희망이다' 는 무슨 뜻인가?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08.9. 1~ 2008.12.31	인터넷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지역 산.학.연.관.민 상생공동체 정책 을 홍보함. 정책대안으로 첫째, 각 부처별 산학연 협력정책 간 연계성 강화. 둘째,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수행. 셋째, 산·학·연·관·민 신거버넌스. 넷째, 대학 학부과정 커리큘럼의 다양화, 모듈화를 내용으로 함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08.10.30	토론회자료집	창조한국당의 지향점	자체발간	200부 토론회 현장배부 및 향후 당원연수 時 활용	
2008.11.17	토론회자료집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자체발간	130부 토론회 현장배부 및 향후 당원연수 時 활용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후원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연구분야 :** 사회·고용정책

■ **주　　제 :**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 **연구방법 :** 외 주

연구· 개발내용

I.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발전모델

1. Mega Trends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당면과제
3.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4. 자본주의 국가발전모델의 성과 및 평가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발전모델의 모색
6. 사람입국 발전모델 7. 핵심 정책 Agenda

II. 일자리 창출과 사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위기극복 방안

1.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필요성
2. 사람입국 발전전략
3. 사례: 지식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 기회 및 장애요인
5. 사회적 대타협의 추진
6. 사람중심경제와 토건경제

연구· 개발내용

Ⅲ. 한미FTA 대응전략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중심으로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ISD)의 의미
2. ISD 관련 협정내용
3. 쟁점
4. 사례
5. 시사점 및 대책

Ⅳ. 부동산 정책 개혁 방향

1. 부동산 정책 현황과 문제점
2.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
3. 입법과제

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 전략

1. 일자리 나누기 필요성
2. 일자리 나누기의 목표
3. 국내외 사례 -
4. 일자리 나누기 전략
5.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책 과제
6. 사회적 대타협 추진 전략
7. 사회적 대타협 로드 맵

별첨I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조직 체계와 운영방향
별첨2 : 폭스바겐(Volkswagen) 일자리 협약 사례 (1993년)

PART _ 8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미래상상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801호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6	0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142,986	3	142,989	97,630	45,359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10. 10~10. 20	환경노동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평가	자체	
10. 20~11. 20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세계사의 전환기 앞에서 진보좌파의 과제는?	자체	
10. 20~11. 28	보건복지가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표준안 마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동	
10. 21~10. 31	농림수산식품	먹거리 안전	자체	
10. 23~11. 10	법제사법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평가와 대안	외부전문가	
10. 26~11. 1	보건복지가족	2009 보건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방안	자체	
10. 28~11. 20	보건복지가족, 행정안정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증가추이비교	자체	
10. 31~11. 7	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공공부문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자체	
11. 1~11. 11	국토해양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자체	
11. 3~11.11	교육과학기술	오바마 교육정책 검토	자체	
11. 15~12. 10	행정안전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응방안	외부전문가	
11. 20~12. 5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경제위기대책①-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정태인 교수와 공동	
11. 25~12. 8	기획재정	부동산부유세 도입방안	자체	
12. 1~12. 5	교육과학기술	임금과 대학등록금 검토	자체	
12. 10~12. 30	환경노동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 일자리동맹, 복지동맹을 중심으로	자체	
12.13~12.16	교육과학기술	일제고사와 국제학업성취도 검토	자체	
12. 20~12. 30	행정안전	행정체제개편 대응	자체	
12. 26~12. 31	교육과학기술	2009년 교육분야 상황 전망	자체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1. 20.	이룸센타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대책 마련	2009 복지예산안 및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과 대응방향 모색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기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현지교육	10. 15.	부산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20.	대전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22.	서울	사회복지정책	여의도 이룸센타
현지교육	10. 24.	경남 창원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26.	전남 순천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27.	충북 청주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29.	경기 수원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30.	광주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30	명동 카톨릭회관	우리나라조세재정현황과 정부 감세안의문제점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현지교육	10. 31.	인천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31.	서울	장애인 소득보장	여의도 이룸센타
현지교육	11. 5.	경기 의정부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1. 6.	서울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1. 8.	서울	장애인기초연금 강의	노들장애인야학
현지교육	11. 10	전주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지자체 재정 현황과 문제점/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감소 추이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초청강연

교육·연수명	일 시(기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지방당직자교육	11. 13.	창원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1. 13	아산 근로복지회관	우리나라조세재정현황과 정부 감세안의문제점	초청강연
현지교육	11. 14.	서울	빈곤예산 강의	빈곤사회연대
지방당직자교육	11. 22.	제주	복지재정	제주시당
현지교육	11. 26.	부산	장애인소득보장 및 해외사례	부산 장애인교육권연대
현지교육	11. 26.	천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의	곰두리봉사회
지방당직자교육	12. 3.	대전	복지재정	대전시당
현지교육	12. 9.	대구	자립생활조례 강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지교육	12. 12.	대구	복지시설 개선방안 및 장애인정책 흐름과 과제	청암복지재단
현지교육	12. 1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강당	국회통과 감세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초청강연
현지교육	12. 19.	경상남도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조례 강의	광역도당 주최
정예당원교육	12. 20	천주교노동사목회관강당	지자체 재정 현황과 예산 분석 방법론 교육	광역시당 주최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0. 24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학교가 학생성적의 90%를 좌우한다고?”	
10. 28	언론사	기자회견	2009 정부 복지예산 분석 및 문제점	
10. 29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국제중 설립계획은 국가기밀문서?!”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0. 31	레디앙	원고 기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합니다”	
11. 7	YMCA 정기간행물	인터뷰 등	식품안전과 대책	
11. 10	홍보 인쇄물	당원 배포	식품첨가물위해성 당원 홍보	
11. 12	건강세상네트워크 월간지	원고 기고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 분석 및 문제점	
11. 14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11. 15	경희의료원노조 월간소식지	원고 기고	2009 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방안	
11. 24	레디앙	원고 기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할까?”	
11. 25	한국장총 주간정책리포트	원고 기고	2009 정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및 문제점	
11. 25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2500명 짜르나”	
11. 29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와 원수 졌나”	
12. 1	레디앙	원고 기고	“3불 폐지, 당신의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12. 3	프레시안	지상 좌담회	종부세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과제	
12. 13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또 일제고사 본다. 이번엔 공정택”	
12. 21	KBS 라디오정보센타	패널 참여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감소 대책 좌담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0. 20	백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자체발간	500부, 당원교육 및 홍보 자료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 23 ~10. 24	거제·사천·통영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현지조사
10. 28 ~12. 15	이룸센타	복지예산 분석과 공동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	시민사회단체와 5차례에 걸쳐 공동 간담회 개최	복지공동행동 주최
10. 29	서울시별관 대강당	대안상수도 토론회	대안상수도 토론	지정토론
11. 6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우리복지시민연합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	지역복지운동의 전망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최
11. 14	국민대학교	사회경제학계 학술대회	이명박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토론회	지정토론
11. 18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공직사회 변화	토론회 토론자 참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주최
11. 26	대구 덕영치과 강당	감세로 인한 대구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예산 변화 토론회	주제발제	대구 진보신당, 민주당, 시민단체 합동 토론회
12. 09 ~12. 10	포항·고령·경주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현지조사
12. 30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비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이명박정부 하 복지 정세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10 ~ 10. 20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평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에 비추어 그 미래의 일부를 전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

우선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 임기 동안에도 특별히 새로운 노동정책이 시도되지는 않을 것. 그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모든 내용이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발표되었기 때문. 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제시해 둔 정책 안들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노정 간, 노사 간 대결이 보다 첨예해 질 수는 있을 것. 이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제는 조직된 노동운동 내부의 혁신일 것임.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강력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그 하나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미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미 그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 노무현 정부 이래 빈발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극한적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개연성이 큼. 또 전체 사회의 양극화와 더불어 이 투쟁은 사회적 지지를 보다 광범하게 확보할 것으로 보임.

연구· 개발내용

다음으로 영국의 신자유주의와도 비교해 볼 수 있음. 영국에서 그것은 사민주의의 계급타협 정치에서 '노동의 실패' 를 기반으로 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한 결과였음에 반해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 조직노동 중 일부인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와 자본의 여론 동원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부분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음. 그러나 영국과 비교하면 그 헤게모니는 그 양과 질 모두에서 상당히 제한적. 그것은 민주노조의 조직적 대표성이 취약한 점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조직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 일반을 배제하는 보다 가혹한 노동정책이라는 사실 때문.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0 ~ 11. 20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 **주　　제 :** 세계사의 전환기 앞에서 진보좌파의 과제는?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대중을 지배해온 한국 사회의 경제 이상은 '선진국 따라잡기' 였음. 달리 말하면, '번영' . 이제 와서 진보 좌파가 이 흔들리는 이상을 떠받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음을 논하기 이전에 너무 무모해 보임.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자유화 모두 저마다의 세계사적 배경 아래서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우리는 대혼돈의 시대라는 또 다른 시대 상황 앞에 서 있음. 어떤 진공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난처한 무대 배경 위에서 한국 사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제 우리의 경제 이상은 '소박하지만 보람 있고 안정된 삶' 의 보장이어야 한다고 주장. 부자가 되기는 이전보다 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은 없는 경제 생활. 진보 좌파는 지금부터 이러한 이상을 확산시키고 그 지지 세력을 규합해야 할 것임.

물론 이러한 경제 이상은 시장이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한국 경제 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임.

연구· 개발내용

지금부터 새로운 요소들을 싹 틔우고 키우는 일을 시작해야 함. 이 새로운 요소들은 장기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대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 역할을 할 것임.

이것은 일종의 혼합 경제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진보 좌파가 추진할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0 ~ 11. 28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장애인자립생활조례 표준안 마련

■ **연구방법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동

연구·개발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자립생활지원 조례 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조례의 구성 : 4장 19조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립생활지원서비스 및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장 활동보조서비스
- 제4장 주거서비스
- 부칙

3. 자립생활지원 조례 내용

1)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규정 및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7가지 영역으로 제시
   - 신청 방법 제시
   - 시설생활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기준 마련

연구· 개발내용

2)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
-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에게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 도서 · 벽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3) 주거서비스
- 공공주택 물량 우선 공급 제시 및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 자립주택 기준 마련 및 지원
-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무주택 세대주에게 자격 부여 방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1 ~ 10. 31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먹거리 안전 – 수입식품의 안전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식품내 첨가물의 안전성 문제 – 식품내 화학첨가물의 종류와 인체영향 **2.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의 문제** – 반복되는 정부 대책 **3.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문제** –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4. 수입식품의 국가별 부적합 분석** – 식약청의 현지 실사와 국가별 부적합률 분석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3 ~ 11. 10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주　　제 :**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평가와 대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헌의 역사를 통해 개헌의 조건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민주화 이전에는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개헌이 진행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개헌이 아니라 정개개편과 정권교체, 헌법해석 및 법률 개정 등 '의사개헌'을 통해 헌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음. 촛불시위는 기존 헌정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같이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개헌에 대해서는 전면개헌론과,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불리는 권력구조 중심 개헌론, 개헌 반대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현실적인 개헌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임.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음. 즉,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어떤 개헌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차 개헌 이상의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받기도 어려움.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의 마련보다는 시민사회의 개헌안을 검토,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6 ~ 11. 1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2009년 보건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2009 복지재정 분석

- 2009년 정부 예산안 대비 보건복지예산안 시계열 분석 및 문제점
- 2007년 대비 2008년 발표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분석 및 문제점

2. 200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예산 분석

- 사회복지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 감액사업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정부 발표 계획과의 비교 분석 및 문제점
- 국정 철학에 따른 비교 분석 및 문제점

3. 200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보건의료예산 분석

- 09년 보건의료분야 예산 현황
- 09년 보건의료분야 예산 문제점 및 총평

연구· 개발내용

4. 2009 계층별 예산 분석
   - 빈곤층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아동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노인 예산 현황 및 문제점

5. 11월 3일 제출된 2009 정부 수정예산안 분석

6. 개선 방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8 ~ 11. 20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행정안정

■ **주　　제 :**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증가추이비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배경분석

- 정부 감세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09년 사회복지 예산 개요 분석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현황 분석

2. 주요 분석 내용

- 38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2012년까지 중앙정부 지출 계획 분석과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액의 추정
- 각 시도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액과 지방교부세 증가액과의 비교

3. 결론과 정책 제언

- 현재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는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을 감당할 수 없음
- 감세안 철회, 국고보조율 제고와 차등보조율 확대,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사업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31 ~ 11. 7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 **주　　제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안 배경

-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
- 2009년 최악의 실업대란에 대비한 고용 창출 기제
-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비판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 사회서비스 확대안 : 생애주기별로 사회서비스 확대
- 전달체계 개선안 : 직업훈련 연계 방안 /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타 설치

3.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안의 주요 특징

-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방적 투자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변화
-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축
- 사회공공성 강화
- 적정한 임금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연구· 개발내용

4.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세부 내용

-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 방안
- 보육서비스 확대 방안
- 방과후 서비스 확대 방안
-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
- 간병서비스 확대 방안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방안
-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방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1 ~ 11. 11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규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수도권 집중 현황 – 산업과 인구를 중심으로 2.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현황 분석 – 토지이용 변화 및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공원 비율 비교 3. 수도권 신도시 인구 증감과 교통량 증감 – 신규택지 개발 지역의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3 ~ 11. 11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오바마 교육정책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오바마의 주요 교육 공약의 내용 및 의미 검토
- 미국 NCLB 수정, 영유아교육 집중 투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지원 위주 교원정책 등
-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과 비교

오바마 이후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은 결과와 경쟁이 아니라 과정과 지원 위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15 ~ 12. 1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욕적인 행보와 달리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진영의 지방자치 관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여야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보고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 진보신당과 진보세력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20 ~ 12. 5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 **주　　제 :** 경제위기대책①-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 **연구방법 :** 정태인 교수와 공동

연구·개발내용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 (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을 투입해야 함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금융 구조 대수술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조성 필요
-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방식 대신 국회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구제 시 반드시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에 따른 대수술을 동반해야 함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①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③ 서민 금융기관 건설 ④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 (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을 투입해야 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25 ~ 12. 8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부동산부유세 도입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1. 현행 종합부동산세 현황과 문제점 정리 2.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판결 결과와 해당 판결에 대한 평가 3.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평가 4. 이른바 국토보유세에 대한 평가 5 종부세 개정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안 – 보유부동산 전반에 대한 합산과세 방식으로의 부동산 부유세 도입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1 ~ 12. 5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임금과 대학등록금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1970년대와 2000년대의 대졸 임금과 대학등록금 비교
- 교육정도별 임금격차의 추이 및 대학등록금 비교
- 계층별 대학등록금 경감 방안 구안

대졸 임금의 상승폭에 비해 대학등록금 증가폭은 2배 정도임.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에 비해서도 대학등록금과 고교등록금의 격차는 상당함.

소득계층별로 무상장학금, 소득연계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10 ~ 12. 30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일자리동맹, 복지동맹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일자리동맹 정책〉

①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임금 손실 일부를 국가지원으로 보전

② 총고용 보장 : 정규-비정규 일자리연대
-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금지) 선언 및 1사 1조직 실행방안 마련

③ 비정규노동 정규직 전환 지원정책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1인당 월 33만원, 2년 시한)

④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건 형 일자리사업 반대

⑤ 비정규법 개악반대 투쟁
- 비정규 사용기한 연장 반대, 파견노동 확대 반대

연구· 개발내용

〈복지동맹 정책〉

⑥ 실업수당 신설 및 실업급여 개선
- 고용보험 미가입자(청년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미 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수당제도 도입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⑦ 임금소득 연대정책 : 최저임금제도 개선, 제도 개악 반대투쟁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취약기업의 인상 차액 일정 기간 지원(고용보험)

⑧ 복지소득 연대정책 : 저소득 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저소득계층에 보험료 지원, 정부-기업-고소득 가입자 공동부담

⑨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및 장애연금, 소득 차등 방식 대학등록금제 도입 등
- 기존 제도 확대, 내실화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13 ~ 12. 16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일제고사와 국제학업성취도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국제학업성취도에서 일제고사 보지 않은 세대의 성적 검토
- 일제고사로 경쟁시키면 교육경쟁력 제고되는지 검토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일명 '유인종 세대' 또는 '새물결 세대'가 최근 네 차례의 국제학업성취도 시험을 봄. PISA와 TIMSS 결과에 따르면, 유인종 세대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따라서 일제고사 등으로 교육경쟁력 제고한다는 명분은 다소 부적절.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20 ~ 12. 3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행정체제개편 대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2008년 말, 국회는 'MB입법' 을 두고 여야대치 상황이 2월까지 예정. 이후 여야대치 국면이 끝나는 즉시 행정체제개편은 쟁점이슈로 급부상할 수 있음. MB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으로 혼란만 초래.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 민주당 역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자기 보신의 정치적 행보.

행정체제개편은 국민이 참여한 민주적 의사소통과 결정과정 보다는 이를 배제한 정치사회만의 논의. 진보진영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천명, 풀뿌리 강화론을 대안으로 제시.

【별 첨】

연구· 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26 ~ 12. 31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2009년 교육분야 상황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개발내용

-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추진 경과 및 의미 검토
- 2009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및 한국교육의 상황 전망

2008년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기. 이명박 정부 교육공약의 대부분을 과제로 설정하였고, 대부분 실현. 2009년은 전환된 시스템 운용의 첫 회전 시기에 해당함. 즉 안착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취약점은 개인의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책들 중에서 억압적인 요소, 지점이 잘못된 요소,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 해당하는 것들임.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2009년 10월 일 인쇄
2009년 10월 일 발행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백제길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화 : 02-523-6486
홈페이지 : www.nec.go.kr
편집인쇄 : 대종문화사(02-2277-8802)

<비매품>